

Ⅲ. 애국계몽운동

1. 애국계몽단체
2. 애국계몽사상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4. 105인사건

Ⅲ. 애국계몽운동

1. 애국계몽단체

애국계몽운동은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하여 국권이 박탈되고 식민지화 정치작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시점에서 전개된 국권회복운동의 양대 조류－의병노선・애국계몽노선－의 하나로,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운동으로 이어지는 개화자강계열의 운동을 계승하여 전개된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한국민족의 국권박탈은 우리의 ‘실력’과 ‘힘’이 일본제국주의의 그것보다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인식한 사람들이 한국민족의 실력과 힘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 했던 ‘민력양성운동’으로, 이 운동을 이끌어간 사상은 개화자강사상을 계승한 애국계몽사상이었다.

이 운동이 전개된 부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언론・종교・문학・예술・학술・군사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것이었다. 분야별로 성과의 차이가 있긴 하였지만 총괄적으로 짧은 기간에 다대한 성과를 내어 민족역량을 크게 증강시킨 것이 사실이었고 이때 양성한 실력이 독립운동에 큰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이같이 계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그 후의 국권회복과 독립쟁취의 실력을 공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 민중의 자각에 의한 애국적 분발을 들 수 있으며, 또 하나의 배경으로는 애국계몽운동가들의 단체활동을 들 수 있다. 즉 개인 차원이 아닌 집단 조직으로 구국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중의 계몽과 실력 양성에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전국적 규모의 계몽단체가 설립되는 등 애국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은 1905년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 체결 이후 실제 국권상실의 상황에 직면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을사조약을 강요하기 이전 일본은 1904년 2월

對露선전포고 후 군사적 압력으로 한일의정서의 체결을 강요, 조인케 하여 한국을 사실상 보호국화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를 느낀 인사들에 의해 몇 개의 단체들이 이미 설립되고 있었다. 保安會(1904. 7. 13. 창립) · 國民教育會(1904. 8. 24) · 共進會(1904. 12) · 憲政研究會(1905. 5) 등이 설립된 것이다.

그러다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통감정치가 실시되면서 전국적 규모의 단체들이 등장하였다. 大韓自強會(1906. 4)가 그 대표적 단체였다. 그리고 이 단체가 해산한 후에는 大韓協會(1907. 11)가 설립되어 자강회의 형식적 후속단체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실제 당시의 계몽운동을 주도한 단체는 1907년 4월에 설립된新民회였다.新民회는 특히 다른 계몽단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무장항쟁에 대한 본격적 준비를 단행하여 계몽운동을 한차원 올려 놓은 역할을 하였다.

한편 전국적 규모의 단체를 뒷받침하면서 계몽운동의 대중적 · 전국적 차원의 활성화를 이루게 하여준 것이 당시 전국 곳곳에서 설립된 학회였다. 학회는 단순히 교육단체가 아니고 교육운동을 주요 내용으로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치운동 등 계몽운동을 전개했던 단체였다.

이 글에서는 먼저 초기의 계몽단체들을 간략히 소개하고, 전국적 규모의 대한자강회 · 新民會 등을 집중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그리고 대한협회, 각 지역의 학회들에 대해서도 정리함으로써 계몽운동기 운동의 주체였던 계몽단체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1) 초기의 계몽단체들

(1) 보안회

일제는 1904년 2월의 한일의정서¹⁾에 이어서 한국주찰군을 편성하여 한국

1) 의정서의 내용은 대한제국의 독립 및 황실의 안녕과 동양평화의 확립을 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국의 시설개선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허용, 군용토지수용권의 침탈과 한국인의 항일활동에 대한 일본군의 탄압과 치안권 침탈 등 대한제국의 국가주권을 크게 침탈한 것이었다.

을 무력으로 관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러일전쟁 중 대한제국으로부터 반드시 획득하여야 할 가장 수익 높은 이권으로서 한국의 전국 未耕地 개간 점유권을 획득하기로 결정하고 대한제국 정부에 이 이권의 허가를 강요하였다.

이에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애국적 지식인과 시민들은 보안회²⁾를 창립하여 맹렬한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안회는 1904년 7월 13일 서울 종로 백목전에서 宋秀萬・元世性・宋寅燮・沈相震・梁漢默 등을 중심으로 100여 명의 서울 시민들에 의해 매우 자발적인 방식과 과정으로 창립되었다.³⁾ 보안회 창립 당시의 주도층은 독립협회 계열의 개화자강파, 육의전의 상업자본가, 황국협회 계열의 부상, 기독교 교인 등 다양한 세력들이었다.

당시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국민의 정치적 발언이나 활동을 칙령에 의하여 엄금하고 있었기에, 보안회는 회의 목적을 “일본 미경지 개간권 요구 저지”로 명백히 한정하여 설정하고, 목적이 달성되는 날 즉시 단체를 해산하며, 운동방법은 집회 개최와 공한 발송으로 하고, 이를 관장하는 회장과 부회장만 두어 극히 한시적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해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보안회가 창립되어 일제의 미경지 침탈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시작하자 회원은 곧 3,000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격렬한 집회 시위와 가두 투쟁을 전개할 때는 약 5,000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이에 참가하여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안회의 민족운동이 전국적 배일운동으로 확대되기 전에 후퇴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마침내 미경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하였다.

이같이 보안회의 민족운동이 일본 정부와 대한제국 정부의 일부 각료들을 굴복시켜 일제의 전국 미경지 침탈을 저지하고 실질적으로 국토와 국권의 일부를 지킨 것은 민족운동사에서 참으로 획기적인 일이었다. 더욱이 이는 그 후의 애국계몽단체의 결성과 애국계몽운동의 효시가 되어 국권회복을 위

2) 보안회 관련 글은 다음과 같다.

신용하, <구한말 보안회의 창립과 민족운동> (《한국사회사연구회논문집》 44, 1994).

윤병석, <일본인의 황무지 개척권 요구에 대하여> (《역사학보》 22, 1964).

3) 《皇城新聞》, 1904년 7월 15일, 잡보 <宋氏演說>.

한 계몽운동의 길을 열어주었다.

(2) 공진회

공진회⁴⁾는 1904년 12월 3일 종로의 立麀都家에서 결성되었다⁵⁾. 그 해 8월에 독립협회 관여자들이 중심이 되어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결성하자 일진회에 불만을 가진 독립협회의 관여자와 러일전쟁 발발 이래 반일적인 활동을 해오던 보부상이 결합하였다. 그리고 그 결성에는 황실의 지원이 있었다.

공진회의 취지는 전국민의 문명화에의 동참과 아울러 법치국가의 실현에 있었다. 강령을 보면, “황실은 제도가 정한 범위내에서 통치권을 갖고 정부는 법률에 입각하여 정치를 행하고, 국민 또한 법률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⁶⁾

공진회의 활동은 회원의 계몽과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의 요구에 집중되었다. 회원에 대한 계몽활동은 국민계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정국의 추이에 관한 연설회의 형태로 이루어졌다.⁷⁾ 공진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정부에 대한 시정개선의 요구였는데, 공진회는 12월 7일 정치 전반에 대한 개선을 개진한 상서문을, 9일에는 국민의 원성이 높던 내장원 독쇄관의 소환요구상서문을 정부와 참정에게 제출하였다.⁸⁾

이러한 공진회의 시정개선요구는 제도적인 개혁이 아니라 탐관오리의 부패부정 척결과 궁정 잡배를 축출하자는 정도에 머물렀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은 일진회의 활동과 거의 같은 것이었고 또한 표면적으로는 일진회와 우호관계를 유지한 듯이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1904년 12월 24일에 일어난 고관 捉去사건을 보면 공진회가 정부에게 일진회 해산의 구실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공진회는 복술로

4) 공진회에 관한 연구는 최기영, <구한말 공진회에 관한 일고찰>(<세종사학> 1, 세종대, 1992) 참조.

5) 《皇城新聞》, 1904년 12월 5일, 잡보 <進明函會>.

6) 《皇城新聞》, 1904년 12월 19일, 잡보 <共進請願>.

7) 《大韓每日申報》, 1904년 12월 4일, 잡보 <共進會演說>・<共進會開>.

8) 《皇城新聞》, 1904년 12월 9・10・12일, 잡보 <共進上書> 및 10・12일, 잡보 <上書參政>.

출세한 대표적 인물인 전 법무대신 이유인이 12월 22일에 궁내부 특진관에 임명되자 이유인과 참서관 구분순을 노상에서 착거하여 죄상을 자복케 하고 그들을 평리원에 옮겨 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정부가 李儁 등 공진회의 간부를 체포하자, 공진회는 항의시위를 주도하면서 일진회가 시위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자신들은 시위를 중지하였다.⁹⁾ 정부에서는 시위를 주도한 공진회의 해산보다는 일진회의 해산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의 개입으로 정부의 일진회 해산시도는 실패하였을 뿐 아니라, 서울 지역의 치안마저도 일본군이 장악하였던 것이다. 이 같이 공진회의 활동은 계몽활동과 시정개선의 요구로 나타나지만 그 궁극적인 목표는 일진회의 타도였다고 할 수 있다.

1905년 2월 2일에 이르러 공진회는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되었다.¹⁰⁾ 이후 이준과 尹孝定 등 독립협회 관여자들은 보부상과의 관계를 끊고, 지식인 중심의 새로운 정치단체를 준비하였다. 1905년 5월에 설립된 현정연구회가 바로 그것이었다. 공진회의 해산은 개항 이래, 즉 19세기 후반부터 정치적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보부상 역할의 퇴조를 가져왔다.

(3) 국민교육회

한편 1904년 8월에는 국민교육회¹¹⁾가 결성되어 교육운동을 전개하였다. 국민교육회는 1904년 8월 24일 이준·李源兢·全德基 등을 중심으로 설립되었다.¹²⁾ 이미 개화자강파들은 1903년에 재조직된 상동청년회와 같은해 설립된 황성기독교청년회 등 기독교계열의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정치활동 등을 하고 있었으나 따로이 비정치적이며 교육전담 단체설립의 필요성을

9) 공진회와 일진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기영, 앞의 글, 90~99쪽 참조.

10) 《皇城新聞》, 1905년 2월 2일, 잡보 〈共會廢止〉.

《大韓每日申報》, 1905년 2월 4일, 잡보 〈공진회폐지〉.

11) 국민교육회에 관한 연구로 다음의 글이 있다.

신혜경, 〈대한제국기 국민교육회 연구〉(《이화사학연구》 20·21, 이화사학연구소, 1993).

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토〉(《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국근대사연구회, 1994).

12) 《大韓每日申報》, 1904년 8월 27일, 잡보 〈교육회치의〉.

柳子厚, 《李儁先生傳》(동방문화사, 1947), 115쪽.

느껴 국민교육회를 설립하였던 것이다.¹³⁾

설립 목적을 보면 “일반 국민의 교육을 면려하여 지식을 발달케 하되 완고의 폐습을 혁파케 하고 유신의 규모를 확립할 일”이라고 하여 일반 국민의 교육에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특히 정치에 관한 일은 일체 다루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¹⁴⁾

국민교육회의 구성원들은 독립협회·만민공동회에 참여하였던 인사들과 1902년의 개혁당 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들은 1904년 7월에 결성된 보안회, 같은해 9월에 결성된 협동회에서 활동한 바가 있으며, 또한 황성기독교청년회·상동청년회 등 기독교단체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 볼 때 국민교육회는 1904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축되어 있던 구국개혁인사들을 교육운동의 이름으로 다시 결집케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구국단체들의 본거지 역할을 했다.

국민교육회의 활동을 보면, 무엇보다 먼저 민족교육을 실시키 위해 학교설립에 주력하였는데 1905년 8월에 보통학교 普光學校를,¹⁵⁾ 1906년 9월에 보통학교 漢南學校를¹⁶⁾ 설립하여 민족의식을 고양시키는데 주력하였다. 1905년 12월에는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원양성의 단기 속성과정으로 국민사범학교를¹⁷⁾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그리고 문명적 학문에 응용할 서적을 편집하고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특히 1906년부터 일제가 교과서 편찬과 검정 등 업무를 감시하였던 것과도 관련하여 좋은 교과서 발간에 주력하였다. 1906년 6월 국사교과서 《大東歷史略》, 1905년 10월 국어교과서 《初等小學》을 발간하였으며, 그외에 《新撰小物理學》

13) 이 견해는 신혜경의 앞의 글에서의 견해이고, 최기영의 글에서는 국민교육회가 기독교와 적극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4) 취지서는 남아 있지 않고 설립목적은 회칙에서 확인된 것이다
《大韓每日申報》(국문), 1904년 9월 9일, 잡보 〈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
《皇城新聞》, 1904년 9월 19일, 잡보 〈국민교육회규칙의 대요〉.

15) 柳子厚, 앞의 책, 111·116쪽.
《皇城新聞》, 1905년 8월 22일, 광고.

16) 柳子厚, 위의 책, 117~118쪽.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25일, 잡보 〈한남개교식〉·1907년 7월 31일, 잡보 〈한남시현〉.

17) 《皇城新聞》, 1905년 10월 19일, 광고 〈사범모집〉·1905년 10월 20일, 잡보.

· 《新撰小博物學》· 《初等地理教科書》 등을 편찬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은 국민의 민족의식과 애국심을 각성시키는 국민계몽서로서의 구실을 하였다.¹⁸⁾

또한 대중강연과 저술활동을 통하여 국민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우선 회관내에 법학강습소를 세워 근대국민에게 필수적인 법률에 대한 강습을 통해 국민계몽활동을 하였다.¹⁹⁾ 한편 국민교육회는 그들이 바라는 국가정치체제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고 계몽하기 위해 《國民須知》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이 글은 서구의 정치체제·국가학에 대해 언급하면서 입헌군주체제에 대한 소개와 민권의 확대, 그리고 외세 특히 일본의 국권침탈에 대한 독립수호를 강조해 역설하고 있다. 이 글의 저술 목적은 우리 나라가 자주독립국이 되도록 국민의 자격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강국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입헌군주제를 제시하였다.²⁰⁾ 또한 각계 명사들을 초청해 정기연설회를 열었다. 연설회의 내용은 교육문제, 신학문 신지식의 습득, 법률, 국민의 의무, 위생문제, 종교 확립의 문제 등으로, 모두 국가의 부강과 확고한 독립을 위한 계몽적 내용이었다.²¹⁾

그리고 중요하게 국민교육회는 비정치단체임을 내세웠으면서도 국권회복운동에 앞장섰다. 1905년 9월부터 高等小學에 日人교사가 배치되는 일이 결정되고 경성소학교 교원들의 봉급을 일제히 감하여 교육비를 감축하는 조치가 내려지자 국민교육회가 앞장서 반대시위를 이끌었다.²²⁾ 이러한 국민교육회의 신학제 반대시위운동은 결국 일제로 하여금 일본어 교과서 사용계획안을 포기하게 하고, 학부고문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를 본국으로 소환케 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²³⁾

18) 이 영향력은 대단히 커서 당시 학부고문 幣原坦의 경우 보고서에서 “당초의 목적이 서책의 간행이었다 …”고 할 정도였다.

19) 《皇城新聞》, 1906년 5월 8일, 잡보 <美哉此學>.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17일, 잡보 <법학강소>.

20) 《국민수지》는 이미 헌정연구회에서 발간한 《헌정요의》의 자구를 몇자 바꾸어 간행한 것으로 이에 관한 내용은 헌정연구회의 설명에서 언급하겠다. 이에 관한 연구는 최기영, <한말 《國民須知》의 刊行과 立憲君主論> (《조항대교수화갑기념 한국사학논총》, 아세아문화사, 1992).

21) 신혜경, 앞의 글, 181쪽 참조.

22) 《皇城新聞》, 1905년 9월 27일, 잡보 <各學校閉鎖>.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1일, <奇書>(謙齋).

또한 1905년 11월 일진회가 한국은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국민교육회에 보냈을 때, 국민교육회는 그 보호청원서를 비난하면서 반송하였다.²⁴⁾ 한편 1905년 11월 18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국민교육회는 곧 반대시위를 전개했다. 그러자 국민교육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 기독교청년회 등도 곧 시위에 가담하였고,²⁵⁾ 시위는 곧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이준·전덕기·徐相八·車炳修 등은 상동교회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연명으로 보호조약 반대 상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반대 상소문을 갖고 11월 27일 대한문 앞으로 몰려갔다.²⁶⁾ 그러나 이들은 곧 일본 헌병대에 잡혀갔다. 그리고 국민교육회 회원인 전덕기는 을사5적 암살을 모의하기까지 하였다.²⁷⁾

일년 뒤 국민교육회는 을사조약에 반대해 자결한 七忠臣 추도회를 1906년 12월 2일 개최하여 다시 한번 을사조약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²⁸⁾ 또한 1907년 일제에 의한 고종 강제 양위설이 알려지면서 자강회·기독교청년회와 함께 서울 도처에서 연설로 민심을 고무하였는데,²⁹⁾ 이로써 시위가 확산되어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국민교육회는 단순히 교육운동단체로서가 아닌 계몽단체들의 근원지의 역할을 하였고, 실제로 국권회복을 위해 행동으로 앞장섰던 계몽단체의 하나였다.

(4) 헌정연구회

헌정연구회는³⁰⁾ 1905년 5월 중순에 李儒·尹孝定·梁漢默·심의승 등이

23) 《皇城新聞》, 1906년 6월 7일, 잡보 〈學政官辭退〉.

24) 《皇城新聞》, 1905년 11월 11일, 잡보 〈國民答函〉.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11일, 잡보 〈會長答辭〉.

25) 柳子厚, 앞의 책, 172쪽.

26) 金 九, 《白凡逸志》, 167~168쪽.

27) 鄭 喬, 《大韓季年史》下, (國史編纂委員會, 1957), 191쪽.

28) 《皇城新聞》, 1906년 12월 4일, 잡보 〈國民會追悼〉.

29) 柳永烈, 〈大韓自強會의 愛國啓蒙運動〉(《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아세아문화사, 1993), 165쪽.

30) 헌정연구회에 관한 연구로는 최기영, 〈헌정연구회에 관한 일고찰〉(《윤병석교수 화갑기념 한국근대사논총》, 1990 ; 《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아세아

발기하여 5월 24일에 창립되었다.³¹⁾ 중요 참여인사로는 발기인 외에 洪弼周 · 洪化基 · 李沂 · 李胤鍾 · 尹秉 · 金貞植 · 蔡基斗 · 宋鴻 · 徐丙轍 · 盧日壽 · 俞鎮衡 · 崔岡 · 金眞極 · 徐丙吉 · 金寧濟 · 金宇植 · 李源兢 · 韓啓昌 등이다.

이들 구성원들의 성격을 이전의 정치활동을 통해 분석하면, 이들은 대체로 독립협회-공진회 계열의 인사들이었으며 국민교육회의 관여자들이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들과는 달리 정치현실에 불만을 지니고 있던 유학자들로서 주로 상소를 통하여 정치개혁을 주장하였던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즉 홍필주 · 이기 · 이윤중 · 윤병 · 노일수 · 송홍 등 개신유학자들로서 전통적인 유학에 만족하지 않고 서양문물의 수용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인사들이었다.³²⁾

헌정연구회의 설립 동기는 이준 · 윤효정 등 발기를 준비한 사람들이 국권을 수호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정치력이 집결된 단체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느껴 설립을 추진한 것으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사들을 규합하였는데 보부상과의 제휴를 끊고 일진회와 대립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인물들을 제휴의 대상으로 하여 당시 시국을 우려하였던 유학자들과 연결을 갖게 되었다.

헌정연구회의 설립 목적은 세계의 대세인 입헌체제를 갖추기 위한 헌법준비를 위해 헌정에 관한 연구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입헌체제가 서구열강의 부강의 근원이므로 전제군주국인 우리 나라도 계절에 앞서 의복을 준비하듯이 대세의 변화를 예비하여 헌법을 제정하고 입헌정치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³³⁾ 이는 이미 독립협회의 개화론자들에 의하여 주장되었던 것으로 이를 다시 현실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하였던 것이다.

헌정연구회의 활동은 헌법제정을 목표로 그 예비작업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헌정연구회에서 준비하고자 했던 헌법은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

문화사, 1993). 이 글은 후자를 참조함.

——, 앞의 글(1992).

31) 《皇城新聞》, 1905년 5월 25일, 잡보 〈憲會員選定〉.

《帝國新聞》, 1905년 5월 27일, 잡보 〈憲政研究會〉.

32) 구성원의 성격은 최기영, 앞의 글(1990), 3~5쪽 참조.

33) 《皇城新聞》, 1905년 5월 16일, 잡보.

가. 당시 헌정의 형태는 民約(공화국)·國約(군주국에서 군민 공동)·欽定(군주국)의 3가지로 이해되고 있었는데,³⁴⁾ 헌정연구회가 입헌이라고 주장하는 ‘君民立約之憲’은 대체로 국약의 형태를 의미하면서도 실제 흙정헌법의 추구가 보인다. 이 점은 헌정연구회의 강령에 잘 드러나 있다.³⁵⁾ 이 강령에서 헌정연구회는 무엇보다 흙정헌법에 따른 군주의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각의 시정권과 민권의 확대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헌정연구회의 입장에 대해서, 일부의 학자들은 헌정연구회가 추구한 헌법이 이미 독립협회 단계에서부터 추구하여 온 입헌군주제, 즉 영국형의 입헌군주제라고 보고 있다.³⁶⁾ 실제 강령에서 제시된 내각의 시정권과 민권의 확대는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며, 강령의 세목으로 제시한 교육, 법률, 의회의 설치와 같은 내용도 민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정요의》의 저술과 발표도 헌정연구회가 국약의 성격을 띤 입헌군주제를 추구하였음을 말하여 준다는 것이다.

한편 일부의 학자들은, 헌정연구회가 추구한 헌법은 외견적 입헌군주제, 즉 개명군주제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협회의 입헌군주제가 개명군주제였고, 1900년대의 개화자강파들 역시 유기체적 국가관의 강조와 맥을 같이 하여 외견적 입헌군주제를 주장하였다고 보았다.³⁷⁾

34) 《皇城新聞》, 1905년 6월 15일, 기서 〈憲政鎖談〉.

35) 강령은 헌정연구회의 취지서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帝室權威之揭於欽定憲法者 期圖尊榮事, 一. 內閣職權之載於官制章程者 期圖責成事, 一. 國民義權之得於法律範圍者 期圖自由事.

36) 독립협회 이래 의회설립을 추진하던 지식인들은 1905년 5월 헌정연구회를 조직하여 입헌정체의 연구와 민족운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신용하, 〈19세기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문제와 입헌공화국 수립운동〉, 《한국의 근대국가 형성과 민족문제》, 1986, 94쪽).

김효전은 당시 계몽사상가들은 국가정체에서 전통적인 군주제를 타파하고 입헌군주제를 목표로 하였고 그것도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한다(김효전, 〈한국 개화기의 국가이론〉, 《동아법학》 2, 1986).

37) 김도형의 경우는 헌정연구회만을 따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입헌군주론이 황제의 절대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민권도 일정하게 보장받는 형태인 외견적 입헌군주제 혹은 개명군주제라고 하였다(김도형, 《대한제국말기의 국권회복운동과 그 사상》,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63~77쪽).

최덕수는 헌정연구회의 전신인 독립협회의 입헌군주론은 의회의 권한이 극히 보잘 것 없고 민권의 보장도 현저히 미약한 프러시아형의 입헌군주제라고 하였

또 하나의 입장은 헌정연구회의 내부에 민권의 확대를 강조하는 입헌군주제와 군권에 강조점을 둔 입헌군주제 두 개의 입장이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민권의 확대를 염두에 두었지만 현실적으로 흠정을 추구하였다는 견해이다. 특히 〈憲政鎖談〉의 발표는 이의 주요 증거이며, 그리고 실제 헌정연구회는 흠정헌법의 제정을 현실적 목표로 하여 그 예비작업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었다고 보았다.³⁸⁾

이러한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헌정연구회는 자신들이 연구하고 준비한 입헌정치에 대한 소개를 그 주된 사업으로 하였다. 《황성신문》에 연재한 기사 〈헌정쇄담〉과 〈헌정요의〉가 국민계몽활동의 구체적 예라고 하겠다. 헌정연구회에서 1905년 7월에 《헌정요의》라는 소책자를 저술하여 《황성신문》 7월 15일자부터 8월 3일자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기사의 형태로 연재된 바가 있는데, 《헌정요의》 저술의 기본적인 입장은 입헌군주국에서의 군주권의 제약과 민권의 확대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서의 입헌정치의 형태는 군주와 국민의 협의에 의한 ‘군민입약지헌’으로 민권의 확대에 의한 입헌군주정이었다.³⁹⁾ 이는 국민교육회에서 《국민수지》라는 책명으로 발간되었다.⁴⁰⁾

헌정연구회는 《황성신문》, 1905년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6차례에 걸쳐 기사, 즉 투고 형식의 일본인 利龍子 談의 〈헌정쇄담〉을 연재하였는데, 이는 헌정에 대한 소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글로, 군주의 독단과 전제를 불가한 것으로 설명하면서도 주된 논의를 흠정헌법에 두었다. 利龍子は 군주가 덕의로 헌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군주와 국민은 겸손의 덕을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였다.⁴¹⁾

그리고 1905년 11월에 즈음하여 일진회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는 선언서를 발표하고 이를 각 단체와 신문사·학교 등에 보냈는데, 헌정연구회에서도 이 선언서를 반송하고 일진회를 비난하는 문서를 첨부하여

다(최덕수, 〈독립협회의 정체론과 외교론 연구〉(《민족문화연구》 13, 1978).

38) 최기영, 앞의 글(1990), 10~24쪽.

39) 최기영, 위의 글, 20~24쪽.

——, 앞의 글(1992) 참조.

40) 주 20) 참조.

41) 《皇城新聞》, 1905년 6월 15일, 기사 〈헌정쇄담〉.

보냈다.⁴²⁾ 그 후 11월 19일 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윤효정은 이 조약을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박정양 등의 원로에게 칠성판을 보내어 보호조약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을 통렬히 비난하였는데, 이 일로 윤효정은 경무청에 체포되었다.⁴³⁾ 윤병은 상소를 올려 보호조약을 조인한 반역배들의 주살을 청하였다.⁴⁴⁾ 이 후 헌정연구회는 해산되었다.

2) 대한자강회

(1) 대한자강회의 설립과 조직

가. 대한자강회의 설립

대한자강회⁴⁵⁾는 1906년 3월 31일 張志淵·尹孝定·沈宜性·林珍洙·金相範 등 5인에 의하여 “나라의 독립은 오로지 자강 여하에 달려 있으므로 국권회복을 위해 자강에 힘쓰자”는 기본입장에서 발기되어 4월 14일에 임시회를 개최하고 회칙에 의한 임원진을 구성함으로써 정식 발족을 보았다.⁴⁶⁾

42) 《皇城新聞》, 1905년 11월 11일, 잡보 〈憲會교서〉.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15일, 잡보 〈却之廓如〉.

43) 《大韓每日申報》, 1906년 2월 11일, 잡보 〈抗辨仍囚〉.

44)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 2일 3일, 잡보 〈前秘書丞尹秉氏疏本이 如左하니〉.

45) 대한자강회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李鉉淙, 〈大韓自強會에 대하여〉(《震檀學報》 29·30, 1966).

權熙英, 〈大韓自強會의 社會思想과 民族運動〉(《논문집》, 해군제2사관학교, 1980).

鄭 灌, 〈舊韓末 愛國啓蒙團體의 活動과 性格〉(《대구사학》 20·21, 대구사학회, 1982).

——, 〈大韓自強會月報에 관한 一考察〉(《역사교육논집》 1, 경북대, 1980).

——, 〈구한말기 민족계몽운동연구〉(형설출판사, 1995).

李志雨, 〈大韓自強會의 활동에 대하여〉(《경희사학》 9·10, 1982).

——, 〈大韓自強會의 時代認識에 대하여〉(《慶大史論》 3, 1987).

柳永烈, 〈大韓自強會의 愛國啓蒙運動〉(《1900年代의 愛國啓蒙運動研究》, 아세아문화사, 1993).

——, 〈大韓自強會와 신민회의 민족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李尙根, 〈愛國啓蒙團體의 教育救國運動—大韓自強會와 新民會를 중심으로〉(《朴永錫教授 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1992).

46)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본회회보〉, 13~17쪽.

당시의 상황은 앞서의 단체들과는 달리 이미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본에 의한 보호국체제가 이루어진 후의 시기였다. 미·영의 후원에 힘입어 러일전쟁에서 승세를 굳힌 일본은 1905년 7월의 태프트-가츠라 조약과 8월의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하여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았으며 9월의 러시아와의 강화조약을 통하여 러시아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와 보호, 監理의 권리를 인정받고 11월에는 강제로 한국과 ‘보호조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대한자강회는 ‘보호조약’이 체결되고 통감부가 설치되고(1906. 2)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통감취임(1906. 3)이 있는 후 어려운 시기에 설립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설립된 대한자강회의 설립주체는 누구였는가. 주축이 되었던 인물을 보면 5인의 발기인 외에 尹致昊·林炳恒·南宮薰·李源兢·朴勝鳳·李相天·韓永福·崔在學·安秉瓚·金英圭·李明健·姜漢熙·金碩桓·吳周燦·鄭雲復·白象圭·呂炳鉉·洪弼周·李沂·柳瑾 등과 일본인 오가키 타케오(大垣丈夫) 등이었다.⁴⁷⁾

이러한 인물 구성을 보면 대한자강회는 헌정연구회를 모체로 하면서,⁴⁸⁾ 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와도 일정하게 관련하고 있었고, 황성신문·제국신문 등 언론과도 연계되어 있었다. 즉 대한자강회는 독립협회와 그 후의 애국계몽단체들이 전개한 민족운동의 맥락을 이은 애국계몽단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립주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인 고문 오가키 타케오에 관한 것이다. 그는 한일합방 이후 회고담을 통하여 그 자신이 “경성에 있어서의 일류 인물들인 윤치호·윤효정·여규현·홍필주·장지연·이원공·이기·유근 등과 협상담합하여 대한자강회를 조직했다”고 하였고,⁴⁹⁾ 대한매일신보에서도 대한자강회의 인도자는 韓人 2인과 日本人 1인이라고⁵⁰⁾ 했던 것으

47)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14~15쪽. 발기인 외 최초의 임원으로 선출된 평의원 10인과 간사원 10인, 일본인 고문을 창립주체로 보았다.

48) 헌정연구회가 대한자강회의 모체였다는 것은 이현종의 앞의 글(157쪽)에서 처음 언급하였고, 유영렬의 앞의 글(1993, 44쪽)에서도 이 의견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49) 李鉉淙, 앞의 글, 164쪽. 오가키의 회고담에 따르면 “자기는 고문으로서 시국수습과 아울러 會로서의 활동방침의 결정 등에는 실권을 장악하여 회원을 지휘하며 檄을 13도에 보내어 排日派의 통일에 노력하였다”고 하고 있다.

로 볼 때 오가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대한자강회에 대한 평가문제와 관련을 갖는 것으로 대한자강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면 왜 윤효정·장지연은 일인과 제휴하여 대한자강회를 조직했을까.

이 점에 대하여 대한자강회측이나 오가키측이나 모두 동상이몽을 꿈꾼 것이고 상승작용의 일환으로 상호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능통한 특히 법률 정치에 정통한 오가키를 자강회의 고문으로 추대하였기에 자강회의 근본 목적이나 본래의 사명이 성과를 거두고 排日活動을 하는데 제약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 있다.⁵¹⁾

이에 반하여 이 문제를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⁵²⁾ 첫째, 대한자강회 발기인들은 보호국체제하에서 자강회의 설립과 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일인고문의 초빙이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발기인들은 일인 오가키가 자신들과 시국관에 있어 일치한다고 믿었다는 것이다. 당시 오가키는 대한자강회 회원들과 동일하게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이라는 한국의 자강독립론을 역설했고 한국의 자강독립에 기초한 동양 3국의 정족평화론을 주장했는데, 이는 일종의 아시아 동맹론으로 당시 일제의 보호국체제하에서 한국의 국권회복론자들이 합병론자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맹자들을 동지로 간주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요컨대 대한자강회의 창립에 오가키가 깊이 관여했고 일제가 반일운동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자강회를 이용코자 했다고 해서, 대한자강회가 일제의 조종하에 창립되고 일제의 조종을 받은 단체라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나. 취지와 목표

대한자강회의 설립목적은 어디에 있었으며, 설립취지는 무엇이었는가.⁵³⁾

50)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11일, 논설 〈新成社會〉.

51) 李鉉淙, 앞의 글, 165쪽.

52) 柳永烈, 앞의 글(1993), 47~48쪽.

53)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9~10쪽.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3일 잡보에는 취지서가 실려 있으며, 1906년 4월 4

첫째, 자강회의 궁극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둘째, 자강회의 기본 인식은 우리 나라가 국권을 빼앗기고 외국의 보호를 받는 지금의 어려운 처지로 전략하게 된 것은 바로 인민이 우매하고 국력이 쇠퇴하였기 때문이고, 인민의 우매와 쇠퇴는 다른아닌 자강지술을 피하지 않은데서 온 결과라는 것이다. 즉 우리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달려있는데 자강지술을 피하지 않아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그러므로 지금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자강지술을 연구해야 하는데 그 자강지술은 다른 아닌 교육을 진작하고 식산을 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이 불흥하면 민지가 미개하고 산업이 불식하면 국부가 늘지 못하니 민지를 개발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은 교육과 산업의 발달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넷째, 그러나 자강의 도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2천만 민족이 단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보고 온 민족이 하나가 되어 자강에 힘을 것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의 정신을 배양하여야 하는데 단기 이래 4천년 자국의 정신을 2천만 모두의 뇌수에 흘러들어 가게끔 하여 한순간이라도 자국의 정신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 이후에야 자강의 마음을 닦고 복권의 활기를 만들 수 있으므로 안으로 조국의 정신을 키우고 밖으로 문명의 학술을 흡수하는 것이 지금 시국의 급무라고 강조하였다.

다. 조직과 회원의 구성

자강회의 조직과 운영 및 그 구성원에 관하여 살펴보자. 대한자강회는 한성에 중앙회를 두었는데, 그 구성조직을 보면 크게 회원과 찬성원으로 구성되었다. 회원은 임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입회할 수 있고, 찬성원은 현직 관리로서 대한자강회의 취지에 동정을 표하는 인사로 정했다. 임원을 보면 회장 1인, 부회장 1인, 회의의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평의원 20인, 평의원 중에서 선출한 회무를 총괄하는 총무원 1인, 평의원장 1인, 회의 서무를 관리하는 간사원 20인, 간사장 1인, 회계, 서기, 일인고문 1인을 두었다. 임원

의 임기는 6개월이었고 연임이 가능하였다. 그리고 업무를 위해 각기 통상회마다 사찰위원 2인, 회계조사위원 3인을 선정하고, 사안이 있을 때는 摠代를 선정하여 파견하였다.⁵⁴⁾ 사무실로는 立廳都家를 사용하였다.⁵⁵⁾

대한자강회는 이러한 중앙조직과 더불어 지방지회를 갖고 있었다. 자강회 규칙 11조에는 “회무 진전을 위하여 요점 지방에 지회를 설치한다”는 지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있다. 이는 자강회가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 출발하려 했던 것을 보여주는데, 지회의 설립은 쉽지 않아 여러 과정을 겪은 후 인⁵⁶⁾ 7월 11일에 가서야 지회설립방법이 결정되었다.⁵⁷⁾

지회의 숫자가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지만 월보에 실린 지회신청 인가 지역을 보면 국내에는 江西 高靈 義州 東來 南陽 平壤 三和 礪山 端川 仁川 永興 元山 海州 甌山 江華 稷山 淸道 寧邊 昌城 雲山 鐵山 金海 釜山 仁同 善山 開寧 城津 永柔 濟州 定州 載寧 北靑 등 32개소이고 국외 하와이 1개소 등 합계 33개소로 나타난다. 즉 북에 치우치긴 하였지만(평안도 10개소, 함경도 5개소, 황해도 2개소 등 북부지역이 반을 차지) 전국에 걸쳐 지회가 설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던 자강회의 회원수는 본회의 회원이 358명, 지회의 회원수 1,166명으로 볼 때 약 1,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회원의 성분은 창립 주도층에서도 보았듯이 개화자강계열의 인사들이 주를 이루었고 개신유학적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구성되었다.⁵⁸⁾

54)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대한자강회규칙〉·〈대한자강회통상회세칙〉·〈대한자강회평의회세칙〉, 11~19쪽.

55)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8쪽.

56) 《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37~38쪽·51~53쪽.

57) 《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대한자강회지회설립방법〉, 39~40쪽. 이에 따르면 지방유지가 일단 입회하여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동의하고 30인 이상의 입회 지원자가 있어야만 하고, 중앙에서는 그 지역에 시찰원을 파견하여 지원자의 품행과 그 지역의 사정을 시찰한 후 보고하면 평의회에서 허가 불가를 결정한다. 그리고 지회의 규칙을 정하였다.

《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대한자강회지회규칙〉, 50~51쪽.

58) 이 점은 강서유림소에서 유림들이 제일 먼저 지회설립을 청원했던 사실, 고령 지회의 입회청원인들 거의가 유림과 군료들이었다는 사실(《자강회월보》 제4호, 46쪽), 동래지회의 입회청원인들은 대개 청년단체의 회원들이었으나 당시 최고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이 포함되었던 사실(제4호, 43~44쪽), 자강회가 講論

그러면 실질적 운영자들이었던 임원들의 성격은 어떠하였는가. 특히 두드러진 점은 과거 독립협회의 주도회원이었다는 것이다. 대한자강회의 존속기간 동안(1906. 4. 4~1907. 8. 21)에 6개월에 한번씩 3번의 임원 선정이 있었고 중간에 수시로 부분적 교체가 있었는데, 임원 역임자는 대략 78인으로 집계된다. 이 중 과거 독립협회 주도 회원으로 활동했던 인사들이 24명으로 1/3에 육박한다. 그리고 78인 중에서도 활동빈도가 많았던 사람으로 26인을 간추려 보아도 이 중 11명이 독립협회의 주도 회원이었다. 또한 회장단과 평의원 등 임원을 보아도 절반 이상이 독립협회의 주도 회원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한자강회가 독립협회의 맥락을 이은 단체였음을 보여준다.⁵⁹⁾

대한자강회의 주도 인물들은 앞의 발기인 창립인사 외에 현은·薛泰熙·李鍾潛·金成喜·太明軾·趙在赫·李鍾一·金明潛·南宮潛·金奎植·池錫永·朴殷植·鄭鎬冕·梁弘默·李商在·魚塔善·羅壽淵·鄭喬·金在豐·元大圭·李潛·李敏卿·李鍾泰·韓基準·元泳義·吳仁鐸·李宇滌 등이 있다.

(2) 대한자강회의 계몽사상

가. 사회진화론과 자강독립론

대한자강회는 사회진화론에 의거해 자기 시대를 이해하였다. 즉 지금은 경쟁시대로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통하는 시대라고 보았다. 당시 사회를 “생존경쟁을 天然이라 논하며 약육강식을 公例라 謂함이라”⁶⁰⁾고 하는 사회로 파악하였으며 “在今日競爭據烈之社會”⁶¹⁾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국가와 개인을 불문하고 생존경쟁을 아는 자는 살아 남고 모르는 자는 패배하여 도태하고 만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제사회에서는 우승열패와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의 논리에 의해 우등한 민족 국가가 열등한 민족 국가를 약탈 침략하여 핍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보았다.⁶²⁾

所를 만들어 經學講座를 개설했던 사실(제12호, 71쪽·제13호, 61쪽) 등에서 알 수 있다.

59) 柳永烈, 앞의 글(1993), 51~55쪽.

60) 朴殷植, 〈自強能否의 問答〉(《大韓自強會月報》 제4호), 1쪽.

61) 張志淵, 〈團體然後民族可保〉(《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1쪽.

62) 尹孝定, 〈생존의 경쟁〉(《大韓自強會月報》 제11호), 4쪽. 윤효정은 지금의 생존

그리고 우리 민족국가가 일본에 의한 국권 피탈에 의해 현재의 상황으로 전략하게 된 것은 바로 생존경쟁에서 열등하여 패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인민이 우매하고 국력이 쇠퇴하여 지금과 같은 어려움에 이르러 마침내 외국의 보호국으로 전략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³⁾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은 1880년대 유길준에 의해 최초로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으나 본격적으로 수용된 것은 1900년대에 이르러서 개화자강파들에 의해서였다. 즉 러일전쟁을 계기로 개화자강파 인사들은 서구열강들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더욱이 을사조약에 의해 강제로 일제에 국권을 빼앗기자 위기의식이 고양되고 민족의식이 양양되어 사회진화론을 적극 수용하였던 것이다.⁶⁴⁾ 대한자강회 역시 이렇게 사회진화론적 시대인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바로 여기에서 자강론을 제기하였다.

왜 우리가 패자의 위치로 전략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자강회는 우리 민족이 자강의 도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 여하에 달려있는데 ‘自強之術’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우매해져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⁵⁾ 자강회의 인사들은 제국주의 국가들의 침략행위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하면서도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다. 이들은 국권상실의 원인을 단지 러일전쟁이나 을사조약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지 않고 과거 20~30년 동안 특히 열강의 세력균형하에서 비교적 독립국가의 위치에 있었던 과거 10여년 동안에 국가의 자강을 도모하지 않은 데 있었다고 파악하였다.⁶⁶⁾

경쟁은 個人이든 國家든 我가 彼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동시에 我가 彼의 아래 굴복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63)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대한자강회 취지서〉.

64) 사회진화론에 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이 있다.

이광린, 〈구한말 진화론의 수용과 영향〉(《한국개화사상연구》, 일조각, 1979).

이송희,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사회진화론〉(《부산여대사학》 2, 1984).

——, 〈한말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전개〉(《부산사학》 22, 부산사학회, 1992).

김도형, 〈한말 계몽운동의 정치론연구〉(《한국사연구》 54, 1986).

주진오, 〈독립협회의 사회사상과 사회진화론〉(《손보기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88).

65)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대한자강회 취지서〉.

66) 薛泰熙는 생존경쟁 약육강식의 시대에 있어 자유의 침탈자보다는 자유의 상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강의 도를 찾아 노력하여 국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자강의 도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자강회는 취지서를 통하여 자강의 방법으로 민지를 개발해 주는 교육과 국부를 증강시켜 줄 殖産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는 자국정신의 뒷받침으로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⁶⁷⁾

나. 교육자강론

대한자강회는 지식을 세력증진의 원소로 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교육뿐이라고 인식하였으며 교육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教育也者는 其復權之基礎也”라고 주장하였다.⁶⁸⁾ 그러면 어떠한 내용의 교육을 추구했는가. 자강회원들은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고도화가 약자의 강자화의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신학문과 신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신교육을 강조하였다. 바로 신교육을 통해서만이 국민들을 무지와 미신에서 해방시키고 근대적인 문명지식을 갖춘 개화국민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구학을 배척한 것은 아니다.⁶⁹⁾ 그리고 실업교육을 강조하였다.⁷⁰⁾ 실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실업교육을 통하여 노동천시의 관념을 타파하고 국민의 경제적인 자립의지와 자립능력을 배양시키며,⁷¹⁾ 각종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국가부원을 증식해야 한다고 보았다.⁷²⁾ 또한 애국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애국심은 국가구성의 기본정신으로 애국심의 유무강약 여부가 국가존립에 직결된다고 보아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애국심은 전제국가가 아닌 국민과 이해를 같

실자가 오히려 더 큰 죄인이라고 하였다(〈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月報》제6호), 18~20쪽).

장지연도 국권상실의 책임은 외세의 침략보다 내부의 自失에 있다는 國權自失論을 폈다(〈過去の狀況〉)(《月報》제11호), 3~5쪽).

67)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대한자강회취지서〉.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대한자강회규칙〉, 10쪽.

68) 李鍾濬, 〈교육론〉(《大韓自強會月報》제7호), 4쪽.

69) 柳永烈, 앞의 글(1993), 64·66쪽.

70) 李鍾濬, 〈교육론〉(《大韓自強會月報》제7호), 1~2쪽.

71) 呂炳紘, 〈殖産部論說〉(《大韓自強會月報》제2호), 15~16쪽.

72)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大韓自強會月報》제1호), 32~34쪽.

이 하는 국민국가에 충심을 바치는 근대적인 애국심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 애국심은 국가교육과 국어교육을 통하여 배양되므로 국사와 국어교육에 전력할 것을 강조하였다.⁷³⁾

자강회는 이러한 신교육과 실업교육·애국교육 등을 통한 자강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학교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교육의 보급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건의 의서를 1906년 10월 26일 정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⁷⁴⁾ 그러나 교육을 협의의 학교교육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모든 교육의 시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보아 가정교육을 중요시 하였다.⁷⁵⁾ 가정교육의 강조와 실력양성에서의 여성인력 활용을 목적으로 한 여성교육론의 제기도 두드러진다.⁷⁶⁾

다. 식산자강론

자강회는 교육과 더불어 식산을 자강실현의 양대 지주로 간주하고 식산자강론을 폈다. 자강회 회원들은 국부를 증진하여 국민의 의식이 족한 연후에야 국권신장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빼앗긴 주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인식하고 식산흥업으로 국가부강을 실현하여 국권을 회복하자고 하였다.⁷⁷⁾

이들은 먼저 우리 나라가 왜 식산이 부진하고 빈곤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원인으로 백성들의 근로정신의 결여와 생산기술의 부족, 전제국의 중토주의, 관준민비의 폐습에 의한 인민의 천대와 탐관오리의 인민에 대한 수탈, 인민재산권의 보호부재, 전제정치로 인한 인민들의 발전의욕의 상실, 다수의 유의유식자와 생산에 참여하지 않고 기생하는 층의 존재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폐습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⁷⁸⁾

73)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21쪽.

玄 槩, 〈國朝故事〉(《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34~37쪽.

74) 이지우, 앞의 글(1987), 21쪽.

75) 鄭雲復, 〈가정교육〉(《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67~68쪽.

76) 이송희, 〈대한제국말기 계몽단체의 여성교육론〉(《이대사원》 28, 1995).

77) 張志淵, 〈식산흥업의 필요〉(《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2~35쪽.

78) 金成喜, 〈殖産部論說〉(《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38~40쪽.

鄭雲復, 〈官尊民卑의 弊害〉(《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42쪽, 47~48쪽.

그리하여 식산진흥책으로 먼저 이러한 폐습을 불식시켜 인민들에게 노동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士人도 실업에 종사케 하고, 유의유식자를 없애 모든 국민이 자력에 의한 자립생활을 영위케 하자고 하였다. 그리고 농업·상업·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기하였다. 또한 농업·임업·상업·공업 등 각종 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기술과 기계를 개량 발전시킴으로써 생산성을 증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⁹⁾

라. 정신자강론

대한자강회는 교육과 식산을 통해서 자강을 관철하기 위해 부득불 먼저 국민의 정신을 배양하여 단군 이래 4천년 자국의 정신을 2천만의 腦髓에 흐르게 하자고 하였다.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시급한 것이 “內養其祖國之精神 하며 外吸呼文明之學術”이라고 하였다. 즉 이들은 자국정신이 완전 공고해야 교육에 의한 지식의 개발과 식산에 의한 세력의 증진이 제대로 되어 우월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⁸⁰⁾

자강회는 국권회복의 급선무인 조국정신을 배양하는 방법으로 먼저 국학 교육의 강화를 들었다. 자강회회원들은 종래의 한국인들이 중국의 역사와 한문만을 숭상하여 조국의 연원을 알지 못함으로써 독립정신이 약화되었다고 보고 국사교육과 국어교육의 강화로 조국정신을 배양하자고 하였다.⁸¹⁾ 또한 이들은 전제체제하에서는 군권이 무한하고 민권이 부진하여 국민이 국가와 유리되어 진정한 애국심이 존재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조국정신은 민권보장과 인민참정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와 일체감을 갖게 하는 국민주권국가의 출현과 입헌대의제의 실시로 배양될 수 있다고 믿었다.⁸²⁾

79) 金成喜, 〈殖産部論說〉, 《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40~42쪽·제7호 36쪽.

張志淵, 〈國家貧弱之故〉(속), 《大韓自強會月報》 제7호), 6~8쪽·12쪽.

——, 〈식산흥업의 필요〉(《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3~34쪽.

金成喜, 〈공업설〉(《大韓自強會月報》 제10호), 29~30쪽.

80)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대한자강회취지서〉.

朴殷植, 〈大韓精神〉(《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58쪽.

81) 주 80 참조.

尹孝定, 〈議案〉(《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36~37쪽.

82) 尹孝定, 〈國家의精神을 不可不發揮〉, 7~8쪽.

——, 〈專制國民은 無國家思想論〉(《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19~21쪽.

마. 국민국가론과 입헌군주제론

대한자강회는 우리가 자강독립을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국체와 정체를 근대사회에 맞게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먼저 국가관을 보면, 대한자강회는 천부인권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의 평등 자유 생존의 권리의식을 갖고, 국가의 통치권은 국민이 군주 또는 정부에 위임한 것으로 정부는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해 설치된 것이라고 하였다.⁸³⁾ 이는 국가란 통치자와 피치자의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 것이라는 근대적 국가발생의 관념을 반영한 것으로, 국가나 정부권력의 기원을 인민에게서 구하고 권력설정의 목적을 인간의 기본적 권리수호에 두는 사회계약론적 국가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강회는 인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이고 권력설정의 목적이며 국가 흥망의 책임자로서 국정감독권과 국정참정권 그리고 혁명권까지 가진다고 보아,⁸⁴⁾ 인민은 단순히 통치의 대상이 아니고 주권을 가진 정치의 주체라고 인식하였다. 이렇게 자강회는 근대적 국민국가관을 갖고 국민주권국가의 수립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대한자강회가 구상하였던 정치체제를 보자. 대한자강회회원들은 공화정체가 가장 진보적이고 우월한 정체, 국민국가의 이상에 가장 부합하는 정체라고⁸⁵⁾ 인식은 하고 있었으나, 당시 한국사회에 실현가능한 정치체제로 전체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입헌정체를 구상하고 이의 채용을 주장하였다.⁸⁶⁾ 입헌정치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공당과 공의에 의해 운용되어 민권보장이 가능하고 군민 상하가 일체감을 갖게 하는 정치라 하여 입헌정체의 채용을 문명세계의 대세라 역설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비로소 국민의 애국심이 생긴다(윤효정, 〈國民의 政治思想〉, 《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21쪽·제6호, 24쪽).

83) 薛泰熙, 〈拋棄自由者爲罪人〉(《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19~20쪽.

金成喜, 〈工業說〉(《大韓自強會月報》 제10호), 28~29쪽.

84) 薛泰熙, 〈法律上 人の 權義〉(《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17쪽

尹孝定, 〈政治家의 持心〉(《大韓自強會月報》 제12호), 12~13쪽.

85) 薛泰熙, 〈法律上 人の 權義〉(속)(《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12~13쪽.

86)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19~21쪽.

(3) 대한자강회의 자강독립운동

대한자강회는 계몽사상에 입각하여 자강독립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 운동은 교육구국운동을 중심으로 실업진흥운동·대중계몽운동·고종양위 반대시위 등의 정치구국운동으로 전개되었다.

가. 교육구국운동

자강회는 무엇보다도 국민교육이 자강독립의 기초이고 바로 구국의 길임을 일반대중에게 알려 교육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계몽운동에 힘썼다. 《대한자강회월보》와 정기연설회를 통하여 교육자강론을 펴고 교육진흥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월보》에서는 제1호에서 13호까지 전호에 걸쳐 1호도 거르지 않고 매호에 평균 2건의 교육구국에 관한 논설을 게재하였다.⁸⁷⁾ 그리고 정기연설회 41회의 연설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것이 가장 많았다. 자강회는 논설과 연설을 통하여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이 강자에 이르는 길임을 주장하고, 신교육에 의한 신학문·신사상의 보급 확대의 필요성과 실업교육·애국교육을 강조하고, 학교교육과 더불어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여성교육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당시 사회의 교육열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대한자강회는 의무교육 실시건의안과 일문교과서 반대건의 등 대정부건의를 추진했다. 자강회는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의 실시가 교육진흥의 관건이라고 간주하고, 전국에 學區를 설정하여 區立 소학교를 설립하되 구내주민이 경비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의 의무교육실시안⁸⁸⁾을 마련하여 1906년 10월부터 자강회가 해체되기 직전까지 정부에 총대위원을 파견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였다. 이는 일제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다. 한편 일제의 식민지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던 교육작업으로 일인 학부참여관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가 초 중등교과서를 일문으로 편집하려 하자,⁸⁹⁾ 자강

87) 鄭 灌, 앞의 글(1980), 146쪽.

88) 구내주민은 학교위원을 선출하여 교과서의 선정 등 학부 일체를 담당케 하고, 의무교육의 연한은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대한자강회, 〈義務教育條例大要〉(《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41~42쪽).

의무교육운동에 대하여는 李尙根, 앞의 글, 170~173쪽 참조.

회는 1906년 6월 16일의 통상회에서 일문교과서에 의한 교육은 한국정신과 자국정신을 소멸시킨다고 주장하면서 여론화시켰으며 총대위원을 파견하여 학부대신에 강력히 항의하였다.⁹⁰⁾ 이에 학부대신은 일반교과서를 일문으로 편집한다는 것은 부당하여 시행될 수 없다고 밝혔다.⁹¹⁾ 이렇게 사회여론에 힘입어 일문교과서 편집의도를 좌절시켰다.

또한 대한자강회는 학교와 학회에 대한 지도와 후원을 통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추진하였다. 학교교육의 정상적 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설립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교육정도를 균일케 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서울 시내 사립학교에 시찰위원을 파견하여 학부발전을 지도하였다.⁹²⁾ 그리고 지방 지회의 학교설립과 운영을 후원 장려하였다. 한편 자강회회원들은 각기 지역을 중심으로 설립된 학회들의 창립에 적극 참여하였으며 운영을 주도하였다.

나. 실업진흥운동

대한자강회는 일반대중의 근대적인 경제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식산계몽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역시 《월보》와 연설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강회는 식산흥업은 국부증진의 근원이며 바로 국권회복의 길임을 주장하여 식산흥업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그리고 자강회는 한국의 식산부진과 국가빈약의 요인을 분석하고 국민의 근로의식과 생산의욕을 고무할 수 있는 식산진흥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강회는 부동산매매증명법령의 제정에 관한 대정부건의활동을 전개하였다. 자강회는 당시 일인 이주자들이 잠매를 통하여 막대한 토지를 점유해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의 금지가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는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⁹³⁾ 그리하여 토지제도를 확정하여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규제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시에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부동산증명법령의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다.⁹⁴⁾ 자강회의 끈질긴 건의활동은 정부로

89)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6일, 잡보 〈教育禍胎〉.

90) 《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36~37쪽.

91) 《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49쪽.

92) 《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43쪽, 제5호 37·43쪽, 제6호 75·77·82쪽.

93) 朴殷植, 〈蒿齋漫筆〉(《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9~10쪽.

하여금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케 하였으나, 그 규칙은 자강회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외국인에게 부동산매매를 공인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⁹⁵⁾

다. 대중계몽운동

대한자강회는 《대한자강회월보》와 정기연설회를 통하여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으며 회원들은 각기 당시의 다른 단체나 학회에서 연사로 활동하며 대중계몽에 앞장섰다. 《대한자강회월보》는 1906년 7월부터 1907년 7월까지 13호가 간행되었는데 교육·식산·정치·법률·역사·지리 등에 관한 140편의 논설과 시사문답 국내외뉴스 등이 실려 있었다. 초기 발행부수는 알 수 없으나 제6호부터 2천부가 발행되었다.⁹⁶⁾ 자강회는 존속기간 17개월 동안 정기연설회, 수시로 열린 연설회, 지회 지원 연설회, 지회 자체의 연설회 등 무수히 많은 연설·강연회를 열어 대중계몽에 노력하였다.⁹⁷⁾ 또한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국민교육회·서우학회·한북흥학회 등 당시 타 단체활동에 관여하면서 강연·연설·토론 등을 통하여 대중계몽에 노력하였다. 그리고 당시 언론에서 활동하고 있던 회원들은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만세보 등 언론에 자신의 소신을 담은 글을 발표하여 대중을 계몽하는데 힘을 다하였다.

대한자강회 회원들이 월보와 강연·연설을 통하여 대중을 계몽하고자 하였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자강회의 애국계몽사상을 담은 것이었다.

라. 정치구국활동

대한자강회는 경쟁사회에서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한다고⁹⁸⁾하여 정치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민국가의 수립과 이를 위한 입헌군주제의 채택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입헌대의제 실시의 전단계로 국민의 자치능력과 참정능력의 배양을 위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주장했다. 자강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갖고서 사회일반을 계몽하는 정치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94)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建議書〉, 39~40쪽·53~55쪽.

95) 실업진흥운동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柳永烈, 앞의 글(1993), 86~91쪽 참조.

96) 鄭 灌, 앞의 글(1980), 참조.

97) 柳永烈, 앞의 글(1987), 176쪽 참조.

98) 李鍾藩, 〈교육론〉(《大韓自強會月報》제7호), 1~2쪽·5쪽.

한편 대한자강회는 1907년 7월 헤이그밀사사건을 계기로 일제에 의해 고종의 양위가 강제로 이루어지자 여기에 철저히 항거하였다. 일제는 밀사사건을 계기로 한국내정에 관한 전권의 장악을 목표로 세워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였다. 이에 대해 자강회가 중심이 되어 동우회·기독교청년회·대한구락부·국민교육회의 회원들은 양위에 반대하는 민중대회를 열어 내각대신을 성토했고 격렬한 시위를 주도하여 경찰과 유혈충돌을 일으켰다. 이들은 일진회 기관지인 국민신보사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총리대신 이완용의 집을 방화·파괴하였으며,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하여 파괴하였다. 일제는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고종을 퇴위시킨 후, 보안법을 만들어 자강회를 강제 해체시켰다.⁹⁹⁾

대한자강회는 일본인 오가키를 고문으로 추대한 점, 국권피탈의 원인을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찾으려 했던 점,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활동이었기에 일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대항하지 않았던 점 등은 그 한계점으로 꼽을 수 있으나, 전국에 지회를 두어 전국적 규모의 단체로서 계몽운동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였던 점은 그 이전의 어떠한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3) 신민회

(1) 신민회의 창건과 목적

가. 신민회의 창건

신민회¹⁰⁰⁾는 안창호의 발기에 의해 1907년 4월 초¹⁰¹⁾ 梁起鐸·全德基·李

99) 柳永烈, 앞의 글(1993), 94~96쪽.

李鉉淙, 앞의 글(1966), 170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3일, 별보 〈弔大韓自強會文〉.

100) 신민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재순, 〈한말 신민회에 관한 연구〉(《이대사원》 14, 1977).

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한국민족독립운동사연구》, 일조각, 1985).

강재언, 〈신민회의 활동과 105인사건〉(《한국의 개화사상》, 비봉출판사, 1981).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일지사, 1990).

——, 〈신민회활동의 경제적 기반〉(《박영석교수화갑기념 한민족독립운동사

東輝·李東寧·李甲·柳東說·安昌浩 등 7인을 창간위원으로 하여, 이들과 함께 盧伯麟·李昇薰·安泰國·崔光玉·李會榮·李商在·尹致昊·李剛·曹成煥·金九·申采浩·林崑正·李鍾浩·朱鎭洙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었다.

신민회를 창건한 세력은 당시 활동하고 있었던 다섯개의 비공식 집단의 연합세력이었다. 즉 양기탁·신채호·玉觀彬·張道斌·임치정 등 대한매일신보계열과 전덕기·鄭淳萬·이준·이동녕·崔在學·桂明陸·金仁敢·李承吉·車炳修·申尙敏·金泰淵·조성환·徐相八·김구 등 상동교회와 상동청년학원세력, 이동휘·이갑·유동열·노백린·조성환·金義善 등의 무관 출신들, 이승훈·안태국·崔應斗 등 민족자본가 집단, 미주에 있던 안창호·이강·林俊基·金成武·宋錫俊·申達元·朴永順·李在洙 등 공립협회집단 등이 연합한 것이다. 신민회는 이러한 다섯개 집단이 모여서 중핵이 되어 만든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였다.¹⁰²⁾

신민회 창건의 구상과 발기는 1907년 초 미국에 있었던 안창호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안창호는 이 뜻을 갖고서 2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였다. 그 후 평안도 일대를 돌면서 강연을 하고 그 지역의 지도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자신의 목적을 구체화시켜 나갈 준비를 하였는데 4월 초 비밀결사의 창립을 양기탁에게 제의하였다.¹⁰³⁾ 당시 많은 단체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었는데 안창호는 왜 이와 같이 비밀단체인 신민회를 조직하려고 했을까. 이는 기존의 합법적인 단체와 학회가 다하지 못한 구국운동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투쟁적으로 전개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1907년 4월 초 양기탁의 주재로 다섯개 집단의 대표격인 양기탁·이동휘·전덕기·

논총》, 1992).

柳永烈, 앞의 글(1987).

李尙根, 앞의 글.

101) 이재순은 신민회가 양기탁을 중심으로 안창호가 귀국하기 전인 1906년에 창립되었다고 하고, 신용하는 1907년 4월초에 창립되었다고 하며, 윤경로는 안창호가 귀국한 2달후인 1907년 4월 20일에 창립되었다고 한다.

102) 이것은 신용하의 견해에 따른 것인데(신용하, 앞의 글(1985), 18~19쪽), 윤경로의 경우 신민회가 기존의 상동과 조직 위에서 창립될 수 있었다고 하고 있다(윤경로, 앞의 책, 180~181쪽).

103)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1일, 논설 〈共立協會의 詳報〉·1907년 4월 11일, 광고.

이동녕·이갑·유동열·안창호 등 7인이 극비리에 회합하여 창건위원회를 열고 신민회를 창건하였다.¹⁰⁴⁾

신민회의 창건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이 처리되었다. 먼저 신민회의 회칙에 관한 것인데 이는 안창호 등이 미국에서 초안한 <신민회취지서>와 <신민회통용장정>이 대체로 초안대로 통과되었다. 단 본부의 설치조항만을 수정하여 본부는 서울에 두고 미주에는 다른 도와 같이 감독을 두기로 하였다. 또 하나는 조직기구와 그 책임자의 선임인데, 양기탁이 총감독을, 이동녕이 총서기를 맡고 안창호는 집행원을 담당하기로 하였다.¹⁰⁵⁾

나.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⁰⁶⁾

① 신민회의 궁극적 목적은 국권을 회복하여 자유국가 자유독립국을 세우고, 그 정치체제는 공화정치로 하는 것이었다.¹⁰⁷⁾

② 신민회는 우리가 국권을 박탈당한 것은 힘이 없었기 때문이므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신민회는 특히 기회론을 강조하였는데, 이 역시 실력이 양성되어 뒷받침되어야만 작은 기회도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③ 신민회는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신민회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의 부강은 국민의 부강에서 나온다는 사상에 의거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신민회가 신민을 강조하고 명칭을 신민회라 한 것도 이러한 사상에서 나온 것이다.

104) 안창호는 검사의 심문에 대해 신민회의 조직자로 이 7인을 거명하고 있다(도산기념사업회, 《속편 도산안창호》(1954), 86~87쪽).

105) 도산기념사업회, 위의 책, 87쪽.

106) 신민회의 목적과 이념은 <大韓新民會의 構成>·<大韓新民會趣旨書>·<大韓新民會通用規則>의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韓國獨立運動史》1, 資料篇(國史編纂委員會, 1968), 1,023~1,029쪽).

10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의 構成, 1,024쪽. 대한신민회의 심의는 한국어로 하여금 열국보호하에 共和政體의 독립국으로 함에 목적이 있었다고 하고 있다.

윤경로는 안창호가 신민회를 비밀조직으로 하려 했던 이유로 공화제 수립을 들고 있다(윤경로, 앞의 책, 185~186쪽).

④ 신민회는 신민은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自新’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신민회는 수백년 이래로 세계는 새로운 정치·법률·교육·공예·기술에 바탕을 둔 새로운 세계로 진보해 왔는데, 한국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퇴보하여 ‘진화의 천연공례’에 역행하여 왔다고 하여,¹⁰⁸⁾ 당시의 시대상황을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파악하였다. 한국의 보호국화는 생존경쟁의 시대에 자신하지 못한 결과라고 인식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은 오직 ‘자신’하는 것 뿐이라고 하였다.¹⁰⁹⁾

⑤ 신민회는 ‘자신’을 위한 방법으로¹¹⁰⁾ 첫째, 각처에 권유문을 전파하여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하고 신문·잡지 및 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계발하는 등 대중계몽에 주력하며, 둘째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각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함으로써 교육을 진흥코자 하였다. 셋째 실업가에게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하며 회원의 합자로 실업장을 건설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보이는 식산흥업을 꾀하고자 하였다.

⑥ 또한 신민회는 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기회가 올 때에 독립전쟁에 대비하고자 하였다. 이 문제는 미주에서 초안이 만들어졌을 때는 제시되지 않았고 그 후 국내에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첨가되어진 내용이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한국 민족의 독립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립군 양성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독립전쟁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여야 한다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즉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서북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였다가 장차 일제가 팽창하여 러시아나 청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를 기회로 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국내로 진공해 들어오고,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봉기해서 한국민족의 실력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것이다.¹¹¹⁾

108)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趣旨書, 1,024쪽.

109)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趣旨書, 1,026쪽.

11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通用章程, 1,028~1,029쪽.

111) 신민회의 독립군기지건설과 독립전쟁론에 대해서는 뒤의 독립군기지창건운동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신용하, 앞의 글(1985), 30~32쪽·100~124쪽.

다. 신민회의 조직

신민회는 앞서 보았듯이 비밀결사로 창건되고 조직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제의 방해와 탄압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국권회복운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일제의 법령이나 탄압조치에 의하여 해산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일제가 한국을 완전히 식민지로 강점하는 경우에도 독립운동 추진의 핵심 단체를 조직해 두려는 것이었다.¹¹²⁾

신민회는 비밀결사이기 때문에 그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를 정확히 알 길이 없다. 〈安昌浩豫審調書〉·〈朝鮮陰謀事件〉¹¹³⁾·〈不逞事件에 의해 본朝鮮人〉¹¹⁴⁾ 등을 종합해 보면 신민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조직체계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의 신민회 중앙조직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이를 총회라 지칭했으며 그 안에 會長 副會長 總監 議長 財務員 執行員 監察員을 두었다. 중앙총회 밑에는 각 도별로 1개의 도지부가 있었는데 이를 監督府라 하고 그 책임자로 道總監을 두고 각 도별로 회원을 지도토록 하였으며, 의결기관으로 평의원을 두었다. 감독부 밑에는 總監所가 있었는데 이는 5개군에 1개씩 설치하였다. 그 아래 군단위별로 司監所가 설치되었는데 장으로 郡監을 두고 의결기관으로 평의원을 두었다. 군감 밑에는 班을 편성하였는데 회원 60명마다 都班長을 두고 20명마다 副班長을 두었으며 5명마다 班長을 두었다. 5명 단위의 班조직이 기본 단위 세포조직이었던 것이다.¹¹⁵⁾

회원수는 비밀결사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나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볼 때 1911년 9월 신민회가 해산당할 때의 회원수는 대체로 800여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민회는 언론계·기독교계·교육계·실업계·무관출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망라하고 과거의 독립협회와 당

윤경로, 앞의 책, 261~267쪽.

112) 도산기념사업회, (《속편 도산안창호》, 1954), 〈安昌浩豫審問調書〉, 89~90쪽.

113) 山縣五十雄, 《百五人事資料集》3-朝鮮陰謀事件-(영인본, 高麗書林, 1986).

114) 國友尙謙, 《百五人事資料集》2-不逞事件ニ依ツテ觀タル朝鮮人-(영인본, 高麗書林, 1986).

115) 신용하, 앞의 글(1985), 33~35쪽.

윤경로, 앞의 책, 204~210쪽.

시의 대한자강회·서우학회 등 애국계몽단체의 정예분자들을 주축으로 조직되어 8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한 전국규모의 비밀결사였던 것이다.

신민회 조직의 사회적 기반은 105인사건 때 판결받은 인사의 직업적 분포로 보아 신흥시민층과 신지식층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이것은 신민회의 운동이 민중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성격은 시민적 특성을 강하게 갖도록 조건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¹¹⁶⁾

(2)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은 합법적 표면단체를 통한 운동과 비합법적인 지하운동을 통한 운동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교육구국운동·국민계몽운동·경제구국운동 등은 전자의 방법으로, 독립군기지건설운동은 후자의 방법으로 전개되었다.

가. 교육구국운동

신민회가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양성운동 중 가장 기본으로 하였던 것이 신교육구국운동이었다. 신민회의 창건 당시 이미 교육구국운동이 전개되고 있었으나 이것이 열정적으로 불붙고 1907년 이후에 전국적으로 신교육열이 붐을 이루어 민중들이 자발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 신식학교를 설립한 것은 신민회의 영향이 컸다고 하겠다.

신민회의 교육구국운동은 첫째,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을 위한 신교육의 절실한 필요를 계몽하여 학교설립을 유도하고, 둘째 각지에 설립된 학교의 교육방침을 국권회복에 부합하도록 지도하며, 셋째 신민회 스스로 시범학교를 설립하고 민족교육을 실시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향의 교육구국운동은 특히 학교설립에서 다른 그 어떤 단체나 학회보다도 그 역량을 크게 발휘하였다. 신민회가 설립한 학교는 ①

116) 신용하, 위의 글, 37쪽. 105인사건 때 판결을 받은 인사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상업이 31.97%, 공업이 5.75%로서 시민층이 전체의 37.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식층은 교사가 22.95%이고 학생이 15.57%로서 38.52%를 차지하고 있다. 시민층과 신지식층만도 전체의 76.23%를 차지하고 있다.

이승훈이 중심이 되어 평북 정주에 세운 五山學校,¹¹⁷⁾ ②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윤치호·이중호 등이 평양에 설립한 중등학교인 大成學校,¹¹⁸⁾ ③ 이동휘에 의해 설립되었지만 운영난으로 일시 폐교되었다가 다시 이동휘에 의해 재건된 普昌學校,¹¹⁹⁾ ④ 義州·龍川 지회 회원들이 의주에 설립한 養實學校, ⑤ 신민회 정주회원들이 정주에 세운 新安學校, ⑥ 신민회 納淸亭 지회 회원들이 평안북도 남청정에 세운 嘉明學校, ⑦ 安興學校와 普達學校를 신민회가 주도하여 통합하여 설립한 協成安興學校, ⑧ 宣川에 세워진 중학교급 新興學校, ⑨ 신민회 郭山 지회 회원들이 설립한 興襄學校, ⑩ 이동휘가 1909년 봄에 함경북도 永興邑에 있던 3개 학교를 통합하여 설립한 明倫學校, ⑪ 함북 鏡城에 세워진 중학교급의 경성학교 등이며, 그 밖에 楊山學校, 안악군면학회 師範講習所, 西北協成學校 등도 신민회와 관련하여 운영되었다.¹²⁰⁾

그 중 신민회의 입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학교가 대성학교였다. 대성학교는 신민회의 이념과 목적에 따라 세운 학교이기에 교육의 목표를 민족운동의 간부양성과 국민교육의 사범양성에 두어,¹²¹⁾ 이 학교에서는 지식개발뿐만 아니라 애국주의와 건전한 인격의 양성을 강조하였다. 우선 이 학교는 애국주의를 고취하기 위하여 모든 교과목과 강의안에 애국을 집어 넣었으며 또한 매일 조회에서도 애국가를 부르고 반드시 애국에 관한 훈화를 새겨듣고 익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체조에 큰 비중을 두었다.¹²²⁾ 이 학교는 원래 군대의 사관이었던 鄭仁穆을 체조교사로 초빙하여 군대와 같이 강력한 체육과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전술 강의까지 시행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누적된 文弱의 폐단을 극복하여 청산하자는 것이었다. 또한 대성학교는

117) 《大韓每日申報》, 1907년 12월 11일, 광고·1910년 1월 8일, 학계 〈오산홍학〉.

118)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15일, 광고·1908년 9월 6일, 광고.

주요한, 《安島山全書》上(三中堂, 1971), 78~93쪽.

119)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14일, 잡보 〈李氏閒養〉·1907년 12월 7일, 잡보 〈筆下長江〉·1908년 2월 25일, 잡보 〈江校復興〉·1908년 3월 18일, 잡보 〈江郡學風〉·1908년 3월 4일, 잡보 〈學會組織〉.

120) 신민회가 설립한 학교들에 대한 설명은 신용하, 앞의 글(1985), 49~58쪽 참조.

121) 李光洙, 《島山 安昌浩》(1948), 25쪽.

122) 김형식, 〈평양대성학교와 안창호〉(《삼천리》 1932년 1월호).

주요한, 앞의 책, 89쪽.

건전한 인격의 양성을 위해 誠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학생의 자치를 권장하고 자치훈련을 시켰다.¹²³⁾

한편 신민회의 교육구국운동은 학회의 설립과 지도를 통하여도 추진되었다.¹²⁴⁾ 신민회는 각지에 학회를 조직하는데 앞장섰는데 安岳郡勉學會·海西教育總會·平壤靑年勸獎會·練學會·同濟會 등이 그 예이며, 때로는 서우학회·한북흥학회 등 기존 학회가 서북학회로 통합 재조직되는데 관여하기도 하였다.

나. 대중계몽운동

신민회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계몽운동은 계몽강연활동과 서적·잡지출판활동·청년운동 등으로 전개되었다.

신민회 회원들이 큰 성과를 낸 계몽강연은 주로 각종 학회의 통상회와 토론회·강연회·친목회·학교·교회·운동회와 각종 집회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이 계몽강연을 통하여 강조한 것은 애국주의·국권회복·민권사상·신사상·신지식·신산업의 계몽·구습타파·교육구국운동과 학교설립의 고취, 자발적 의무교육의 실시, 학회활동 고취, 민지 단합의 고취, 실력양성의 호소 등이었다. 대표적 연사는 안창호·이동휘·전덕기·최광옥·윤치호·이상재·최병현·옥관빈·장웅진·정운복·여준·이학필·안병찬·윤기섭 등이었다. 특히 안창호·이동휘·최광옥·이상재·윤치호의 연설은 전국적으로 이름이 높았으며 그들의 강연이 있다고 하면 군중이 몰려들어 곧 대집회가 되곤 하였다.

신민회원들의 강연은 민중들에게 새로운 애국적 동기와 각성을 제공해 줌으로써 민중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분발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양성운동에 나서게 하고 애국계몽운동을 전국적으로 파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¹²⁵⁾

신민회의 잡지·서적출판활동은 계몽강연과 마찬가지로 대중계몽을 위한

123) 대성학교의 교과과정에 대해서는 신용하, 앞의 글(1985), 58~62쪽 참조.

124) 윤경로의 경우 신민회가 표면에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개 단체를 필요로 하여 학회설립과 지도에 나섰다(윤경로, 앞의 책, 232쪽).

125) 신용하, 앞의 글(1985), 71~75쪽.

이재순, 앞의 글, 13쪽.

방법으로 많은 효과를 보았다. 신민회는 따로이 그 자체의 독자적인 신문은 간행하지 않고 총감독이 된 양기탁이 경영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활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가 창건됨과 함께 양기탁이 신민회의 총감독이 되고 논설위원과 사원들이 거의 모두 신민회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신민회의 기관지로 전환되어 활용되었다.¹²⁶⁾

신민회의 잡지·서적출판을 서울에서 담당한 인사는 崔南善이었는데, 그는 신민회의 외곽잡지로서 1908년 11월에 《소년》을 창간하였다. 이 잡지의 편집 방침은 소년들에게 애국주의적 국사와 지리·문학을 가르쳐서 청소년들을 장래 국권회복의 일꾼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소년》에는 국내외 偉人英雄傳·海上大韓史·國內外戰紀·地理解說·國史解說·世界史解說 등이 기획물로 실렸다.¹²⁷⁾

신민회는 출판사업을 위한 외곽단체로 1910년 10월 최남선을 중심으로 朝鮮光文會를 조직하였다. 이는 신민회 회원 중에 민족문화와 근대국사학의 창건에 관심을 갖고 조선고전의 보존과 간행을 주장하는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발족한 것이었다. 광문회는 많은 서적을 간행할 계획이었으며, 실제 간행한 서적은 東國通鑑·三國史記·東國兵鑑·燃藜室記述·擇里誌·道里表·山經表·東國歲時記·訓蒙字會·雅言覺非·大同韻玉·尙書補傳·海東小學·熱河日記 등이었다.¹²⁸⁾

또한 신민회는 서적의 출판과 공급을 목적으로 1909년 7월 평양·서울·대구 등지에 이승훈과 안태국을 중심으로 太極書館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안악 군면학회에서 1907년 도서의 출판과 공급을 위해 勉學서포를 설립하였다.¹²⁹⁾

126)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신민회가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인용하였다고 증언하였다(애국동지원호회편, 《한국독립운동사》, 1956, 91쪽). 당시 대한매일신보의 기자였으며 신민회의 회원이었던 張道斌은 신민회의 기관지가 대한매일신보였으며, 신민회의 본부는 대한매일신보사 안에 두었다고 증언하였다(張道斌, 〈暗雲 길은 舊韓末〉(《思想界》, 1962년 4월호).

127) 신용하, 앞의 글(1985), 77~81쪽.

128) 신용하, 위의 글, 82~84쪽.

129) 이광수, 앞의 책, 33~34쪽.

주요한, 앞의 책, 98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7월 1일·7일, 광고 및 1910년 3월 6일, 광고.

이러한 신민회의 국민계몽운동은 사회일반에 널리 애국심과 독립의지를 심어주었고, 다수의 실업가와 지식인을 감화시켜 국권회복운동에 헌신케 하였으며 각 지역의 유지와 민중들의 교육열을 자극하여 무수한 학교가 설립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신민회의 청년운동은 청년학우회 활동에서 볼 수 있다. 1909년 8월 윤치호·박중화·최남선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청년학우회는 懋實·力行·自彊·忠實·整濟·勇敢 등을 강령으로 하여 표면적으로는 수양단체임을 표방하였으나,¹³⁰⁾ 내면적으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국청년단체였다.¹³¹⁾

다. 실업구국운동

신민회는 일제의 경제침략을 군사침략과 마찬가지로 극히 위협시하였으며 민족산업의 진흥이 신교육과 마찬가지로 바로 실력양성의 길임을 특히 강조하고 이 부분의 사업을 매우 중요시하였다. 특히 신민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서북지방의 상공인이었으므로, 일인들의 경제적 침탈은 신민회 회원들의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신민회는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국민적 각성을 촉구하고 전통적 상공업 천대사상을 공박하여 상공업의 중요성을 일깨웠으며, 산업진흥이 애국이고 곧 구국임을 강조하는 경제계몽운동을 폈다. 또한 평양에서 안창호·안태국 등이 상업회의소·협동회 등의 상인단체를 조직하여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일으킨 것처럼 신민회 회원들은 한국상인의 상권보호운동도 전개했다.¹³²⁾

나아가 신민회는 민족산업자본을 일으켜 일제의 경제침략에 대항하고 민력을 양성키 위해, 우선 신민회 회원들이 출자해서 시범적인 공장과 회사를 세워 실업가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영업방침을 지도함으로써 민족산업의 발흥을 촉진하고자 하였다.

신민회가 이러한 목적으로 세운 시범공장으로 평양 마산동 자기회사를 들

130) 《大韓每日申報》, 1909년 8월 17일, 잡보 〈청년학우회취지서〉.

131) 윤경로, 앞의 책, 234~235쪽.

신용하, 앞의 글(1985), 92~93쪽.

132) 이재순, 앞의 글, 18쪽.

수 있다. 이 회사는 이승훈을 중심으로 한삼현·윤재명·정인숙·윤성운·전재풍·이덕환·최유문 등이 발기위원이 되어 주식회사를 창립하기로 하고 주주를 모집하였다. 처음에는 주식주를 200주로 하였다가 다시 1,000주를 증가시켜 1,200주를 모집하고 일주금을 50원으로 하여 총자본금을 6만원으로 하였다.¹³³⁾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의 주식모집은 호조를 보여 총자본금이 모두 모여서 1909년 2월 22일 평양 관동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평양 마산동에서 정식으로 자기제조주식회사를 발족시켰다.¹³⁴⁾ 그러나 이 회사는 그다지 성공을 거둔 것 같지는 않다.¹³⁵⁾

신민회는 이 밖에 평안북도 納淸亭에 무역상사 겸 도소매상회사였던 協成同事를 설립하였다. 1908년 2월에는 평북 용천에 무역상사 겸 도소매상회사인 商務同社와 商務同事總支店을 설립하였다. 상무동사는 100여 명의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형식을 갖춘 상사로, 출자자 가운데 많게는 1,000원에서 적게는 몇 십원까지 출자해 이를 자본금으로 상무동사 총지점을 설립 운영하였다.¹³⁶⁾ 그리고 신민회는 인천에 있던 이탈리아인 巴馬 소유인 무역회사 파마양행과 계약하여 대리로 경영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품을 배척하고 그 밖의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직수입하여 협성동사와 상무동사에 공급하였으며 신민회 계통회사들의 수출입업무를 담당하였다.¹³⁷⁾ 또한 신민회는 태극서관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이는 각 학교에 교과서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을 뿐 아니라 조선광문회에서 발간된 서적을 유포하고 《소년》잡지와 《대한매일신보》의 판매망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¹³⁸⁾ 그 외에 신민회는 황해도 안악에 小紡織工場과 小煙草工場 등을 세웠고, 사리원에 모범 농촌을 건설하려는 계획도 세웠다.

133)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16일, 광고·1909년 2월 9일, 광고.

신용하, 앞의 글(1985), 88쪽.

134)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9일, 광고.

135) 윤경로, 앞의 글(1922), 154~155쪽.

136) 《大韓每日申報》, 1909년 1월 17일, 광고·2월 28일, 광고.

조선총독부, 《조선음모사건》, 27·120쪽.

윤경로, 앞의 글(1992), 142~148쪽.

137) 金道泰, 《南岡 李昇薰》(기독교문사, 1950), 98쪽.

138) 윤경로, 앞의 글(1992), 156~159쪽.

이러한 신민회의 민족산업운동은 교육구국운동처럼 큰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그러나 신민회의 민족산업운동은 신민회활동의 실제적 물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 신민회가 다른 단체들과 달리 비밀결사이면서도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뒷받침해 주었다.

라. 독립군기지 창건운동

신민회는 국내에서 위와 같은 실력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 국외에 무관학교를 설립하고 독립군기지를 창건하여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독립군이 국내에 진공하여 내외 호응하여 봉기해서 일거에 일본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자기 민족의 실력으로 국권을 회복할 준비를 하려고 하였다.

신민회가 국외 독립군기지와 독립군의 창건문제를 최초로 검토한 것은 신민회 창건 직후인 1907년 8월로 보인다.¹³⁹⁾ 그러다가 신민회가 독립군기지 창건과 무관학교 설립, 독립군창건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의병운동이 퇴조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1909년 봄이었다. 이 때 신민회는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의 적당한 지역을 물색하여 독립군기지를 만들고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군사관을 양성하는 문제를 협의했다.¹⁴⁰⁾ 드디어 1910년 3월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독립전쟁전략을 최고 전략으로 채택하고, 국외에 독립군기지와 그 핵심체로서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일제헌병대에 구속되었던 간부들은 원칙적으로 국외에 망명하여 이 사업을 담당하기로 하고, 국내에 남는 간부들과 회원들은 이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종래의 애국계몽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¹⁴¹⁾

1910년 4월에는 중국으로 망명한 안창호·이갑·신채호·김희선·이종호 등 신민회 간부들이 靑島會議을 열고 독립군기지 건설에 대한 구체적 시행

139) 신용하, 앞의 글(1985), 101쪽.

14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편, <독립군 전투사>(상)(《독립운동사》제5권, 1973), 162~163쪽.

元秉常, <新興武官學校>(《新東亞》1969년 6월호), 236쪽.

蔡根植, 《武裝獨立運動秘史》, 47쪽.

141) 이광수, 앞의 책, 50~53쪽.

책을 협의하여 신한민촌과 무관학교 설립안이 채택되어 일을 추진하였으나, 8월 일제의 강점소식이 전해지면서 독립군조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가 일제에 의해 좌절되었다.¹⁴²⁾

한편 국내의 세력은 종래의 사업을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1910년 8월 한국이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일부의 간부와 회원만을 제외한 채 서간도 지방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여 독립군기지 창건사업을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1910년 11월 서간도에 독립군기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12월 양기탁·주진수·이승훈·김구·이동녕 등이 양기탁의 집에서 전국간부회의를 열어 서간도 한인집단 이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했다.¹⁴³⁾

독립군기지 창건사업의 선발대 이동녕과 이회영 5형제, 주진수의 가족들은 1910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奉天省 柳河縣 三源堡로 이주하여 신한민촌을 건설하고, 토지개간과 농업경영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민단으로서 耕學社를 조직하고 사관양성기관으로 新興講習所(新興武官學校)를 창설하였다. 강습소는 본과와 특별과로 나누어 본과는 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특별과는 속성과로 사관양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1913년 강습소는 通化縣 哈泥河로 이주하고 학교 이름을 신흥무관학교로 하였다. 이 학교는 1920년 8월 폐교할 때까지 많은 독립군사관을 길러냈고 이들은 도처에서 헌신적으로 독립전쟁에 참여하여 빛나는 업적을 내었다.¹⁴⁴⁾

그리고 신민회 간부 이동휘와 이종호는 1913년에 汪清縣 羅子溝 大甸子에 또 하나의 무관학교인 東林武官學校를 설립하였다.¹⁴⁵⁾ 또한 신민회 간부 이갑 등도 만주 密山縣 蜂密山子에 제3의 密山武官學校를 설립하였다.¹⁴⁶⁾

142) 신용하, 앞의 글(1985), 106~108쪽.

윤경로는 당시 청도회의에서 “안창호측은 농지를 개척하여 이주한인의 생활터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이었고 유동열측은 신문과 잡지를 발간하여 독립정신을 계몽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에서 있었을 뿐 어느 쪽도 당장에 무장투쟁을 하자는 급진적 독립전쟁론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윤경로, 앞의 글(1992), 261~262쪽).

143) 신용하, 위의 글(1985), 109~113쪽.

144) 元秉常, 앞의 글(1969), 236~243쪽.

蔡根植, 앞의 책, 47~49쪽.

145) 姜德相 編, 《朝鮮》3 (《현대사자료》 제27권), 156쪽.

신용하, 앞의 글(1985), 119~121쪽.

이와 같은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창건운동은 원래의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분적 성공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이 운동은 우리 독립운동 사상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는 애국계몽운동과 의병운동을 발전적으로 종합한 전략으로, 특히 애국계몽운동이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실력양성운동에 그쳤다는 한계점을 극복해 주고 있다. 이는 1910년 이후 여러 민족운동세력의 기본적인 독립운동전략이 되었고, 3·1운동 이후 대규모의 독립군부대에 의한 무장투쟁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이후 서북간도와 노령을 무장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게 하였다.

4) 대한협회, 기타 학회들

(1) 대한협회

대한협회는¹⁴⁷⁾ 대한자강회가 1907년 8월 강제 해산된 3개월 후인 1907년 11월 10일 권동진·남궁준·여병현·유근·이우영·오세창·윤효정·장지연·정운복·홍필주 등 10인이 취지와 목적 및 강령을 포고한 후, 같은 달 17일 관인구락부에서 제1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규칙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설립되었다.¹⁴⁸⁾ 당시는 고종강제퇴위, 정미7조약의 체결, 신문지법과 보안법의 시행, 조선군대의 해산 등 일련의 일체의 주권강탈정책에 의해 합법적 테두리내에서의 계몽운동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한협회의 설립은 대한자강회의 설립과 비교할 때 소극적 활동을 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한 일본인 고문 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의 회고담으로 볼 때, 새로 설립되는 단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와 통감 이토 히로부미 사이에 어떤 형태로든 일

146) 姜德相 編, 위의 책, 157쪽.

147) 대한협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현중, <대한협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성격> (《1900년대의 애국계몽운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3).

김항구, <대한협회의 설립과 조직> (《차문섭교수화갑기념 사학논총》, 1989).

——, <한말 대한협회의 자강독립론> (《교수논총》 7-2, 한국교원대, 1991).

148) 《大韓協會會報》 제1호, <본회역사 및 결의안>, 38~39쪽.

제의 한국강점정책에 협력하고 공헌하겠다고 하는 양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을 가능하게까지 하여,¹⁴⁹⁾ 실제 설립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약을 갖고서 출발했음을 알 수 있다.

대한협회의 취지를¹⁵⁰⁾ 보면 이 역시 사회진화론적 시각으로 당시를 인식하여 지금은 생존경쟁의 시대이고 우자승 열자패가 대세라고 파악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우리 민족에 대한 자책과 자성으로 연결되어 지금 민족의 현실은 정치가 발전되지 못하고 교육 산업이 뒤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문명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 대한협회를 조직하는데, 그 취지는 “정치·교육·산업을 강구하여, 사회지식을 발달케 하고 신진 덕성을 도야하며 전국부력을 증진케 하여, 이로써 참다운 국민적 자격을 양성코자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미7조약의 체결 등으로 상황이 더욱 나빠졌는데도 대한협회의 취지는 대한자강회와 비교해 볼 때 국권회복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고,¹⁵¹⁾ 문명, 인민의 행복, 국민의 자격과 같은 새로운 사회에 맞는 인간상에 그 초점이 놓여 있다.

또한 대한협회는 현실극복을 위한 강령으로 교육의 보급, 산업의 개발, 생명재산의 보호, 행정제도의 개선, 관민폐습의 교정, 근면 저축의 실행, 권리·의무·책임·복종의 사상 고취 등을 제시하였는데,¹⁵²⁾ 이 강령 역시 국권회복을 전면에 내세우기 보다는 문명화와 개인의 인권, 국민자격의 획득과 같은 것에 치우치고 있다.

대한협회는 외형상 전국적 규모의 단체였던 대한자강회를 계승하고 있기에 외형상의 조직은 대한자강회와 유사하였다. 그리고 제1회 임원을 볼 때도 대한자강회의 임원들과 거의 유사하였다¹⁵³⁾. 설립경위의 의문점, 강령의 후퇴 등의 문제점이 있긴 하나 초기의 임원들은 항일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리

149) 김항구, 앞의 글(1989), 464쪽.

이현중, 앞의 글(1993), 148~151쪽.

150) 《大韓協會會報》제1호, 〈大韓協會趣旨書〉, 1~2쪽.

151) 김항구, 앞의 글(1989), 467쪽.

152) 《大韓協會會報》제1호, 〈本會綱令〉, 467쪽.

153) 《大韓協會會報》제1호, 〈本會歷史 및 決議案〉, 38~39쪽.

하여 당시까지는 일제에 대한 협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08년 6월 남궁억이 회장을 사퇴하고 7월 11일 김가진이 회장으로 선임된 후 대한협회의 회장을 위시하여 부회장(오세창) 등 임원들이 노골적으로 친일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때부터 대한협회는 임원들과 회원들 사이에 이분화 현상이 나타난다.¹⁵⁴⁾ 중앙조직은 평의원 30인, 찬의원 30인, 강령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교육부·실업부·법률부·재무부·지방부 등의 5개 부를 두었고, 간사원·회계·서기·회보발행소장·편집 겸 발행인 등의 기구가 있었으며, 본회 회원수는 1909년 3월까지 56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지방조직으로는 府와 郡에 지회를 설치하고 지회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는 분지회를 설치하였다. 1909년 3월경의 지회와 분지회의 총수는 60여 개로 경기 3개, 경남 6개, 경북 10개, 전남 4개, 전북 12개, 제주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평남 4개, 평북 7개, 함북 2개, 함남 6개, 황해 4개 등이며 회원수는 3,500명 내외였다.¹⁵⁵⁾ 중앙의 본회와 지회 분지회와의 관계는 본회가 지회 분지회의 설립 절차에 강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후기로 갈수록 대한협회가 일제와 타협적으로 되면서 본회는 지회의 독자적인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여 정부관련 및 일제와의 갈등을 줄이고 자신들의 지휘 감독하에 두었다.¹⁵⁶⁾ 당시 지회의 회원들은 임원들과는 달리 여전히 항일의식을 갖고 협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대한협회의 계몽사상은 앞서도 보았듯이,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현실인식에서 출발하여 한국과 한민족의 자책과 자성론으로 연결되고 현실극복을 위한 실력양성론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두드러진 것은 김가진 회장 출범 이후 상당수의 대한협회의 간부들이 제국주의 일본을 우자승의 위치에 있는 강자로 인식하고 그들에 의한 보호와 간섭을 어찌할 수 없는 대세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다.¹⁵⁷⁾

대한협회 역시 실력양성을 위한 급무로 교육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애

154) 이현중, 앞의 글(1993), 196쪽.

155) 김항구, 앞의 글(1989), 473~474쪽.

156) 《大韓協會會報》 제11호, 〈各支會에 對한 指明書〉, 49~50쪽.

157) 김항구, 앞의 글(1991), 126쪽.

국정신과 실학정신의 고취를 교육의 목표로 설정하였으며,¹⁵⁸⁾ 의무교육의 보급확대, 교육제정의 확충, 교과서의 합리적 개편 등의 방안¹⁵⁹⁾을 제시하였다. 또한 식산흥업에 의하여 국부를 증진시키는 것을 자강실현의 급무라고 인식하였다. 특히 상업과 농업을 중시하여 그 성격을 밝히고, 발달방안을 제시하였다.¹⁶⁰⁾

그리고 대한협회는 정치개혁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전개하였다. 정치개혁을 자강실현의 최급무로 파악하고 국가·정체·정부·정당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발표하였다. 먼저 국가론을 보면 국민주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로 생각하는 국민국가론을 전개하였다.¹⁶¹⁾ 그리고 국민국가를 실현하는데 합당한 정치체제로는 입헌정체 더 나아가서 민주공화정체를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⁶²⁾ 이의 구체적 실천을 위한 정부형태로는 국민여론에 바탕을 둔 국민적 정부 즉 책임 내각을 합당한 것으로 생각하였다.¹⁶³⁾ 대한협회는 과거의 봉당은 공의보다 사리에 치우치는 편벽된 사당이며 근대의 정당은 정치상 동일한 주의를 가진 자들이 국리복지를 목표로 조직하여 공의를 존중하는 공당이라고 인식하고, 다수 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의 존재와 정당의 분립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인식하였다.¹⁶⁴⁾ 대한협회는 바로 자신이 전국의 사상을 통합한 민성

158) 申采浩,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속)〉(《大韓協會會報》제3호), 5쪽.

159) 여병현, 〈義務教育의 必要〉(《大韓協會會報》제2호), 10~11쪽.

張志淵, 〈교과서 검정에 관한 叢고〉(《大韓協會會報》제10호), 5~6쪽.

嵩陽山人, 〈教育普及에 對하여 發展의 方法을 先究함〉(《大韓協會會報》제12호), 11~14쪽.

160) 金명준, 〈殖産論〉(《大韓協會會報》제1호), 24쪽.

권동진, 〈實業精神의 如何〉(《大韓協會會報》제5호), 16~17쪽.

——, 〈상업발달의 要素〉(《大韓協會會報》제6호), 20~24쪽.

161) 金成喜, 〈정당의 사업은 국민의 책임〉(《大韓協會會報》제1호), 29~30쪽.

——, 〈論外交上經驗의 歷史〉(《大韓協會會報》제8호), 4쪽.

卞惠淵, 〈國民과 政治의 關係〉(《大韓協會會報》제7호), 30쪽.

162) 元泳義, 〈政體概論〉(《大韓協會會報》제3호), 27~28쪽.

——, 〈政治의 進化(續)〉(《大韓協會會報》제7호, 25~26쪽, 제10호 28쪽, 제11호 23쪽).

163) 安國善, 〈정부의 성질〉(《大韓協會會報》제7호), 28쪽, 〈정부의 성질(속)〉, 제8호, 24쪽.

金成喜, 〈정당의 사업은 국민적 책임〉(《大韓協會會報》제1호), 30~32쪽.

발표의 정당 곧 국민의 소리를 대표하는 정당이며 사실상 국민적 정당이라고 간주하고, 국민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당인 대한협회가 중심이 되어 국민적 정부의 수립에 의한 국민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하였다.¹⁶⁵⁾ 대한협회의 활동은 강령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정치활동이 가장 두드러졌다. 창립 초기에는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였으나 김가진 회장 취임 이후를 보면 통감부의 침략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지 않고 <시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점진적인 개선방안만을 건의하고 있다.¹⁶⁶⁾ 그리고 ‘東拓法’에 대한 정부질의 대표과견,¹⁶⁷⁾ 순종 순회시 송병준의 망동에 대한 공박,¹⁶⁸⁾ 관리의 비행조사¹⁶⁹⁾ 등 국권회복과는 거리가 먼 활동을 하였으며, 심지어 1909년 9월 이후에는 일진회와의 연합설¹⁷⁰⁾에 휘말릴만큼 국권회복운동 단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성과가 컸던 부문은 교육활동으로, 향교의 강당을 학교로 만들어 쓰기도 하고, 학교를 많이 세웠으며, 《대한협회회보》에 교육 관련 연설문을 실고 교육부란을 따로이 두고 교육에 대한 글을 실어 교육계몽에 앞장섰다. 또한 회보를 통하여 산업·법률·실업·지지·역사·문예 등 각 분야에 걸쳐 신교육을 소개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다.¹⁷¹⁾ 그리고 술선수범하여 회원들의 자제를 학교에 입학시키고, 각 지방 지회에서 수시로 강연을 통하여 교육계몽에 힘썼다.¹⁷²⁾

또한 인권옹호라는 이름으로 법의 테두리에서 관리와 토호들의 탐학을 밝혀 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였다. 즉 세월에 관한 조사와 판정, 재산피

164) 安國善, <정당론> (《大韓協會會報》 제3호), 24쪽.

金成喜, <정당의 사업은 국민적 책임(숙)> (《大韓協會會報》 제2호), 21~24쪽.

165) 金嘉鎮, <개회취지설명> (《大韓協會會報》 제8호), 54쪽.

166) 李鉉淙, 앞의 글(1993), 160쪽.

167) 《大韓協會會報》 제6호, <본회역사>, 59~65쪽.

168) 《大韓協會會報》 제8호, 56쪽 · 제10호, 67쪽 · 제11호, 47쪽 · 제12호, 47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11 · 17 · 20 · 26일.

169) 《大韓協會會報》 제10호, 66~67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2월 10일 · 3월 12일.

170) 李鉉淙, 앞의 글(1993), 177~191쪽.

171) 《大韓協會會報》 참조.

172) 李鉉淙, 앞의 글(1993), 165 · 169 · 198쪽.

탈사건에 대한 조사와 진상규명 등에 앞장섰으며 근대법을 강연하여 주지시키는데 힘썼다.¹⁷³⁾ 그리고 伸理研究所를 설치하여 “토호탐학과 국민의 冤屈을 풀며 행정관의 간섭을 불허하고 재판의 公平堅確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며 누구든지 내외국인에게 박해받은 동포는 그 전말을 알리면 본회 부담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¹⁷⁴⁾

한편 회보의 발간과 강연을 통하여 대중계몽에 앞장섰는데 교육과 근대법 인권보호에 관한 것 외에 크게 비중을 두고 계몽하였던 것이 여러 가지 사회폐습을 교정하자는 것이었다. 관혼상제에 있어서 절약·복색개량·단발 실시·조혼금지·과부개가 등 전통적인 우리 사회에서 고쳐야 할 많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협회가 추구했던 것은 문명화와 법테두리에서의 정치활동이었음을 알 수 있고, 더욱이 1909년 이후 일부 임원들이 일제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일반회원들과 이분화 현상을 갖게 되고, 일진회와 제휴하려 했던 점은 대한협회의 애국계몽단체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한다. 외형적으로 대한자강회의 후신이었으나 실제 그 역할은 신민회에게 넘겨주고 대한협회는 이분화되어진 이질적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많은 오류를 지닌 단체로 전락하고 말았다.

(2) 계몽학회들

당시 학회들은 명칭에서 볼 때 교육운동만을 지도한 단체로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 지역 단체의 성격을 갖고서 교육운동뿐만 아니라 일반 계몽운동에 앞장섰다.

학회운동의 시작은 앞서 보았던 국민교육회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러나 당시 국민교육회의 활동은 애국계몽노선의 전개상황과도 관련하여 크게 활발하지 못하였고 후에 설립된 학회들이 각 지역민을 대상으로 구체적 활동을 하였던 것에 비하여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대중을 대

173) 《大韓協會會報》 제2호, 59~60쪽.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0일.

174) 《大韓協會會報》 제6호, 59쪽·제7호, 55쪽·제9호, 54쪽.

상으로 활동하였던 만큼 크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학회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1906년 10월에 西友學會와 漢北興學會가 설립되면서였다. 이후 많은 학회들이 설립되었는데 1907년 7월에는 湖南學會와 湖西學會가, 1908년 1월에는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가 西北學會로 통합하였으며, 한편 畿湖興學會가 창립되었고, 1908년 2월에는 관동 학회가, 3월에는 嶠南教育會가 설립되었다.

이들 학회의 활동은 1910년 8월 국권피탈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 동안의 모든 학회와 활동이 일치되게 전개된 것은 아니고 설립시기와 구성원, 설립 지역 등에 따라 그 활동성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우학회·한북흥학회·서북학회·기호흥학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가. 초기 학회의 사상과 활동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¹⁷⁵⁾의 설립은, 일단은 국민교육회의 활동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밖에 대한자강회의 주도층, 기독교청년회의 주도층, 전현직 무관출신의 애국계몽운동가 등 기존의 애국계몽단체 인사들의 활동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이들이 따로이 지역단위의 단체를 설립한 것은 민족적 위기의식을 최대한 결집시켜 국권회복의 의지를 키우고 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역인을 대상으로 차근차근 쌓아올려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목표와 취지를 보면, 이들의 궁극 목표는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자유독립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이들은 당시대를 사회진화론적 인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지금은 제국주의시대로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나 민족이 약한 나라나 민족을 침탈하는 우승열패·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적용되는 시

175) 서우학회·한북흥학회에 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상준, 〈서우학회에 대하여〉(《역사교육론집》 1, 1980).

이송희, 〈한말 서우학회의 애국계몽운동과 사상〉(《한국학보》, 26, 1982).

——, 〈한말 한북흥학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고찰〉(《이화사학연구》 15, 1984).

——, 〈한말 애국계몽사상과 사회진화론〉(《부산여대사학》 2, 1984).

——, 《대한제국말기 애국계몽학회연구》(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학회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2, 국사편찬위원회, 1987).

대이므로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권사상에 입각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은 국민을 기반으로 하는 민력양성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 실력양성에 필수적인 것이 단결력이라고 강조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민력양성을 위해 단체설립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기본인식 위에서 민력을 양성하고, 민력을 결집키 위한 사업으로 민중계몽·교육사업·청년층 지도 등을 내세웠다.¹⁷⁶⁾

이들의 활동을 보면, 무엇보다 교육운동을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먼저 일반대중들에게 학회의 총회·통상회·운동회 등의 강연회를 통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신교육의 절실한 필요를 계몽하고 학교설립 등의 신교육 실시를 촉구하였다.¹⁷⁷⁾ 그리고 학교가 설립되어 신교육이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한 교과서가 없고 교육방향이 확고하지 못하며 자금이 넉넉치 않아 학교운영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면 교육의 효과를 올릴 수 없다고 보아 평안남북도·황해도·함경남북도·사립학교 교육을 지도하였다. 또한 漢北學校·서우학교·사범야학교 등 학교를 직접 설립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양성에 주력하였으며,¹⁷⁸⁾ 관서·관북지방의 유학생들에게 애국주의를 함양하고 국권회복을 위해 행동하도록 지도하였다.¹⁷⁹⁾

서우학회와 한북흥학회는 민력을 양성키 위해 교육운동에 못지 않은 중요 사업으로 대중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 대중계몽의 중요 방법은 계몽강연활동으로서 학회들은 연설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국권회복에의 의지를 심어주고 그를 위한 애국계몽사상을 일깨우는데 주력하였으며, 민권사상을 강조하고

176) 서우학회의 취지와 목표는 〈본회취지서〉(《西友》제1호), 1쪽.

한북흥학회의 취지와 목표는 《大韓每日申報》, 1906년 10월 30일, 잡보 〈한북흥학회취지서〉.

177) 《皇城新聞》, 1906년 11월 9일 잡보, 〈한북흥학회연설〉·11월 20일, 잡보 〈漢北開會〉·1907년 3월 29일 잡보, 〈善校大振〉.

178) 《皇城新聞》, 1906년 12월 29일, 〈漢北義塾學員募集廣告〉·1907년 1월 16일, 잡보 〈漢北興學〉.

《西友》제2호, 〈광고〉.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6일, 잡보·3월 3일, 잡보·10월 16일, 광고.

《皇城新聞》, 10월 17일, 광고·11월 14일, 잡보 〈서우설교〉.

179)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잡보 〈서북친목〉·〈서북학생친목회〉.

《皇城新聞》, 1907년 3월 15일, 잡보 〈학생친목〉.

근대 국민국가의 건설, 사회혁신의 추구, 신사상의 수용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민력양성의 방법으로 신교육론·실업진흥론·단체론을 강조하였다.¹⁸⁰⁾ 서우학회는 학보 《西友》를 발간하고 국권회복을 목표로 실력양성론을 강조하여 대중계몽에 힘썼다.

또한 서우학회와 한북홍학회는 민력을 양성하기 위한 또 하나의 사업으로 청년운동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西北學生親睦會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¹⁸¹⁾ 이러한 사업 외에도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으며,¹⁸²⁾ 특히 한북홍학회는 최익현이 죽자 의금모집을 전개하기도 하고 이용익의 죽음, 이준의 파면에 대하여 사후책을 세우는 등 당시의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현실적인 대책에 부심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학회들의 활동에 힘입어 관서 지방을 필두로 관북지방에서 애국계몽운동이 가장 활발히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는 1908년 1월 두 학회의 서북학회로의 통합으로 이어졌다.

나. 후기 학회의 사상과 활동

애국계몽학회운동은 1907년 중엽에 이르러 관서·관북지역에서 뿌리를 내려 일정한 성과를 거두게 되자 전민족적·전국가적 차원으로의 확산을 시도하였다. 바로 이때 정미7조약의 체결과 군대해산, 신문지법과 보안법의 공포 등 일제의 탄압책과 탄압기구가 강화되어 갔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운동을 확산시켜 나가야만 했으며, 또 한편으로는 탄압에 맞서 역량을 통합해야만 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서북학회는¹⁸³⁾ 1908년 1월 서우·한북홍학회가 발전

180) 서우학회의 대표적 연사는 정운복·안창호·김명준·김유탁·유동작·최광옥·이갑·박은식·이승훈 등이었는데, 특히 안창호는 대표적 웅변가로 강연에 적극 참여하였다. 한북홍학회의 대표적 연사는 이준·이동휘·이종호·정진홍·강윤희 등이었는데 이준·이동휘의 활약이 눈부셨다.

181) 서북학생친목회는 서우학회회원인 한광호·한경렬과 한북학회인 윤익선이 발기인이 되어 1907년 3월에 설립되었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6일, 잡보 〈西北親睦〉·〈西北學生親睦會〉 및 《皇城新聞》, 1907년 3월 15일, 잡보 〈學生親睦〉 광고).

친목회는 관서 관북지역 청년들을 국권회복운동의 지도자로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6일, 잡보 〈西北學生親睦會趣旨書〉).

182) 《皇城新聞》, 1907년 4월 10일, 잡보 〈漢會報債發起〉·8월 8일, 잡보 〈總會公報〉.

183) 서북학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한국학보》 31·32, 1983).

적으로 통합되어진 것이고 기호흥학회는¹⁸⁴⁾ 1908년 1월 애국계몽운동의 전국적 확산과정에서 그 설립을 보았다.

이 두 학회는 거의 같은 시기에 설립되었으면서도 많은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서우·한북흥학회의 서북학회로의 통합은 1907년 3월의 서북학생친목회 결성과 4월의 신민회 창립이 그 실질적 계기가 된 것으로 기존 학회의 통합과 활성화의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기호흥학회는 앞서의 학회활동의 영향으로 설립된 것으로 인적 기반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에 두고 있었지만, 설립주체세력들은 서북학회와는 달리 전 현직의 고위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학력도 일본유학을 다녀온 인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⁸⁵⁾

이러한 차이점은 취지와 목표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서북학회의 궁극 목표는 국권을 회복하고 인권을 신장하여 근대문명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특히 그 정체를 입헌공화제로 하는 근대적 자유독립국을 강조하였다.¹⁸⁶⁾ 이에 반하여 기호흥학회는 국권을 회복하고 민족을 살리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¹⁸⁷⁾ 즉 국민국가에 대한 이상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민에 대한 개념이 희박하고 모든 것을 지배층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차이점은 서북학회·기호흥학회의 활동에서도 잘 드러난다. 먼저 서북학회의 활동을 보자. 서북학회는 통합적인 애국계몽단체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특히 일제의 식민화정책 강화 속에서 그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방향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교육구국운동은 한편으로 종래의 운동을 좀 더 광범한 대중과 지역에까지

———,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사상〉(《부산여대사학》 1, 1983).

———, 앞의 책.

184) 기호흥학회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李鉉淙, 〈畿湖興學會에 대하여〉(《史學研究》, 21, 1969).

이송희, 앞의 책.

———, 앞의 글(1987).

185) 이송희, 앞의 책, 118~119쪽 참조.

186) 鮮于鑑, 〈國家論의 概要〉(《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1호, 14~18쪽 · 제1권 제12호, 7~17쪽 · 제1권 제13호, 12~15쪽 · 제1권 제14호, 9~12쪽).

李東輝, 〈祝辭〉(《西北學會月報》 제15호), 8~9쪽.

187) 《畿湖興學會月報》 제1호, 〈분회취지서〉, 2쪽.

확산시켜 나갔으며, 또 한편으로는 일제 학부의 교육탄압정책에 투쟁하여 사립학교교육이 민족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길러주는 애국주의교육과 상무교육으로 일관되게 지도하고 일제의 탄압책동 속에서 살아날 수 있게 지도하였다.

학교설립 등의 신교육 계몽사업은 특히 31개 지역에 설립된 지회가 앞장서 지역대중을 계몽하고 유지들에게는 학교 설립을 권유하였다.¹⁸⁸⁾ 학회령·사립학교령 공포 후 37개 지역에 선정된 학사시찰위원은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민을 계몽시켜 교육구국운동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의무교육 실시를 주장하였다.¹⁸⁹⁾ 또한 서우·한북학교를 합쳐 서북협성학교 속성과를 설치하고 이어 3년 과정의 보통과를 설치하여 교사 양성에 주력하였다.¹⁹⁰⁾ 그리고 측량과를 설치하고(1908년 4월),¹⁹¹⁾ 노동층을 위해 水商夜學을 운영하였으며(1908년 2월),¹⁹²⁾ 농림강습소를 설치하였다(1909년 9월).¹⁹³⁾ 특히 서북학회는 일본측의 교육활동 탄압과 관련하여 서북지역 각 사립학교의 교무지도를 주요사업으로 전개하였다. 이는 인가된 69개의 지교운동을 통해 전개되었다.¹⁹⁴⁾

서북학회의 애국신민 인재양성을 위한 대중계몽운동은 《서북학회월보》의 간행, 강연 토론, 청년지도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 역시 좀 더 광범한 대중을 애국계몽운동에 참여케 하자는 목적과, 일제의 탄압 속에서도 대중들로 하여금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 아래 추진되었다.

《서북학회월보》는 《서우》의 것을 그대로 이어 발간하기 시작하여 19호

188) 각 지회에서 학무회를 설치하여 의무교육실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평양과 강화 등에서의 의무교육실시, 각군 면학총회소 해서교육총회의 설치 등은 그 노력의 성과라 하겠다.

189) 이송희, 앞의 글(1987), 239쪽.

190) 《皇城新聞》, 1908년 4월 2일, 잡보 〈協成擴張〉·4월 12일, 잡보 〈學員募集〉.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5일, 〈학원모집광고〉.

191) 《皇城新聞》, 1908년 4월 17일, 잡보 〈測量生募集〉.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0일, 잡보 〈測量校試驗〉.

192) 《皇城新聞》, 1908년 1월 5일, 잡보 〈勞動開明〉.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5일, 잡보 〈奇哉水商〉.

193) 《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6호, 〈雜俎〉, 61쪽.

194)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128~129쪽. 각 지교는 서북학회의 지도에 따라 교육과정·학교규칙제정·교과서선정·교사선정 등의 문제를 풀어 나갔다.

(1910년 1월)까지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사상이 실려 있다.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사상은 사회진화론과 민권론, 특히 사회혁신론을 그 사상적 기반으로 신교육구국론과 실업진흥론을 골자로 하는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초기 학회들과 달리 새롭게 제기된 것은 신민사상과 입헌 공화제론이었다. 서북학회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民을 신사상·신지식·신사업으로 신인물로 만들자고 강조하였다. 신민의 요건으로 국가사상·권리사상·의무사상·진보사상과 단합·공리·공익·근면성·노동의 중시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서북학회는 초기 학회의 국민국가론에서 훨씬 발전된 구체적 국가상으로, 국체는 공화제도이며 정체는 입헌인 입헌군주제를 제기하였다.¹⁹⁵⁾

강연과 토론활동은 서북학회의 단체운동이 상당한 단계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신사상 고취에 관한 것이 아닌 운동확산과 일제의 탄압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관한 현실방안 등이었다.¹⁹⁶⁾ 학회의 계몽활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心學講演所의 설치(1909년 2월)로, 이는 서북협성학교의 주관으로 매달 한번씩 서북회관에서 열렸다. 설립취지는 청년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고 모든 민중들이 올바르게 살게끔 하기 위해 심성과 도덕을 연마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¹⁹⁷⁾

청년지도활동은 기존의 서북학생친목회와 신설의 서북학생토론회, 심학강연소 운영, 유학생지도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서북학회의 민족산업진흥운동은 타학회의 활동에서 볼 수 없었던 활동으로, 서북학회가 통합적인 계몽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음을 잘 드러내 준다. 이 사업은 실업부의 설치 운영을 통해 전개되었다. 실업부는 본부와 지부활동을 통하여 실업진흥을 대중에게 계몽하고 실업학교의 설립과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회원들에게 농·공·상 3과에 20만원을 출자케 하여 모범적인 민족산업을 운영 진흥하여 대중들에게 모델을 제시케 하

195) 애국계몽사상에 대해서는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사상〉 참고.

196) 《皇城新聞》, 1908년 1월 12일, 잡보 〈西北學校開校式〉.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14일, 잡보 〈西北學會盛況〉.

197) 《西北學會月報》 제1권 제10호, 19~21쪽, 〈心學講演〉.

였다. 또한 서북학회는 농림강습소를 설치(1909년 9월), 운영하였는데 7개월의 숙성과정으로 과수재배학·삼림학·토양학·비료학·가축학·수의학 등이 강의되었다. 농민연구회는 강습소 졸업생을 기반으로 농림을 통하여 실업진흥을 꾀하고 이로써 어려운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1910년 5월).¹⁹⁸⁾

이처럼 서북학회는 통합적인 애국계몽단체로 활동하였다. 이에 비하여 기호흥학회는 형식에 있어서는 초기 학회의 것을 답습하고 있으나 내용은 교육운동에만 한정되어 전개되었다. 그리고 지역적 차이 또 추진 주체의 성격으로 인하여 교육운동에서도 초기 학회나 서북학회와 비교하여 구국에의 목표가 훨씬 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시되었던 기호흥학회의 교육진흥운동은 학교설립 등의 신교육을 추구한 계몽사업과 기호학교의 설립 운영을 통한 인재의 양성, 기호지방 사립학교의 교무지도, 청년층의 지도 등 네 측면에서 전개되었다.

신교육을 위한 계몽사업은 각 지방인사와 향교, 군수에게 공함을 발송하고 신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설립을 촉구하였다.¹⁹⁹⁾ 또 18개 지역에 설치된 지회의 임원들이 각 면에까지 가서 지방민들에게 교육구국사상을 심어 주고 지역의 유지들에게 신교육의 장소를 제공하도록 권유하였다.²⁰⁰⁾ 기호학교는 교사양성을 목적으로 본과와 특별과로 출발하였는데(1908년 6월), 후에 3개월 숙성의 측량과가 설치되었다.²⁰¹⁾ 사립학교의 교무지도는 교사소개소의 설치, 사립학교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의 유지 등을 학부에 요청하는 등으로 이루어졌고, 지회의 경우는 사립학교 재정을 위해 후

198) 서북학회의 민족산업진흥운동은 이송희, 〈한말 서북학회의 애국계몽운동〉 참조.

199)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9일, 잡보 〈畿湖興學會에서 畿湖人士에게 發送한 全文이 如在하니〉.

《畿湖興學會月報》제1호, 48~49쪽, 〈지방에 발송한 공함〉·제2호, 58~60쪽, 〈公函各郡守〉·제9호, 45쪽, 〈公函各郡鄉校〉.

200) 《畿湖興學會月報》제7호, 56쪽·제9호, 46쪽.

201) 《大韓每日申報》, 1908년 5월 27일, 잡보 〈會移校接〉·6월 3일, 잡보 〈學員程度〉.

《皇城新聞》, 1908년 8월 26일, 광고 〈학원모집광고〉·9월 8일, 광고 〈測量學員募集廣告〉.

원자를 물색하여 기부금을 내게 하거나 본회에 보고하여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²⁰²⁾

기호흥학회의 대중계몽운동은 학보인 《기호흥학회월보》와 계몽강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기호흥학회월보》는 1908년 8월에 창간되어 12호까지 발간되었는데 학보의 체제는 《서우》나 《서북학회월보》와는 달리 교육 일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여기에서 기호흥학회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궁극의 목적이 국권회복과 민권신장에 있음을 밝히고, 국권회복을 위해서는 실력을 양성해야 하며 실력양성의 관건이 되는 것은 교육이라고 교육구국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교육은 신교육과 정신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단체활동을 강조하였다. 또 국권회복을 위해 실력양성과 더불어 해나가야 할 것이 과거의 폐습을 타파하는 것이라고 보고, 특히 구지식층이 고루하여 시대에 맞지 않은 학문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²⁰³⁾ 이 같은 교육을 통하여 실력을 양성하겠다는 기본 사상은 초기 학회나 서북학회의 주장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기호흥학회의 교육관에는 구국에 대한 강한 의지보다는 교육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교육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자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체육교육의 강조나 상무정신의 고취와 같은 미래의 실전을 준비키 위한 교과내용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 즉 기호흥학회의 교육관이 기능적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기호흥학회는 민의 개념이 희박하고 민권론이나 국민국가에 대한 이상을 뚜렷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서북학회가 신민사상 입헌공화제론으로까지 발전되어 나간 것과 비교하여 볼 때, 기호흥학회는 모든 것을 지배층 중심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기호흥학회의 계몽강연활동은 학회의 총회와 통상회를 통하여 전개된 만큼 활동범위도 넓지 못하였고, 강연의 내용 역시 지나치게 기호흥학회 자체 문제에 대한 것이었다.

202) 이송희, 앞의 글(1987), 249~250쪽 참조.

203) 이송희, 앞의 책, 127~134쪽.

이렇게 서북학회와 기호흥학회는 같은 시기에 설립되어 활동한 학회이지만 많은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학회 등 단체활동에 대한 일제의 탄압은 1907년의 보안법·신문지법으로부터 시작되어 1908년 8월의 사립학교령·학회령의 공포로 본격화되었다. 그리고 1908년 9월 교과용도서검정규정의 반포, 1909년 2월의 기부금품모집취체규칙, 4월의 지방비법의 공포, 2월의 출판법의 공포 등 일련의 탄압책은 학회활동에 큰 장애가 되었다. 그리고 1909년 후반에 접어들면서 학회운동 등 단체운동에 대한 내부분열책동으로 내부의 불분명한 인사들과 제휴하여 서북학회를 대한협회·일진회와 연합시켜 여론을 일한합병으로 끌어가려고 하였다. 10월에는 안중근의 이등박문 살해를 기화로 서북학회의 주도회원인 안창호·이동휘·유동열·이중호·김명준 등을 안중근과의 관련혐의로 구속하여 서북학회 분쇄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회운동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갔고, 여기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세 부류로 나뉘어졌다. 하나는 혁신적이며 철저한 세력으로 학회운동이 본래대로 전개될 수 없음에 독립전쟁전략을 내세워 적극적 무력투쟁을 준비하였다. 또 하나는 온건한 세력으로 학회운동이 여러 탄압책에 의해 심하게 저지당하였지만, 그 한계내에서 적절히 대처하여 민족사립학교를 살리고 인재를 양성하여 훗날 독립의 기초를 닦아 나갔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철저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인사들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부류라고 하겠는데 이들은 당시의 상황이 한일합병이 확실시되고 일제가 여론을 그 방향으로 끌어나가자 거기에 휩쓸렸다.

5) 애국계몽단체 활동의 역사적 의의와 그 한계

이상에서 먼저 초기의 계몽단체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전국적 규모의 대한자강회와 신민회를 집중적으로 고찰하여 보았다. 그리고 대한협회, 지역 단위의 단체인 학회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이렇게 무수히 설립되었던 계몽단체 활동의 역사적 의의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먼저 무엇보다도 계몽단체의 활동은 애국계몽운동이 전국적 규모의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대한자강회·신민회와 같은 전국 규모의 단체가 지회운동을 통하여 계몽운동을 광범한 운동으로 전개시켜 나갔고 학회와 같은 지역 단위의 단체가 설립, 운영되면서 운동이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둘째, 그리하여 계몽운동의 대중성을 확보시키는데 일조를 하였다. 물론 계몽단체의 주도층과 참여층을 보면 지식층 등 시민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독립협회 단계보다도 훨씬 광범한 지역에서 다양한 층까지 포섭하여 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바로 단체활동의 결과라고 하겠다.

셋째, 애국계몽운동이 교육운동과 대중계몽운동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이후의 민족해방운동의 밑거름이 되게 하였다. 물론 이 때의 교육운동의 교육내용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교육이 그 자체의 목적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소홀히 되고 지나치게 국권회복과 애국을 강조하여 국권주의적 인간을 길러내고 있었던 점 등이다. 그러나 이 때 민족교육을 통해 길러진 인재들이 이후 민족운동이 기본 역량이 되었던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고, 이 때 계발된 대중들 역시 후의 민족운동의 주요 역량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넷째, 신민회와 같은 강력한 단체의 출현으로 애국계몽운동을 단순한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실력양성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계몽단체들은 이에 못지 않은 한계점을 안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계몽사상가들은 사회진화론을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자기시대를 인식하고 여기에서 현실극복의 논리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일부의 인사들이 오히려 생존경쟁·약육강식의 인식에 기초하여 국권피탈의 원인을 내부로만 돌리는 자성론과 자책론에 빠져 패배주의로 흘렀다는 점이다.

그리고 1908년 이후 일제의 야욕이 본격화되면서 민족의식이 약하고 자기정체성을 찾지 못하였던 계몽단체의 일부 인사들은 일제에 타협적 방향으로 선회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단체의 내부에 분열양상이 보이고 때로는 친일단체와의 제휴설이 나도는 등 국권회복에의 의지가 약화되어가고 있었던

점을 볼 수 있다. 특히 대한협회의 경우 출발부터 한계점을 갖고 있었지만 1908년 이후에는 지도층에서부터 그러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의병운동에 대한 인식을 보면 국권회복에 대한 생각들이 편협하고 브르조아 중심적이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계몽단체들과 계몽사상가들 중 일부의 사람들은 의병운동을 현실에 맞지 않은 방법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는 계몽단체와 계몽사상가들의 현실인식이 극히 자기 계층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국민을 강조하고 국민주권국가를 주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민중관을 갖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신들의 시각에서만 보고 해결하고자 했음을 말하여 준다.

〈李松姬〉

2. 애국계몽사상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하여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체제로 편입된 대한제국 말기에 있어서, 한국 민족운동의 큰 흐름은 愛國啓蒙運動과 抗日義兵運動으로 전개되었다.

애국계몽운동은 근대 지식층이 주도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으로, 그 논리는 점진적 실력양성에 의한 獨立準備論이었으며, 항일의병운동은 수구 지식층이 주도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무장투쟁으로, 그 논리는 즉각결전에 의한 即時獨立論이었다. 한말의 민족적·국가적 위기에 대하여 애국계몽운동은 합리적 이성적인 측면의 대응이었고, 항일의병운동은 본능적·감성적인 측면의 대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은 외형적인 국가독립 회복운동에 그치지 않고 국민국가 건설운동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한말의 애국계몽사상을 국권회복의 논리와 국민국가건설의 논리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애국계몽사상의 개념과 형성

(1) 애국계몽사상의 개념

한말의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은 흔히 애국계몽운동이라 불리고 있으며, 그 사상은 애국계몽사상이라 불리고 있다. 그러나 그 운동과 사상의 개념과 용어는 학계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이 운동은 애국계몽운동·계몽운동·구국계몽운동·문화운동·애국문화운동·자강운동 등 다양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불일치는 ‘애국계몽’이라는 개념이 역사적 개념으로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애국계몽운동’이란 용어는 해방 후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孫晉泰는 1949년에 간행된 《國史大要》에서, 한말의 개화지식인들이, “남의 힘에 의뢰한 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장본이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독립을 싸워 얻어야 하겠다”는 자각에서, 학교·학회·종교단체를 만들어 신학문을 교육하고, 정치사상을 선전하며, 민족정신을 고취하여 완전한 독립을 추구한 운동을 ‘애국적 계몽운동’이라고 하였다.¹⁾ 이후 한말의 실력양성운동을 ‘애국계몽운동’으로 보는 시각이 보편화되었다.

예컨대 한말 애국계몽사상이란 1905~1910년 사이에 전개된 애국계몽운동을 이끌어 간 사상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라 하고, 애국계몽운동을 어느 시기에나 있을 수 있는 일반적 개념으로서가 아니고, 한말이라는 일정한 시기에 있었던 운동으로서 ‘역사적 개념’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1905년 11월 소위 을사조약에 의하여 국권을 박탈당한 이후, 개화자강과가 중심이 되어 완전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전개한 1905년~1910년 사이의 민력계발과 민족독립역량 양성운동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애국계몽운동을 정의하고, 그 운동 내용으로 ① 신교육구국운동 ② 언론계몽운동 ③ 민족산업전흥운동 ④ 국채보상운동 ⑤ 신문화·신문학운동 ⑥ 국학운동 ⑦ 민족종교운동 ⑧ 해외독립군기지 창건운동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곧 해외독립군

1) 孫晉泰, 《國史大要》(乙酉文化社, 1949), 138~139쪽.

기지 건설운동까지를 애국계몽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²⁾

한편, 1905년 11월 ‘보호조약’ 이후 신지식층의 개화사상이 애국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고, 이 애국계몽운동은 갑신정변—독립협회운동을 잇는 개화의 제3단계 운동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³⁾ 이 견해는, 애국계몽운동의 당면 목표는, 대중계몽과 학교교육을 통하여 民智를 열고, 민족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민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 궁극적인 목표는, 시기를 포착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정치적인 것이었으며, 동시에 조선왕조의 재건이 아니라 근대적 국민국가의 형성에 있었다고 보고 있다. 곧 국민국가 건설운동까지를 애국계몽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⁴⁾

한편, 한말의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은 이미 일제시대에 ‘계몽운동’으로 이해되었다. 黃義敦은 1926년의 〈光武隆熙時代의 啓蒙運動〉이란 글에서, 독립협회의 언론을 통한 민중계몽활동을 ‘조선의 계몽운동의 서광’으로 보았고,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 이후의 언론기관과 사회단체의 문화운동·정치운동·사회운동 등을 계몽운동의 眞面目 또는 민중전체의 각성적 운동으로 높이 평가하였다.⁵⁾

최근에도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을 계기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국민적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 전개된 실력양성운동을, 의병전쟁과 함께 구국운동으로 이해하되, 정치운동이 약화된 계몽운동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한말의 망국사태에 대처한 구국운동이 의병운동과 계몽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전제하에, 의병운동은 ‘구국의병운동’이라 하고, 계몽운동은 ‘구국계몽운동’이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견해는, 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계몽운동의 사상을 ‘한말계몽주의’ 또는 ‘계몽주의’라고 표현하고 있다.⁶⁾

2) 愼鏞度, 〈韓末 愛國啓蒙思想과 運動〉(《韓國史學》1,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0), 269·272쪽.

3) 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東京: 岩波書店, 1980), 247~248쪽.

4) 姜在彦, 《韓國의 近代思想》(한길사, 1985), 235쪽.

5) 黃義敦, 〈光武隆熙時代의 啓蒙運動〉(《新民》14, 1926).

——, 《韓國近世史論著集》1, 舊韓末篇 (太學社, 1982), 322~326쪽.

6) 趙東杰, 〈韓末啓蒙主義의 構造와 獨立運動上의 位置〉(《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研究》, 지식산업사, 1989), 97·108쪽.

한말의 애국계몽운동을 ‘문화운동’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일제 말기에 崔南善은 한말의 실력양성운동이 기본적으로 교화사업·학교설립·학회설립·어문학연구·사학연구·종교활동 등 문화분야의 운동이므로, 이 운동에 ‘문화운동’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⁷⁾

최근에도 애국계몽운동은 甲申政變·甲午改革·獨立協會運動의 맥을 이은 문명개화론자들이 주체가 되어, 신문·잡지 등의 언론과 학교설립의 교육을 통하여 전개한 문화운동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애국계몽운동자들의 민중에 대한 불신과 제국주의에 대한 인식의 불철저로, 그 운동이 개량적 문화운동에 그치고 말았다고 하여, 그 의의를 과소 평가하고 있다.⁸⁾

한편 애국계몽운동은 ‘애국문화계몽운동’ 또는 ‘애국문화운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컨대, 북한에서 간행된 《근대조선역사》는, 을사조약을 계기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애국문화운동을, 문화분야에서 민족 부르조아지의 제반 요구를 반영한 반침략·반봉건 운동으로 규정하고, 그 운동은 민족문화를 대중적·근대적 토대 위에서 발전시키는 계기를 열었으나, 일제의 침략과 봉건제도를 혁명적으로 청산하는데 이르지 못했다고 그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다⁹⁾.

애국계몽운동을 ‘자강운동’에 역점을 두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한말 보호국체제 하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은 무장투쟁노선의 의병전쟁과 실력양성노선의 자강운동으로 전개되었는데, 자강운동은 교육과 실업을 진흥함으로써 경제적·문화적 실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부국강병을 달성하여 장차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운동이었다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이 견해는, 본래 ‘애국계몽운동’이라는 용어는 주로 계몽운동이라는 운동방법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기업의 식산흥업이나 정치단체의 정치운동을 ‘계몽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하고, 당시 신교육운동·식산흥업운동·계몽운동의 슬로건은 모두 ‘자강’ 곧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이었다는 점을 들어, ‘애

——, 〈獨立運動史研究의 回顧와 課題〉(《정신문화연구》 25, 1895), 20·22쪽.

7) 崔南善, 《故事通》(三中堂, 1943), 245~246쪽.

8) 金度亨, 《大韓帝國末期의 國權恢復運動과 그 思想》(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88), 10·122~113쪽.

9) 이종현, 《근대조선역사》(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일송정 복간, 1988), 248~249·256~257쪽.

국계몽운동'을 '자강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

애국계몽운동은 한말의 망국적 보호국체제 아래서 문화적·경제적·정치적·군사적으로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애국계몽운동을 애국적 계몽운동 또는 애국적 문화운동으로 좁은 의미로만 볼 것이 아니고, 목적으로서의 애국운동과 수단으로서의 계몽운동으로, 또는 민중계몽의 방법이 강조된 모든 애국운동으로 확대 해석해 보면, '애국계몽운동'이란 용어가 결코 부적절한 용어는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편, 애국계몽운동과 그 사상의 전개 시기에 대하여, 첫째로 18세기 후반 실학파의 북학사상을 '조선의 계몽사상의 맹아적 형태'로 보는 시각이 있으며,¹¹⁾ 둘째로 아관파천 이후 독립협회의 민중계몽활동을 '조선의 계몽운동의曙光' 곧 계몽운동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¹²⁾ 셋째로 1904년의 러일전쟁과 1905년의 을사조약을 계기로 일본의 침략에 대응하여 전개된 구국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계몽운동'의 기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¹³⁾ 넷째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계기로 국권 일부의 상실과 이에 대응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애국계몽운동의 기점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¹⁴⁾

애국계몽운동을 한말의 민족운동으로 제한시켜 볼 때,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계기로 한반도가 사실상 일본의 준식민지로 전락한 상태에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목표로 하는 실력양성운동이 전개되었으므로, 1904년 러일전쟁과 1905년 을사조약의 시기를 포괄하여 애국계몽운동의 기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한말 애국계몽운동은 러일전쟁과 을사조약을 전후한 시기로부터 '한일합방' 때까지 전개된 개화지식인들의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이었다는 개념 정의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애국계몽운동이 국

10) 박찬승, 《한국근대 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17~18쪽.

11) 姜在彦, 《近代朝鮮の變革思想》(日本評論社, 1973), 208쪽.

12) 黃義敦, 앞의 글, 322쪽.

김종덕, 〈한말계몽운동의 계보와 성격〉(《한국의 사회와 문화》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73쪽.

13) 趙東杰, 앞의 글(1989), 111쪽.

14) 愼鏞廈, 앞의 글(1980), 269쪽.

권회복을 위한 정치운동을 등한시했다고 하여, 문화운동 또는 계몽운동으로 범위를 축소시켜 보는 시각이나, 민중에 대한 인식의 결여를 지적하여 그 평가를 절하하여 보는 시각은, 대한제국 말기에 폭넓게 전개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실력양성운동 곧 애국계몽운동의 민족운동사적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2) 애국계몽사상의 형성

이제 한말 애국계몽사상을 형성한 사상적 조류를 학계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實學思想이 한말 애국계몽사상을 형성한 사조의 하나가 되었다는 설은 오늘날 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다.

먼저 계보상으로 보아, “조선에서의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계몽사상은 18세기 후반기의 실학과의 북학사상을 그 맹아적 형태로 하고, 1870~1880년대의 개화사상은 계몽사상의 제 특징을 그 내실로서 구비하고 있다”고 하여, 실학사상·개화사상·애국계몽사상을 같은 맥락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특히 북학사상이 갖는 여러 특징, 구체적으로는 ① 세계지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토대로 한 ‘華夷之分’의 부정, ② 인간관·학문관·직업관에서의 봉건적 명분론의 부정, ③ 합리적 생산기술의 도입에 의한 생산력의 발전과 그것을 저해하는 구질서의 개조, ④ 개국론적 해외통상책과 서양기술자 초빙안 등에 주목하여, 북학사상이 근대적 사상으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는 ‘계몽사상으로서의 초기적 성격’을 가진다고 본다.¹⁵⁾ 곧 실학사상을 애국계몽사상의 始原의 사상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연관관계에 대해서는, ① 실학자들의 利用厚生과 實事求是 개념이 그대로 개화사상가에게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 ② 실학자들의 민족주의적 의식과 국학연구가 개화사상가들에게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 ③ 실학자들의 평등의식과 민권사상이 개화사상가들에게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 ④ 실학자들의 개국통상론·무역부국론이 개화파의 기술도입론

15) 姜在彥, 앞의 책(1973), 208~209쪽.

· 수입대체적 공업화론으로 연결 발전되었다는 점, ⑤ 실학자들의 영업자유론이 개화파에 계승되어 都賈革罷論·惠商工局革罷論·육의전 전매제도 혁파로 나타난 점, ⑥ 실학자들의 小作地均等化論·조세금납화론·농업기술론 등이 개화파에 의하여 계승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논증되고 있다.¹⁶⁾

실학사상과 개화사상은 인적인 맥락에서도 긴밀하였음이 밝혀졌다. 먼저 개화의 선각자 吳慶錫·朴珪壽·劉大致的 경우, 오경석의 사상은 실학자 朴齊家와 金正禧의 학문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고,¹⁷⁾ 박규수는 조부이며 저명한 실학자 朴趾源과 丁若鏞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으며,¹⁸⁾ 유대치는 오경석의 절친한 친구이며 사상적 동지였다.¹⁹⁾ 초기 개화인물 金玉均·朴泳孝·洪英植·徐光範·金允植·俞吉潐 등은 박규수로부터 개화교육을 받았고, 급진 개화파 인물들은 박규수 사후 유대치의 지도를 받았다.²⁰⁾ 魚允中은 정약용의 제자인 조부 魚命能으로부터 실학사상을 배웠고, 朴定陽은 실학자 洪淵泉의 제자였으며, 金弘集의 부친 金永爵은 서유구·丁學淵과 교우인 실학자였다.²¹⁾ 그리고 申觀浩·金綺秀·姜璋 등은 김정희의 제자였으며, 정약용 제자의 문하에서 신관호·申耆永·申正熙·魚允中·李沂·李道宰 등이 실학을 공부하였다.²²⁾

한편 실학사상이 개화사상을 통하여 애국계몽사상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애국계몽사상의 형성에 다대한 영향을 끼쳤음도 밝혀졌다. 곧 한말 애국계몽가들이 실학사상을 재발견하고 실학을 열심히 연구했으며, 실제로 실학사상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많은 지식과 사상, 관점과 신념, 그리

16) 金泳鎬, 〈開化思想의 形成과 그 性格〉(《한국사》 16, 국사편찬위원회, 1975), 258~274쪽.

17) 愼鏞廈, 〈吳慶錫의 開化思想과 活動〉(《韓國近代社會思想社研究》 일지사, 1987), 62쪽.

18) 金泳鎬, 앞의 글, 247쪽.

19) 李光麟, 〈숨은 開化思想家 劉大致〉(《開化黨研究》, 일조각, 1973), 72쪽.

20) 愼鏞廈, 〈개화당과 독립협회〉(《한민족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121쪽.

李光麟, 앞의 글, 78쪽.

21) 金泳鎬, 앞의 글, 255·258·273쪽.

22) 金泳鎬, 위의 글, 251~253쪽.

고 자부심을 공급해 주었다고 평가되고 있다.²³⁾

실학사상과 애국계몽사상의 직접적인 연관관계에 있어, 애국계몽가들이 國學을 중요시했던 실학적 전통을 계승하여 국학운동을 전개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張志淵·朴殷植·申采浩 등이 그러하며, 특히 역사연구에서의 계승관계가 지적되고 있다. 장지연은 자신의 학문적 계보를 실학자인 이익과 정약용에 두었고,²⁴⁾ 정약용의 학문을 更張維新의 뜻을 가진 학문이라고 높이 평가했으며,²⁵⁾ 정약용의 저작인 《목민신서》·《흠흠신서》를 출판하고 《我邦疆域考》를 증보 개정하는 등 정약용의 저작을 출간하였다.²⁶⁾ 박은식은 젊은 시절에 정약용의 제자인 신기영과 丁觀燮를 찾아가 정약용의 학문을 섭렵했으며,²⁷⁾ 신채호는 실학시대의 사학을 비판적으로 계승하고, 실학의 비판정신·개혁성·실증성·근대성을 수용하여 근대사학을 정립하는 계기를 이루었다.²⁸⁾

《皇城新聞》이 실학파의 학문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점도 지적되고 있다. 그들은 新舊學 절충의 필요성에서, 舊學 가운데 ‘英正時代의 실학’을 거론하고, 김육·유형원·이익·정약용·박지원·유득공 등의 실학자들을 열거했으며, 토지제도개혁론으로부터 농업기술문제, 상업문제, 신분개혁문제 등을 소개하였다.²⁹⁾ 이처럼 실학사상은 개화사상의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으며, 동시에 애국계몽사상의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둘째로 한말 애국계몽사상이 개화사상을 계승하여 형성된 사상이라는 설도 오늘날 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다.

한말 애국계몽사상은 사상적인 면에서 개화사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조선의 개항 초기에 ‘開化’란 용어는 開國과 동일시되었고 부국강병의 논리로 전개되다가, 1890년대 후반에는 物的 개화로서의 開物(산업의 근대화)과 人的 개화로서의 化民(인간의 의식과 지식의 근대화)을 결합한 용어로 정착되

23) 愼鏞廈, 앞의 글(1980), 277쪽.

24) 張志淵, 〈事略〉(《韋庵文稿》 권 12, 國史編纂委員會, 1971), 496쪽.

25) 張志淵, 〈題雅言覺非後〉(《韋庵文庫》 권 5), 192쪽 참조.

26) 姜在彦, 앞의 책(1973), 211쪽.

千寬宇, 〈張志淵과 그 思想〉(《白山學報》 3, 1967), 499쪽.

27) 愼鏞廈, 《朴殷植의 社會思想研究》(서울대 출판부, 1982), 4쪽.

28) 李萬烈, 《丹齋 申采浩의 歷史學研究》(문학과지성사, 1990), 100쪽.

29) 김도형, 〈애국계몽운동의 연구동향과 과제〉(《한민족독립운동사》 12, 1993), 73쪽.

있다고 이해된다.³⁰⁾ 이러한 개화사상이 독립협회운동가들에 의하여 국권과 민권을 축으로 하는 근대개혁사상으로 체계화된 것으로 보이며, 애국계몽사상의 국권회복론과 국민국가건설론은 개화운동의 인맥적·사상적 계승성을 지니면서, 국권침탈의 상황에 대응하여 운동과제의 초점을 전환한 데서 나타난 논리였다고 파악되고 있다.³¹⁾

또한 한말의 애국계몽사상은, 1905년 국권을 침탈당한 후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개화사상에서 전환된 것이며, 새로운 사태에 대응한 ‘개화사상의 변형’이라고도 표현된다. 특히 개화사상 중에서도 독립협회와 萬民共同會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이해된다. 따라서 한말의 애국계몽사상과 운동은 국권의 피탈이라는 새로운 사태 변화의 도전에 대한, 종래의 개화파·독립협회·만민공동회파의 응전의 양식이었다고 파악되기도 한다.³²⁾

결국 애국계몽운동은 1904년의 러일전쟁과 1905년의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제로부터 강요된 보호국체제하에서, 갑신정변·갑오개혁·독립협회운동으로 이어지는 개화자강계열의 운동을 계승하여 전개한 민족운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초기에 개화자강계열의 민족운동을 주도했던 독립협회가, 외세의 침탈로부터 국권의 상실을 막고 자주독립의 주권국가를 수립하려는 자주국권운동과, 지배층의 압제로부터 민권의 유린을 막고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려는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국정 전 분야에 걸친 일대 개혁을 통하여 근대적 자강체제를 수립하려는 자강개혁운동을 전개했는데, 이러한 독립협회운동을 직접적으로 계승한 운동이 애국계몽운동이던 것이다.³³⁾

한말 애국계몽운동은 인적인 면에서도 개화자강계열의 지식층이 중심을 이루었고, 특히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회원들은 대부분 애국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大韓自強會의 회장단과 평의원 역임자 43명 중 21명이 독립협회 출신이었고, 그 최고 지도층인 회장단과 평의장 역임자 6명 중 尹致昊·尹孝定·玄燦·林炳恒·張志淵·池錫永 등 5명이 독립협회 출신이었다.³⁴⁾ 그리고

30) 姜在彦, 앞의 책(1980), 177쪽.

31) 姜在彦, 위의 책, 247쪽.

32) 愼鏞廈, 앞의 글(1980), 277쪽.

33) 柳永烈, 《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일조각, 1997), 180쪽.

34) 柳永烈, 위의 책, 114~115쪽.

安昌浩·梁起鐸·全德基·李東輝·李東寧·李甲·尹致昊·朴殷植·申采浩·盧伯麟·李商在 등 독립협회 회원 30여 명이 신민회의 창립과 활동을 주도했고, 신민회 창립위원 7명 중 6명이 독립협회 출신이었다.³⁵⁾ 또한 李鍾一·鄭雲復·林炳恒·南宮櫛·柳瑾·張志淵·朴殷植·申采浩·羅壽淵·梁起鐸·安昌浩·李甲·吳世昌 등 독립협회 출신들이 제국신문·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만세보·대한민보 등 한말의 5대 애국계몽언론의 창간·경영·편집을 주도하였다.³⁶⁾

셋째로 한말 애국계몽사상의 형성에 社會進化論과 西洋啓蒙思想이 깊은 영향을 주었다는 설도 학계의 통설로 되어 있다.

1880년대에 개화지식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회진화론이, 1900년대에 이르러 주로 梁啓超의 《飲氷室文集》을 통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사회에 수용되었으며, 당시 제국주의가 팽배하고 국가가 멸망의 위기에 처한 한말에, “弱肉強食하고 適者生存한다”는 사회진화론이 보편화되어 애국계몽운동의 추진력이 되었다고 이해된다. 또한 한말에 사회진화론이 구국을 위한 강한 정치의식을 불러일으켰고, 위기극복을 위해 국민의 정신과 자세를 새롭게 하려는 新民思想을 주창케 했으며, 민족과 경쟁(투쟁)을 중심으로 한국사를 보려는 민족사관을 정립케 했다고 이해된다.³⁷⁾

한말에 유행한 적자생존·우승열패 등 사회진화론은 제국주의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이에 대항하는 自強論의 형성을 뒷받침하여, 애국계몽사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사회계약론·민권론·국민주권론·국민국가론 등 서양계몽사상이 국민을 주체로 하는 국권회복운동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던 것이다. 또한 한말에 있어서 사회진화론과 서양계몽사상의 도입에는 중국의 영향, 특히 康有爲의 저작들과 양계초의 《음빙실문집》 등의 저작들이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³⁸⁾

곧 한말의 애국계몽가들은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을 기본적으로 사회진화

35) 柳永烈, 위의 책, 197~198쪽.

36) 李海暢, 〈言論機關의 活動〉(《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74), 40~55쪽.

37) 李光麟, 〈舊韓末 進化論의 受容과 그 영향〉(《韓國開化思想研究》, 일조각, 1981), 286~287.

38) 愼鏞廈, 앞의 글(1980), 277~278쪽.

론적 시각에서 파악하여, 약육강식·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호국 상태로 전락한 근본적인 책임은 국가의 자강을 도모하지 못한 한국 자체에 있다는 자가반성의 입장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으로만 가능하다고 믿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론, 곧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자강독립론을 폈던 것이다.³⁹⁾

한편 한말의 사회진화론이 가지는 ‘경쟁과 진보’의 양면성에 주목하여, 진보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는, 근대주의에 빠져 제국주의를 용인하고 문명국 일본의 지도하에 문명개화를 달성하자는 논리로 발전하게 되었고, 민족간의 경쟁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제국주의 침략을 배격하고 민족주의로 발전하는 논리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우리 나라에 수용된 사회진화론은 독립협회운동에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패배주의적 민족주의와 국권론적 근대주의를 형성했다고 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거론하기도 한다.⁴⁰⁾

사회진화론은 원래 ‘경쟁을 통한 진보의 원리’로 사회의 변화 발전을 설명하며, 서양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관련하여 부르조아 계급과 제국주의 국가의 등장을 합리화하는 논리, 곧 ‘강자의 약자 지배의 논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그리고 한말에 유행한 사회진화론이 민족패배주의를 조장한 면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한말에 국권회복을 위하여 실력양성에 헌신했던 대다수의 애국계몽가들은, 제국주의의 속성을 당시 한국사회의 어느 계층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사회진화론을 기초로 하여 자강독립론을 확립하고 자강구국운동을 전개했으므로, 한말 애국계몽가들의 사회진화론은 ‘약자의 강자화를 위한 논리’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국권회복의 논리

(1) 자강독립론

한말 애국계몽파의 국권회복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실력 양성에 의한 국권

39) 柳永烈, 앞의 책, 316쪽.

40) 김도형, 앞의 글(1993), 80~81쪽.

회복이라는 自強獨立論이었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의 자강독립론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사회진화론에 기초한 자강독립론을 폈다.

사회진화론은 1880년대에 개화인사들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수용되기 시작하였고, 1890년대 후반 독립협회운동기를 거쳐,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기에는 ‘生存競爭’·‘優勝劣敗’·‘弱肉強食’·‘適者生存’의 용어가 당시 사회를 풍미하였다. 한말에 사회진화론이 본격적으로 수용되어 일반화된 데에는 양계초의 《음빙실문집》이 깊은 영향을 끼쳤다.⁴¹⁾

대한자강회 부회장 尹孝定은 〈생존의 경쟁〉이란 연설에서,

금일의 생존경쟁은 도저히 면코자 하여도 가히 면치 못할 것이니 … 개인의 생존경쟁뿐만 아니라 국가의 생존경쟁을 計圖치 아니함이 불가하니, 대저 優勝劣敗는 人事의 常이며 弱肉強食은 現世의 例어늘 … 생존경쟁을 不知하면 개인이 능히 노예의 耻를 요행히 면할 자가 없고, 생존경쟁을 不知하면 국가가 능히 版圖의 色을 불변할 자가 없다(尹孝定, 〈生存의 競爭〉(《大韓自強會月報》(이하 《月報》라 略함) 제11호), 6~7쪽).

고 하여, 생존경쟁의 원리 곧 사회진화론을 개인 대 개인, 국가 대 국가의 경쟁 등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원리로 인식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張志淵은 〈團體然後 民族可保〉라는 논설에서,

무릇 국가의 성립은 민족의 團體集合에서 말미암는 것이라, 비록 광막한 토지와 허다한 민족이 있다 해도 團合之義와 團合之力이 결핍하면 야만의 一部落에 불과하며, 오늘날 競爭極烈의 사회에서 어찌 劣敗漸滅의 근심을 피할 수 있겠는가. 무릇 優勝劣敗는 天演界의 公理라, 優劣의 道가 不一하나 단체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가 그 주요점이니, 단체 협동이 곧 민족을 보전하고 독립 기초를 공고케 하는 길이다(張志淵, 〈團體然後民族可保〉(《月報》제5호), 1~7쪽 축약).

41) 田口容三, 〈愛國啓蒙運動期の時代認識〉(《朝鮮史研究會論文集》15, 朝鮮史研究會, 1978), 92쪽.

李光麟, 앞의 글(1981), 257~266·286~287쪽.

愼鋪廈, 앞의 글(1980), 278쪽.

고 하여, 사회진화론적인 시각에서 국제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競爭極烈・優勝劣敗의 시대임을 강조했지만, 국내사회의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민족의 단합과 협동을 강조하였다.

大韓協會 교육부장 呂炳鉉은 〈의무교육의 필요〉라는 논설에서,

오늘날은 全球人族이 생존경쟁하는 20세기라. 이 경쟁의 결과가 반드시 優勝劣者敗로 돌아감은 대세일진대, 금일 我韓民族의 위치가 불행히 劣者敗의 地에 처함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남은 문명에 爭進하는데 우리는 昏愚에 甘處하고, 남은 실질적 학문을 힘쓰는데 우리는 허문적 학문을 숭상하였으니 이것이 큰 원인이라. … 금일 劣敗한 我韓民族도 養力蓄銳하여 高優勝捷할 날이 어찌 없으리요(呂炳鉉, 〈義務教育의 必要〉(《大韓協會會報》(이하 《會報》라 略함) 제2호), 9~10쪽).

라 하여, 당시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한민족이 劣敗者의 처지에 떨어진 책임은 문명과 실질적 학문에 힘쓰지 않은 우리 자신에 있다는 ‘劣敗者自責論’을 펴고, 우리도 실력을 양성하면 優勝者의 위치에 설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도 그 취지서에서, 국가의 독립은 자강 여하에 달려 있는데, 한국은 과거 自強之術을 강구하지 않아 인민이 우매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져서 외국의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 이는 모두 自強之道에 뜻을 두지 않은 까닭이라 하고, 奮勵自強이 국권회복의 길임을 천명하였다.⁴²⁾ 대한협회도 우국지사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한국이 외국의 지도 보호를 받는 것은 국가의 불운이며 국민의 치욕이지만, 그것은 개항 이래로 정부가 興國之策을 강구하고 인민이 愛國之誠을 발휘하여 국력을 양성하지 못한 때문이라고 보고, 모든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실력을 양성하면 후일에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³⁾ 이것은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보호국 상태에 처한 원인은 자강에 힘쓰지 않은 자신에게 있다는 保護國自責論의 입장에 선 先自強 後獨立의 논리였다.

42) 《大韓自強會月報》(이하 月報라 略함) 제1호, 〈大韓自強會趣旨書〉, 9쪽.

43) 《大韓協會會報》(이하 會報라 略함) 제8호, 〈敬求志士同情〉, 57쪽.

신민회의 대변지 역할을 했던 《大韓每日申報》도

各族이 경쟁하는 세계를 당하여, 進하여 강한 者가 退하여 弱한 者를 滅함이 어찌 可尤할 바리오. 人은 進하는데 我는 不進함이 可尤할 바며, 人은 능히 他族을 멸하는데 我는 자기도 생존치 못함이 可尤할 바니라(《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27일, 奇書 〈進歩하라 동포여〉).

고 하고, ‘不進者自責論’의 입장에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며, 〈機會와 實力〉이란 논설에서는,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성공할 수 없으므로,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先實力 後機會論을 폈다.⁴⁴⁾

요컨대 애국계몽가들은 약육강식·생존경쟁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권을 상실케 된 것은 실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자가반성과, 앞으로도 실력의 준비가 없으면 기회가 주어져도 독립회복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실력양성을 통한 자강실현으로 국권을 회복하여 독립을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논리, 곧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자강독립론을 전개하였다.

둘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론을 폈다.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뒤, 국제 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조약을 취소케 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외교운동이 전개되었다. 대한자강회 회장 尹致昊는 러일강화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고종이 미국과 프랑스에 밀사를 보내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으려 한 데 대하여, “황제가 워싱턴과 파리의 거리에서 한국의 독립을 주우려 한다”고 그 불가능함을 지적하였다.⁴⁵⁾ 그는 외교운동에 대하여 ① 어느 열강도 일본에 돌을 던질 만큼 정의롭지 않으며, ② 한국이 열강과 독립적 외교 관계를 가진 과거 20년 동안에 세계의 동정을 살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으며, ③ 어느 나라도 부패한 한국인을 위하여 세계적 강대국이 된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⁴⁶⁾ 열강의 외교적 압력 수단에 의한 국권회복 곧 외교독립론에

44) 《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3일, 논설 〈機會와 實力〉.

45) 《尹致昊日記》, 1905년 10월 28일.

46) 《尹致昊日記》, 1905년 12월 17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독립의 길은 자강에 달려 있다”⁴⁷⁾라고 하여 자력에 의한 자강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朴殷植은 〈自強能否의 問答〉이란 논설에서,

현금 시대는 생존경쟁을 天演이라 논하며 약육강식을 公例라 말하는지라. 저 문명을 가장 중시한다고 하는 영국도 인도와 애급에 대하여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德義를 숭상한다고 하는 미국도 비올빈에 대하여 어떠한 수단을 취하였는가. 현금 열국의 鷹揚虎躍者는 그 말씨는 보살이요 그 행동은 夜叉(악마)라, 누구를 가히 믿으며 누구를 가히 의지하리요. … 만일 다른 열강의 어떠한 事機로 우리를 원조할까 희망하면 비단 妄想이 될 뿐더러 실로 막대한 불행이라. … 吾國의 독립은 吾國의 自力으로 할 것이요 타국의 힘을 빌리지 않으리라 하고, 自強의 성질을 배양하여 自立의 기초를 부식할지니, 만약 능히 그럴 수 없으면 영구히 타인의 노예가 될 뿐이라(朴殷植, 〈自強能否의 問答〉(《月報》 제4호), 1~3쪽 축약; 金成喜, 〈國民的 內治 國民的 外交〉(《會報》 제4호), 25~26쪽).

하여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열강의 원조로 독립을 기대하는 것은 妄想임을 지적하고, 자국의 독립은 자국의 자력에 의한 자강·자립으로 가능하다는 자주적 자강독립론을 역설하였다.

《대한협회회보》에 실린 白星煥의 논설 〈學人不學人의 關係〉에서도,

금일 세계는 自立自強의 大競爭局이라. 그 국가를 세움도 오직 내가 스스로 세우는 것이고 남이 나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 국가의 강함도 역시 내가 스스로 강하게 하는 것이고 남이 나로 하여금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즉 그 나라를 세우고 강하게 함이 실로 남에게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남에게 속박 당하지 않을 능력과 自治自新의 사상이 확립된 연후에야 優勝劣敗의 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다(白星煥, 〈學人不學人의 關係〉(《會報》 제3호), 6쪽).

고 하여, 국가의 자립·자강을 강조하는 자주적 자강독립론이 주장되고 있다. 《대한매일신보》도 논설에서, “大韓의 독립은 大韓人의 자력으로 획득하고 자력으로 保守하여야 완전한 독립이 될 터이니”⁴⁸⁾라고 하여, 자주적 실력

47) 《高宗實錄》, 광무 9년 12월 1일, 〈尹致昊上疏〉.

48) 《大韓每日申報》, 1907년 10월 1일, 논설 〈귀중한 줄을 認하여야 保守할 줄을

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약육강식·침략경쟁의 국제사회에서 모든 열강을 일본과 동일한 침략국가로 간주하여, 외세의존적인 외교독립론을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배제하고,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의 논리를 폈다.

셋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점진적 실력양성에 의한 자강독립론을 폈다.

을사조약의 체결로 주권의 일부가 상실되자, 위정척사론의 입장에 서 있던 수구 유생들을 중심으로 하여 무력으로 일본 세력을 몰리치고 주권을 회복하려는 항일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의병운동은 국권을 빼앗긴 이상 승패를 초월하여 즉각결전에 의해 즉시독립을 쟁취해야 한다는 무장투쟁노선에 섰던 가장 강렬했던 항일투쟁이었다.

점진적인 자강독립론을 폈던 애국계몽가들은 이러한 항일의병운동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들은 일본이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군사강국이고 열강으로부터 한국의 보호권을 인정받은 상황에서, 열세한 의병의 무력으로 막강한 일본군을 격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는 그의 일기에서,

일본인, 일진회원, 부패한 왕실,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 등 한국의 일반적인 병폐에 더하여, 충청남도와 전라도의 백성들은 최근에 義兵 또는 抗日暴徒들에 의하여 지독하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그 소요 진압의 구실로 일본 군대는 주요 중심지를 점령한다(《尹致昊日記》, 1906년 6월 15일).

고 하여, 의병은 일본 군대를 격퇴하기는 고사하고 일본 군대에게 점령지 확대의 구실을 주고 있으며, 일본인·일진회·왕실·정부와 마찬가지로 백성을 크게 괴롭히는 존재가 되고 있음을 비판하였다. 대한협회 임원 金成喜도 무모한 의병항전은 전국 인종을 殄滅하는 행위라고 의병활동을 격렬히 비판하였다.⁴⁹⁾

대한자강회 총무이며 대한협회 부회장이었던 윤효정도, 義兵은 국권이 축소되고 외국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된 원인과 그 타개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認하지〉.

49) 金成喜, 〈國民의 內治 國民의 外交〉(《會報》 제4호), 26쪽.

비분강개하여 폭도의 행동을 하고, 양민을 도탄에 빠지게 한다고 하고, “이러한 행동으로는 국가의 앞길을 구제할 수 없고 오히려 국가의 나아갈 大道를 끊게 한다”⁵⁰⁾거나, 의병은 “조국의 사상으로써 反히 조국을 斷喪하는 자”라고 비판했으며,⁵¹⁾ “의병처럼 시국과 國勢를 헤아리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를 自亡케 할 뿐이며 自強케 할 수 없다”⁵²⁾고 하여 ‘무력행사불가론’ 또는 ‘義兵害民害國論’을 폈다.

신민회의 대변지 《대한매일신보》도 잡보 〈非義伊狂〉에서, 의병투쟁은 “擾民之端일 뿐 國事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행동”이라 하여 ‘義兵無用論’을 펴고,⁵³⁾ 〈의병〉이란 논설을 통하여, 越王 句踐, 燕의 昭王, 프리시아의 君臣이 장기간의 인내로 실력을 양성하고, 시기를 기다려서 강대한 적국에 설욕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때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일시의 血憤에 따라 烏合之衆을 모아 妄舉함은 국가의 禍亂을 증대하고 生民을 문드러지게 하는 것”이라 하여, 의병의 일본군에 대한 무력 대결은 실력의 파괴를 초래하는 ‘不度時 不量力’의 무모한 행동이라고 비판하였다.⁵⁴⁾ 《皇城新聞》 역시 의병은 국가에 해를 끼치는 백성, 곧 ‘自促亡國之敵’이라고 비난하고,⁵⁵⁾ 국권회복은 武를 통해서가 아니라 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⁵⁶⁾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우리와 일본 사이의 실력의 차이가 현저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항일 무력투쟁은 국권회복의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제의 침략정책을 강화시키고 국력의 손실을 가져오며 양민을 괴롭히게 되어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다고 판단하여, 점진적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장지연은 〈自強問答〉이란 논설에서,

50) 尹孝定, 〈時局의 急務〉(《會報》 제2호), 62~63쪽.

51) 尹孝定, 〈大韓協會의 本領〉(《會報》 제1호), 47쪽.

52) 尹孝定, 〈本會의 趣旨와 特性〉(《月報》 제1호), 20쪽.

53) 《大韓每日申報》, 1906년 3월 30일, 잡보 〈非義伊狂〉.

《大韓每日申報》, 1905년 9월 10일, 잡보 〈義兵消息〉과 1907년 10월 10일 金翼河 〈寄書〉에서는 의병들에게 교육과 식산 등 실력양성에 힘쓸 것을 권고하고 있다.

54)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30일, 논설 〈義兵〉.

55) 《皇城新聞》, 1905년 10월 13일, 논설 〈警告義兵之人〉.

56) 《皇城新聞》, 1906년 5월 29일, 논설 〈警告義兵之愚昧〉.

애국에 뜻을 둔 인사는 결코 앉아서 멸망을 기다려서는 안될 것이니, 지금 비록 자강의 능력이 없다 해도 사람마다 모름지기 자강의 道에 힘써, 천리 길을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것 같이 해야 한다. 오늘 일보 전진하고 내일 또 일보 전진하여 매일 한 걸음이라도 멈추지 않아, 日久月深하여 歲積年累하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달할 날이 있을 것이다(張志淵, 〈自強會問答〉(《月報》 제2호), 6쪽).

고 하여, 점진적으로 장기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강론을 폈다. 그리고 그는 〈自強主義〉라는 논설에서는,

대저 我國의 형세를 비유하면 潰癰廢疾(불치병)의 사람과 같아서 반드시 세월이 걸려야 효과가 있을 것이며 급속한 효과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니, 금일에 自強會를 발기하여 명일에 自強力을 발생케 할 이치는 결코 천하에 없을 뿐더러, 自強主義는 强暴强勇의 强이 아니라. 진실로 自強之術에 힘쓸 것이니… (張志淵, 〈自強主義〉(《月報》 제3호), 6쪽).

라 하여, 한국의 자강은 장기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감정에 치우친 급진주의와 실력의 뒷받침이 없는 폭력주의를 배격하였다. 《황성신문》도 우리 민족이 생존경쟁의 장에 나아가 열심히 노력하면, 10년 또는 20년 이내에 일본과 같은 위치에 도달하여 보호국의 수치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 하여, 장기적 노력에 의한 자강독립을 전망하였다.⁵⁷⁾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자력에 의한 자주적 자강독립을 강조했으나, 자력에 의한 자주적 방법이라 해도 의병투쟁과 같은 충분한 실력을 갖추지 않은 무장투쟁의 방법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실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진적 자강독립의 논리를 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독립전쟁론을 폈으나, 그것은 일제와 近代戰을 전개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를 갖추고, 일본이 타국과 침략전쟁을 벌이는 기회를 포착하여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57) 《皇城新聞》, 1906년 11월 19일, 논설 〈競爭時代〉(續).

(2) 실력양성론과 독립전쟁론

가. 실력양성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당시 시대를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우승열패·약육강식의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국권을 상실하여 보호국 상태에 처한 원인은, 외국의 침략 때문만이 아니라 실력양성·자강실현에 힘쓰지 않는 한국 자체에 있다는 자가반성의 입장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독립의 실현은 실력의 양성·자강의 실현에서 가능하다는 사회진화론에 바탕을 둔 자강독립론 곧 ‘선자강 후독립론’을 주장하였다. 《대한매일신보》가 1910년 1월 13일자 논설에서, “아무리 기회가 있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치 못할 것”이므로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장차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선실력 후기회론’도 같은 맥락의 자강독립론이었다. 대한협회가 국난극복을 위하여 실력주의, 곧 부강주의를 국시로 삼자고 주장⁵⁸⁾할 정도로, 애국계몽가들에게 있어 실력양성은 국가적 과제이며 국권회복의 관건이었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는가. 주로 대한자강회·대한협회·신민회·서우(서북)학회 등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로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폈다.

대한자강회가 그 취지서에서, 국가의 독립은 오직 자강 여하에 있을 뿐이며, 자강의 방법은 ‘振作教育’하여 民智를 개발하고 ‘殖産興業’하여 國富를 증진시키는 것이라⁵⁹⁾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교육과 식산을 자강실현의 양대 지주로 간주하고 교육자강을 주장하였다.⁶⁰⁾

애국계몽가들은 “오직 人群이 진화하여 문명이 고도에 달한 즉, 약자가 강하고 劣者が 優하여 장차 천하에 無敵하게 됨은 物競天演의 공리라”⁶¹⁾하고,

58) 《大韓民報》, 1909년 6월 13일, 논설 〈我韓의 國是〉.

59) 《月報》 제1호, 〈大韓自強會趣旨書〉, 9~10쪽.

60) 《皇城新聞》, 1906년 2월 27일, 논설 〈感謝大垣君高義〉와 1908년 9월 8일, 논설 〈實業界의 新光線〉에서도 교육과 식산을 통한 국권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61) 金成喜, 〈教師의 概念〉(《月報》 제8호), 25쪽.

문명부강한 국민의 요건은 학업의 증진과 지식의 확대에 있음⁶²⁾을 강조하여, 약육강식·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개명과 문명의 高度化가 ‘약자의 강자화의 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서구 근대문명국가의 교육에 준하는 문명교육과 실업교육 및 애국교육을 통하여, 근대적 문명 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강력한 애국심을 가진 패기 있는 국민을 육성해야 한다는 ‘교육자강론’을 폈다.⁶³⁾ 비밀결사인 신민회도 그 〈通用章程〉에서 실력 양성의 방법으로 “학교를 건설하여 인재를 양성할 것”과 “각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할 것”을 규정하여, 교육진흥이 실력양성의 요체임을 제시하였다.⁶⁴⁾

그리고 애국계몽가들은 이러한 교육자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은 물론 가정교육과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⁶⁵⁾ 여성교육과 의무교육 및 노동야학의 중요성도 강조하였다.⁶⁶⁾ 그들이 중요시한 교육은 ‘국민의 정신’을 고취하고 ‘국민의 氣力’을 배양하는 진정한 국민교육이었다.⁶⁷⁾ 그러므로 그들은 근대화에 역행하는 수구적인 유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신교육에

62) 朴殷植, 〈教育이 不興이면 生存을 不得〉(《西友》 제1호), 9~10쪽.

63) 李鍾濬, 〈教育論〉(《月報》 제7호), 1~2쪽.

呂炳鉉, 〈殖産部論說〉(《月報》 제2호), 15~16쪽.

尹孝定, 〈專制國은 無愛國思想論〉(《月報》 제5호), 19~22쪽.

64) 《韓國獨立運動史》 1, 국사편찬위원회, 1965), 〈大韓新民會通用章程〉, 1,028쪽.

65) 《大韓每日申報》, 1906년 5월 9일, 논설 〈申勉家庭教育〉.

安秉瓚, 〈教育의 宗旨〉, (《西友》 제5호), 8쪽.

《皇城新聞》, 1909년 2월 5일, 논설 〈根本의 教育〉.

66) 여성교육을 강조한 글은 다음과 같다.

《皇城新聞》, 1909년 9월 16일, 논설 〈女子教育界의 大缺點〉.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17일, 〈女子教育에 對한 一論〉.

의무교육을 강조한 글은 다음과 같다.

《西友》 제3호, 43~44쪽.

朴殷植, 〈祝義務教育實施〉(《西友》 제7호), 2쪽.

《皇城新聞》, 1908년 6월 6일, 논설 〈義務教育先自貧民始〉.

《大韓每日申報》, 1908년 12월 6일, 논설 〈書告教育家諸公〉·1910년 1월 14일, 논설 〈教育界의 悲觀〉 등이 있다.

또한 노동야학을 실시하여 자주독립의 정신과 건인불굴의 성질을 양성할 것을 강조한 글로는 《皇城新聞》, 1908년 2월 20일, 논설 〈勸勉勞動同胞夜學〉 등이 있다.

67) 《大韓每日申報》, 1909년 11월 24일, 〈國民教育을 施하라〉.

의한 신학문·신사상의 보급 확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유교의 근본은 變通意識·富強之術·民權意識을 내포하고 있어 근대·문명사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보아, 孔孟儒敎를 개신하여 신학문·신사상과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신구학 절충보완의 논리도 폈다.⁶⁸⁾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民智를 계발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자강교육의 실시를 국권회복의 기초로 생각했으며,⁶⁹⁾ 국권회복을 위한 자강교육의 전제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⁷⁰⁾

둘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식산흥업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국권회복은 실력양성에 있으며 실력의 요체는 식산흥업, 곧 농공상업의 발달에 있다고 보고,⁷¹⁾ 특히 당시 세계를 ‘商業戰鬪時代’로 규정하였다.⁷²⁾ 그들은 당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된 주요 원인의 하나는 식산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인식했으며, 식산흥업이 국부증진의 근원이라 믿고,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식산을 통한 국가부강의 실현이 국권회복의 길이라고 하여 ‘식산자강론’을 주장하였다.⁷³⁾

68) 薛泰熙, 〈拋棄自由者爲世之罪人〉(《月報》 제6호), 21~23쪽.

李鍾濬, 〈宗教를 不可不崇奉이요 新舊를 不可不參酌이라〉(《月報》 제9호), 14~16쪽.

白洛居士, 〈人民의 敎育〉(《嶠南敎育會雜誌》 제5호), 24~25쪽.

李起鎰, 〈學問은 不可不參互新舊〉(《畿湖興學會月報》 제6호), 4쪽.

李輔相, 〈學無新舊로 勸告不學諸公〉(《畿湖興學會月報》 제7호), 6~7쪽.

李光麟, 〈舊朝末新學과 舊學의 論爭〉(《韓國開化史의 諸問題》, 一潮閣, 1986), 202~206쪽.

69) 《西友》 제1호, 〈本會趣旨書〉, 5쪽.

朴殷植, 〈警告社友〉(《西友》 제2호), 5쪽.

邊昇基, 〈革去舊習(續)〉(《湖南學報》 제6호), 12쪽.

《畿湖興學會月報》 제1호, 〈本會記事〉, 47~48쪽.

70) 《西友》 제3호, 43~44쪽.

姜 晔, 〈義務敎育〉(《湖南學報》 제7호), 2~3쪽.

李宣鎬, 〈今日嶠南〉(《嶠南敎育會雜誌》 제2호), 45쪽.

鄭國采, 〈國民敎育論〉(《畿湖興學會月報》 제8호), 8~9쪽.

71) 玉東奎, 〈實業의 必要〉(《西友》 제8호), 30쪽.

《西友》 제6호, 〈切實意見〉, 2쪽.

72) 《大韓每日申報》, 1909년 12월 18일, 논설 〈商業上知識의 必要〉.

73)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月報》 제1호), 34~35쪽.

——, 〈國家貧弱之故〉(《月報》 제6호, 10~15쪽·제7호, 6~8쪽).

비밀결사인 신민회도 그 〈通用章程〉에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것”과 “본회와 합자로 실업장을 열어 실업계의 모범을 보일 것”을 규정하여, 식산흥업이 실력양성의 요체임을 제시하였다.⁷⁴⁾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의 식산부진과 국가빈약의 요인을, 수백년 간의 압제 정치와 가렴주구, 그리고 전제국가의 ‘重土主義(문인존중주의)’와 관존민비의 폐습 등에 의한 국민의 근로의욕의 상실과 산업기술의 부족으로 파악하였다.⁷⁵⁾ 따라서 그들은 정치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계몽을 통하여 관존민비·직업존비의 의식을 타파하여 국민의 근로정신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교육을 통하여 각종 산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⁷⁶⁾

애국계몽가들은 이같은 식산흥업의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억제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강을 통한 국권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⁷⁷⁾ 그러므로 교육과 식산에 의한 국민의 지식과 경제적 향상을 유일한 자강책 또는 국권회복의 실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⁷⁸⁾

셋째로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과 더불어 정치개혁에 의한 실력양성론을 폈다.

대한협회는 그 취지서에서, “정치·교육·산업을 강구하여, 사회지식을 발달하며 신진 德性を 도야하며 전국 富力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적 자격을 양성한다” 하고, 계속하여 “국가의 비운과 인민의 행복은 전적으로 실력 여하

大韓子, 〈土地와 國家 人民의 關係〉(《會報》제6호), 12쪽.

74)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通用章程〉, 1,028쪽.

75) 張志淵, 〈國家貧弱之故〉(《月報》제6호, 10~15쪽·제7호), 6~8쪽.

金成喜, 〈殖産部論說〉(《月報》제6호), 38~40쪽.

76) 金成喜, 위의 글.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月報》제1호), 34쪽.

呂炳鉉, 〈殖産部論說〉(《月報》제2호), 14~16쪽.

77) 張志淵, 〈嵩齋漫筆〉(《月報》제2호), 17~18쪽.

——, 《月報》제3호, 9~10쪽.

78) 《月報》제1호, 〈大韓自強會趣旨書〉, 9~10쪽.

尹孝定, 〈志士의 眼淚와 學生의 指血〉(《月報》제8호), 52쪽.

에 있는데, 실력은 오직 정치·교육·산업의 강구 발달일 뿐이다”⁷⁹⁾고 하여, 애국계몽가들이 실력양성에 있어 교육진흥·식산진흥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전제정치 하에서는, ① 지배자가 국가를 私有하여 국민의 생명·재산 등 민권보장이 불가능하여 民力이 쇠잔해지고, ② 국민에 대한 정치참여를 불허하여 국민이 국가의 일을 남의 일 보듯이 하므로 애국심이 생길 수 없고, ③ 국민에 대한 가혹한 압제와 수탈로 국민의 생산의욕이 감퇴되어, 산업이 폐쇄해지고 국력이 쇠퇴해진다고 하여, 국가 쇠망의 큰 원인의 하나를 전제정치에 두었다.⁸⁰⁾ 따라서 한말 애국계몽단체들은 전제정치를 폐지하고 입헌대의제(신민회는 공화제)를 채용하여 근대 국민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민권의 보장과 산업의 발전, 국민의 참정과 애국심의 양양을 이루어, 국민의 힘에 기초한 국권회복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⁸¹⁾

대체로 애국계몽가들은, 지방자치제와 입헌대의제를 실시하면, 국민의 자치정신과 자치능력이 향상되어 국민의 독립능력과 독립유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믿었다. 그리고 그들은 “개명한 인민 위에 惡政府가 없고, 미개한 인민 위에 善政府가 없다”⁸²⁾고 하고,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하며, 정치의 발전은 교육에 달려다”⁸³⁾고 하여, 교육에 의한 국민개명과 정치발전이 국가자강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⁸⁴⁾

넷째로 애국계몽가들은 애국정신 또는 조국정신의 강화에 의한 실력양성

79) 《會報》제1호, 〈大韓協會趣旨書〉, 1쪽.

80) 薛泰熙, 〈法律上 人의 權義〉(《月報》제9호), 12~13쪽.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月報》제5호), 19~22쪽.

張志淵, 〈國家貧弱之故〉(《月報》제6호), 11~12쪽.

金成喜, 〈國民의 內治 國民의 外交〉(《會報》제4호), 25~26쪽.

81) 尹孝定, 〈地方自治制論〉(《月報》제4호), 18~19쪽.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제1호), 28~30쪽.

張志淵, 위의 글.

82) 林炳恒, 〈官吏의 事業과 人民의 事業〉(《月報》제7호), 58쪽.

83) 李鍾潛, 〈教育論〉(《月報》제7호), 1~2쪽.

84) 金成喜, 〈國民의 內治 國民의 外交〉(《會報》제4호), 26쪽. 김성희는 “국가의 정도는 반드시 국민의 정치사상에 의하여 발달한다”는 몽테스큐의 말을 인용하고, “국가정치의 본원은 곧 국민의 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론을 폈다.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정치개혁과 더불어 大韓精神(사상)·자국정신(사상)·조국정신(사상)·독립정신(사상)·애국정신(사상)·국가정신(사상) 등 민족의 정신적인 측면을 각별히 중요시하였다.⁸⁵⁾ 그러므로 그들은 대한정신·조국정신·독립정신을 바탕으로 한 신교육을 실시해야만 국가부강과 국권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⁸⁶⁾ 애국정신·민족정신을 결여한 상태의 맹목적인 신교육의 추종은 결국 자강독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였다.⁸⁷⁾

그들이 애국정신·조국정신 등을 중요시한 것은 국권회복운동에 있어 가시적으로 부족한 실력의 격차를 정신면에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은 애국심이란 국가구성의 핵심 정신을 이루는 것으로, 국민의 애국심 또는 자국정신이 없으면 국가는 形骸化되고 국권회복은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⁸⁸⁾ 나아가 그들은 조국정신이 있어야 교육진흥과 식산흥업을 통하여 국가의 자강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으며, 실현된 자강을 독립으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⁸⁹⁾

그리하여, 그들은 국사와 국어 교육을 통하여 自國의 연원을 알게 하고 국가에 대한 소속감을 갖도록 하여 자국정신을 개발시키고,⁹⁰⁾ 입헌대의제도의

85) 朴殷植, 〈大韓精神〉(《月報》 제1호), 58쪽.

尹孝定, 〈本會의 趣旨와 特性〉(《月報》 제1호), 22쪽.

蘆浪居士, 〈教育問題〉(《會報》 제7호), 13~14쪽.

《皇城新聞》, 1908년 4월 25일, 논설 〈問愛國精神在處〉.

《大韓每日申報》, 1909년 1월 5일, 논설 〈國家의 精神을 發揮할지어다〉.

86) 朴相穆, 〈教育精神〉(《西友》 11호), 17~18쪽.

《西北學會月報》 제1호, 〈教育部—教育方法 必隨 其國程度〉.

87) 朱東瀾, 〈學生의 職分과 義務〉(《西北學會月報》 제3호), 15~17쪽.

88)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月報》 제5호), 21쪽.

89) 朴殷植, 〈大韓精神〉(《月報》 제1호), 58쪽.

尹孝定, 〈本會의 趣旨와 特性〉(《月報》 제1호), 22쪽. 윤효정은 이 연설에서, 教育과 殖産의 실제 발달이 大韓精神에 의거하지 않으면, 汽船이 氣力を 잃은 것과 같고 電車가 電力을 떠난 것과 같아서, 활동 진행의 勢力이 없게 될 것이니, 大韓精神이 국권회복의 大機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90) 玄 燾, 〈國朝故事〉(《月報》 제8호), 34~35쪽.

尹孝定, 〈議案〉(《月報》 제2호), 36~37쪽.

실시로 국민의 국정참여를 실현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와 일체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애국심과 조국정신을 고양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¹⁾ 그들은 조국정신을 교육과 식산을 통한 自强實現(실력양성)의 원동력으로, 실현된 자강을 獨立恢復(국권회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간주했던 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조국정신이야말로 자강 실현의 양대 지주인 교육과 식산의 발전을 고무시키고, 이를 통하여 실현된 자강을 독립으로 연결시킴으로써 결국 자강실현의 양대 지주를 받쳐주는 불가결의 정신적 기반이라고 간주했던 것이다.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식산흥업·정치개혁·조국정신을 통하여 양성된 실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권회복에 연결시키고 있는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우(서북)학회 등 합법단체의 애국계몽가들은 양성된 실력을 직접 독립전쟁에 연결시키는 주장을 펴지는 않았다. 그들은 국민이 근대지식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자립능력이 있으며, 강건한 애국정신을 가지고, 정치참여의 능력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실력이 양성되고 문명화가 이루어지면, 보호국체제는 철폐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⁹²⁾ 그러므로 합법단체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이 실력의 양성, 문명화의 성숙 이후에, 최종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정치적 차원에서 국권회복을 시도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된다. 그러나 정치적 노력이 실패했을 경우에, 군사적 차원의 국권회복을 시도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비밀결사였던 신민회가 실력양성을 독립전쟁으로 직결시키고 있었는데, 신민회 주도 회원의 대다수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 합법단체의 주도 회원을

申采浩, 〈歷史와 愛國心の 關係〉(《會報》 제3호), 3쪽.

李鍾一, 〈國文論〉(《會報》 제2호), 12~13쪽.

《大韓每日申報》, 1908년 1월 26일, 논설 〈國文學校의 日增〉.

《皇城新聞》, 1908년 6월 3일, 논설 〈歷史著述이 爲今日必要〉 및 1910년 4월 29일, 논설 〈國文發達을 注意함〉.

91)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月報》 제5호), 19~22쪽.

——,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月報》 제8호), 8쪽.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 제1호), 28~29쪽.

元泳義, 〈人民의 共同的 責任〉(《會報》 제2호), 8쪽.

92) 大垣丈夫, 〈本會趣旨〉(《月報》 제1호), 25쪽.

金嘉鎮, 〈我國有識者의 日本國에 대한 感念〉(《會報》 제6호), 1~2쪽.

검하고 있었던 사실은 주목할만 하다.

나. 독립전쟁론

신민회는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서 韓人의 통일 연합에 의한 ‘독립자주국가’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⁹³⁾ 비밀결사로 조직되어, 독립전쟁 전략을 수립했던 점에서, 대한자강회나 대한협회 등 합법적인 애국계몽단체와 국권회복의 방법론을 달리하였다.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제국주의 일본과 적절한 시기에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한다는 이론이다.⁹⁴⁾

신민회는 국권회복에 있어 기회의 포착과 실력의 양성을 중요시하였다. 신민회의 대변자였던 《대한매일신보》가 논설에서,

기회가 없어도 성공키 어려울지며 실력이 없어도 성공키 어려울지나, 오직實力이 爲先이니라. 왜 그리한가. 기회가 아무리 있어도 실력이 없으면 성공치 못할지며, 혹 우연히 성공이 되더라도 이는 진정한 성공이 아닌 所以니라. 실력만 있으면 기회는 자연히 도래하는 것이니, 날로 실력을 기르고 달로 실력을 길러 실력 준비로 생명을 다할 지니라(《大韓每日申報》, 1910년 1월 13일, 논설 〈機會와 實力〉 축약).

라고 했듯이, 신민회의 국권회복론은 먼저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실력 후기회론이었다. 서우학회도 국가독립의 기반이 武藝에 있음을 강조하며 체육과 상무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⁹⁵⁾ 국권회복을 위한 병력증강에 힘쓸 것을 강조하여 독립전쟁에 필요한 군사력 양성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⁹⁶⁾

신민회의 선실력 후기회론은 실력양성에 의한 독립전쟁론 또는 독립전쟁준비론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자강회 등 합법단체의 선자강 후독립론과 일맥상통하면서도, 선자강 후독립론에는 독립전쟁이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점

93)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1965), 〈大韓新民會趣旨書〉, 1,027쪽.

94) 尹炳奭,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韓國近代史論》II, 知識産業社, 1979), 27쪽.

95) 金義善, 〈體育의 必要〉(《西友》제4호), 14~15쪽.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西友》제10호), 1~6쪽.

96) 《西友》제7호, 〈安昌浩演說〉, 24~27쪽.

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新民회도 당시의 합법적인 애국계몽단체와 마찬가지로, 약육강식의 국제사회에서 실력의 부족으로 상실된 국권의 회복은 실력의 양성으로만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국권회복의 당면의 목표로 실력양성론을 폈던 것이다.

그럼新民회가 말하는 실력양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新民회는 그 취지에서, “세계는 수백년 이래로 새로운 세계로 진보해 왔는데, 한국사회는 ‘進化의 天演公例에 역행’하여 왔으며, 우리가 昔日로부터 自新치 못하여 惡樹惡果를 금일에 거두게 되었다”하고, 爲國의 길은 오직 自新하는 것 뿐이라고 하였다.⁹⁷⁾ 곧新民회는 한말의 시대상황을 사회진화론적 시각에서 보고, 보호국체제도 자신치 못한 한국 자체에 있다고 보아 자신이 구국의 길임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자신이란 신사상·신교육·신윤리·신학술·신산업·신정치 등에 의하여 ‘인민을 유신’케 하고 ‘나라를 유신’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⁸⁾ 결국 자신이란 새로운 국민 곧 新民의 육성과, 새로운 국가 곧 신국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新民회가 신민의 육성과 신국의 건설을 목표로 제시한 실력양성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⁹⁹⁾

첫째로 각처에 勸諭文을 전파하여 인민의 정신을 각성케 하고, 신문·잡지·서적을 간행하여 인민의 지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국민계몽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둘째로 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각처 학교의 교육방침을 지도하는 것으로, 교육진흥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셋째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하고,新民회와 합자로 實業場을 설치하여 실업계에 모범을 보이는 것으로, 식산흥업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

넷째로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武官學校를 세우고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독립군기지건설에 의한 실력양성론이었다.¹⁰⁰⁾

9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趣旨書〉, 1,024~1,026쪽.

98)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1,026~1,027쪽.

99)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大韓新民會通用章程〉, 1,028~1,029쪽.

이상에서 국민계몽·교육진흥·식산흥업에 의한 신민회의 실력양성의 방법은 대한자강회·대한협회 등 합법단체의 방법과 동일하지만, 군사기지 건설에 의한 신민회의 실력양성의 방법은 합법단체와 다른 새로운 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의 구상은, 韓民族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독립전쟁을 전개하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것이었다.¹⁰¹⁾ 여기에서 ‘민족의 역량’이란 한국민의 근대적 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확고한 민족정신과 근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 등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란 장차 일제가 더욱 팽창하여 러시아나 청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와 같은 독립전쟁의 기회를 의미한다. 결국 신민회의 독립군기지건설론은 일제가 장차 침략전쟁을 벌이는 독립전쟁의 기회에 대비하여,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西北間島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것이었다.¹⁰²⁾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은, 싸울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감성적으로 대응한 항일의병의 즉각결전론과는 달리, 미래의 독립전쟁의 기회에 대비하여 일제와 近代戰 수행의 능력을 갖추려는 이성적인 판단에 기초한 독립전쟁준비론이었다. 이와 같이 신민회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방법으로 국민의 知的·경제적·정치적 실력양성뿐만 아니라, 민족의 군사적 실력양성을 구상한 것은 당시 합법단체들이 지닌 국권회복론의 한계성을 한 단계 극복한 것이었다.

요컨대 신민회의 국권회복의 기본방략은, 국내에서는 계몽·교육·식산 활동을 통하여 新民을 육성하고, 국외에서는 간도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

100) 山縣五十雄, 《朝鮮陰謀事件》(セウルプレス社, 1912), 2·26·83쪽.

101) 愼鍾度, 〈新民會의 創建과 國權恢復運動〉(《韓民族獨立運動史研究》, 乙酉文化社, 1985), 103쪽.

102) 尹炳奭,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앞의 책), 26~28쪽.

國史編纂委員會, 〈105人事件公判始末〉 I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1, 1986), 290·295·305·312·315쪽.

國史編纂委員會, 〈105人事件公判始末書〉 II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2, 1986), 79~80쪽.

립군을 양성한 다음에, 일제가 대외적으로 침략전쟁을 벌이는 시기에 국내외에서 축적된 민족의 역량을 집결하여 일제와 무장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쟁취하고, 新國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3) 국민국가건설의 논리

(1) 국민국가론

한말의 애국계몽가들은 외세의 침탈로 인하여 야기된 민족적 모순에 대응하여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의 논리를 전개했고, 내부 지배층의 압제와 수탈로 표출된 봉건적 모순에 대응하여 근대 국민국가건설의 논리를 전개하였다.

먼저 애국계몽가들은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국민의 자유권·평등권·생존권을 주장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자유란 “皇天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이며, 인간의 대소 강약은 다르나 “天賦自由之權은 동일하다”고 하여 天賦人權을 주장하였다.¹⁰³⁾ 그리고 그들은 천부의 권리는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진 고유한 것이지만 법률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하여 법부인권을 주장하였다.

대저 天賦權은 사람이 태어날 때 주어져 固有한 것이다. 水草相逐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반드시 腕力에 제한되는 것은 논란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니, 비록 天賦權이 있은들 편안히 누리지 못함에 이르면 어찌 權利라 칭하리요. 고로 법률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그 권리를 보전할 것이니, 소위 天賦自由라 公言하는 말은 空論에 불과할지라(薛泰熙, 〈法律上 人의 權義〉(《月報》 제8호), 17쪽).

나아가 그들은 “하늘이 백성을 내릴 때 자유를 균등하게 부여했으니, 인민에게는 자유와 생존의 권리가 있다”¹⁰⁴⁾던가, “하늘이 백성을 냄에 각기 주어진 자유가 있으니 백성된 자는 평등 자유하다”¹⁰⁵⁾고 하여, 개인 차원의 천부

103) 南宮濩, 〈自由論〉(《月報》 제9호), 9쪽.

元泳義, 〈自助論〉(《月報》 제13호), 1쪽.

104) 薛泰熙,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月報》 제6호), 19~20쪽.

인권을 국가 차원에 적용하여 天賦民權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천부인권론에 의거 국민평등권·국민자유권·국민생존권을 주장한 애국계몽가들은 사회계약론에 기초하여 국민주권과 국민참정권을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 평의원 薛泰熙는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이란 논설에서,

국가에는 스스로 일정한 토지와 인민이 있어서, 본래 마땅히 각자가 조치하여 得失을 평의할 것이나,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민이 통치권을 賢者에게 위임한 것이니, 정부는 통치권의 分任者로서 인민 보호의 의무와 用法·행정의 권한을 가지며, 인민은 役稅 부담의 의무와 자유 생존의 권리를 가진다(薛泰熙, 〈拋棄自由者爲世界之罪人〉(《月報》 제6호), 19~20쪽 축약).

고 하여, 사회계약론에 의거 국민을 통치권 곧 주권의 근원으로 또는 주권의 위임자로 인식하고, 통치자와 정부를 주권의 수임자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주권의 수임자인 정부는 결국 인민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논설에서, “정치가의 본직은 국가의 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당국자의 “귀중한 位權은 인민으로부터 假得한 것이며, 두터운 봉록은 인민으로부터 공급된 것이요, 국정 전반의 위임은 인민에게서 인수한 것인즉, 그 행정의 잘 잘못은 마땅히 인민에 감독을 必受할 이유가 있다”¹⁰⁵⁾고 하여, 역시 사회계약론적인 시각에서 정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제반 국정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근거에서 국민의 국정감독권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 南宮薰도 논설에서, 우리 국민이 국정을 정부에 위임하여 국가 흥망의 일차적 책임이 국민에게 있으므로, 우리 국민은 국정감독의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¹⁰⁷⁾

105) 金成喜, 〈工業說〉(《月報》 제10호), 28~29쪽.

106) 尹孝定, 〈政治家의 持心〉(《月報》 제12호), 11~12쪽.

107) 南宮薰, 〈國民의 義務〉(《月報》 제10호), 48쪽.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 제1호), 29쪽.

元泳義, 〈人民의 共同的 責任〉(《會報》 제2호), 7~8쪽.

한편 애국계몽가들은 “민선의원을 두어 정무를 감독한다”고 했으므로,¹⁰⁸⁾ 국민의 국정감독은 의회개설에 의한 국민참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의회개설에 의한 국민참정은 생명·재산 등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¹⁰⁹⁾ 국민과 국가와의 일체감을 조성하여 국가의 자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¹¹⁰⁾고 믿고 국민참정권을 주장하였다. 국민참정권은 국민주권을 전제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애국계몽가들은 국민을 주권의 근원 또는 주권의 위임자로서 뿐만 아니라 사실상 주권의 소유자로 인식했다고 하겠다.

애국계몽가들은 이상과 같이 자연법적 천부인권과 사회계약론적 국민주권 등 자유민권사상을 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국가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국가는 국민 萬姓의 공동체이니 군주 1인의 사유물이 아니라”고 하고, “군주는 국가의 통치자이며 국가의 私有者가 아니다”¹¹¹⁾고 인식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朕은 곧 국가”라고 한 루이 14세의 말을 ‘대역무도’하다고 비판하고, “짐은 국가의 상등 공용인”이라고 한 프레드릭 2세의 말을 국가와 황실의 구분을 명확히 한 ‘萬世의 귀감’이라고 극찬하였다.¹¹²⁾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국가를 토지에 중점을 두어 군주의 사유물시하는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그리고 대한협회 회원들은 “국가의 국가됨이 衆多 인민을 집합하여 이룬 것이므로 위로 君位와 아래로 관직은 모두 백성을 위해 설치한 것”¹¹³⁾이라고 하고, “백성은 국가 전체의 주인이요, 정부는 民人 의사의 대표”이니 정부는

108) 金成喜, 〈國家意義〉(《月報》 제13호), 41쪽

——, 〈論外交上 經驗的 歷史〉(《會報》 제8호), 8쪽.

109)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 제1호), 29쪽.

110) 尹孝定, 〈地方自治制論〉(《月報》 제4호), 18~19쪽.

——, 〈國家의 精神을 不可不發揮〉(《月報》 제8호), 8쪽.

元泳義, 〈人民의 共同的 責任〉(《會報》 제2호), 8쪽.

111) 海外遊客, 〈國家의 本義〉(《月報》 제3호), 54쪽.

——, 〈國家及 皇室의 分別〉(《月報》 제3호), 55쪽.

112) 海外遊客, 〈國家及 皇室의 分別〉, 56쪽.

113) 元泳義, 〈政體概論〉(《會報》 제3호), 28쪽.

주인의 동의를 얻어 국사를 처리해야 한다¹¹⁴⁾고 주장하였다. 곧 국가의 모든 통치 기구는 국민을 위해 설치된 것이며, 국가의 통치는 국민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은 “국가는 吾人(인민)의 국가요 정치가의 국가가 아니며 정치가는 오직 우리 나라 인민의 使役者”라 하여,¹¹⁵⁾ 국가를 국민집단과 동일시하는 ‘국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 서우학회와 서북학회의 회원들도 국가의 주인은 군주 개인이 아니고 국민이라고 하여, 국가를 ‘국민의 국가’로 인식하였다.¹¹⁶⁾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전통적인 군주=국가관을 부정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 곧 근대 국민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金成喜가 <論國家>라는 논설에서, 입헌정체는 ‘평등권의 특질’과 ‘대의기관의 특질’이 있다고 하고, 입헌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권리가 보장되고 국민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는 국가를 ‘국민적 국가’라 규정한 뒤, 우리 나라도 헌법의 발포와 국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국민국가를 구성해야 한다¹¹⁷⁾고 역설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국민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의 건설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럼 애국계몽가들이 국민국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부를 구상하였던가. 대한협회 평의원 安國善은 논설에서,

대저 근대에 제일 선량한 정부는 治者の 병력에 의뢰치 아니하고, 전적으로 피치자의 自由同意로 근거를 지어 政機運轉할 때에 결코 強力을 외면에 나타내지 아니하니, 곧 이러한 정부는 국민 다수의 의사로 원천된 헌법과 법률로 기초를 지어야 그 배후에 있는 강력은 朝廷이나 소수 右族의 강력이 아니라 일치한 국민 다수의 강력이요, 이 국민 다수의 강력은 剛強盛大하여 가히 犯치 못할 것이다(安國善, <政府의 性質>(<會報> 제7호), 28쪽).

114) 金成喜, <論外交上 經驗의 歷史>(<會報> 제8호), 4쪽.

115) 卞惠淵, <國民과 國家의 關係>(<會報> 제7호), 30쪽.

116) 朴聖欽, <愛國論>(<西友> 제1호), 27~29쪽.

<西友> 제2호, <愛國論一>, 17~23쪽.

<西友> 제7호, <安昌浩 演說>, 26쪽.

金翼谿, <今日 吾人의 國家에 對한 義務 及 權利>(<西北學會月報> 제1호), 27~32쪽.

117)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 제1호), 28~30쪽.

고 하여, 근대에 있어 최선의 정부 곧 ‘국민적 정부’는 국민의 ‘자유 동의’에 근거하여 정치기구를 운용하는 정부, 곧 국민 다수의 의사에 근거한 헌법과 법률에 기초를 둔 강력한 정부라고 인식하였다.¹¹⁸⁾ 그는 같은 논설에서,

대저 금일에 문명국의 정치를 말하면, 반드시 ‘여론정치’를 말하며 ‘서민참정’을 말하니, 이러한 말은 모두 십분 성장 발달한 ‘民主制度’를 언명함에 족하다. 그 여론을 형성하는 다수자가 승세를 잡음은 다수자가 국민의 소리를 가지고 국민의 권력을 가진 데에 말미암는다. 곧 다수자가 지배권을 가지는 것은 그 지식으로서가 아니고 그 潛勢力으로서이다(安國善, 〈政府의 性質〉(《會報》제8호), 24쪽 축약).

고 하여, 문명국 곧 국민국가의 정치는 여론정치·서민참정을 의미하는 민주 제도로 귀착되며, 국민의 여론과 국민의 권력에 바탕을 둔 다수자가 지배하는 정치라고 인식하였다. 서북학회 회원도 〈我韓의 公平한 輿論을 要함〉이란 글에서,

近世 문명 각국에서는 國民主義로 標幟를 삼아 정치상·경제상·사회상 중 대사건에 대하여는 국민의 공평한 여론에 의하여 處斷實行하나니, 故로 世人이 입헌정치를 指하여 여론정치라 칭함에 至한 것이라. 然則 국민의 여론은 국가 행동의 나침반이라. 건전한 여론이 행하면 其國이 必治하고, 病的 여론이 행하면 其國이 必亂할지니, 吾儕가 어찌 여론의 가치를 泛視할 수 有하리요(友洋生, 〈我韓의 公平한 輿論을 要함〉(《西北學會月報》제14호), 19~20쪽).

라고 하여, 근대 문명국가가 추구하는 국민주의는 국민의 여론에 의한 정치임을 밝히고, 입헌정치의 선결 요건인 여론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애국계몽가들은,

정부는 결코 정부 당국자의 정부가 아니오 곧 전국 국민의 정부이어늘, 이제 당국자의 施措에 대하여 漢城이 불복하고 畿甸人이 불복하고 전국인이 불복하는지라. 그런 즉 內閣 제공은 누구를 의뢰하여 부끄럼 없이 그 지위에 옹크리고 앉아 있는가(大韓子, 〈政府當局者의 猛省함을 再警告〉(《會報》제7호), 4쪽).

118) 《西友》제13호, 2쪽에 실린 〈自助論〉도 국민주권에 근거한 헌법과 정치·법률에 의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국민적 정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라 하여, 정부란 곧 ‘국민의 정부’이므로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현 내각대신은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것이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김성희는 몽테스큐의 ‘萬法精神의 說’이 입법·사법·행정의 三權分立을 일반화시킨 헌법의 鼻祖라 하고, 헌법 이전의 국가는 계급적 정부이고 헌법 이후의 국가는 평등적 정부이므로, 계급적 정부는 헌법의 죄인일 뿐 아니라 국민의 仇敵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그는 정부란 국가의 목적을 위하여 운용하는 기관으로, 공익을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상으로 말하면 내각이고, 통괄적으로 말하면 정부라고 하였다. 그리고 국민 공동의 사상으로 만든 것을 국민적 정부라 하고, 문명국의 책임내각이 바로 국민적 정부라고 파악하였다. 나아가 그는 책임내각이란 것은 영국에서 비롯되어 군주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인데, 한국의 내각은 군주와 국민에게 책임이 없는 내각이라고 비판하고, 국가와 정부, 국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속히 국회를 조직하여 국민적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¹⁹⁾ 이처럼 애국계몽론자들은 국민의 공동사상으로 구성된 국민적 정부 곧 책임내각이 국민국가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우리 나라에 있어서 국회의 설립에 의한 책임내각의 구현 곧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의 전제조건으로 정당의 존재를 중요시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과거의 朋黨은 公義보다는 私利에 치우치는 편벽된 私黨이며, 근대의 정당은 정치상 동일한 主義를 가진 자들이 조직하여 국리민복을 목표로 공의를 소중히 여기는 공당이라고 보았다.¹²⁰⁾ 그리고 김성희가 〈論政黨〉에서, “공중의 도덕성을 결집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雄力を 가지고, 議院에서 다수를 점하여 여론을 환기하고 國是를 유지하는 것이 국민적 정당이다”¹²¹⁾고 했듯이, 그들은 근대 정당이란 국회를 활동의 중심 무대로 하는 ‘국민적 정당’이라고 인식하였다.

119)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제1호), 30~32쪽.

120) 安國善, 〈政黨論〉(《會報》제3호), 24쪽.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제2호), 21~24쪽.

121)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제2호), 21~22쪽.

대한협회 평의원 安國善은 〈政黨論〉에서,

朋黨은 국가와 사회에 해를 끼침이 심하였지만, 政黨은 금일 진보한 정치상에 불가결한 필요기관이다. 정부가 비록 책임내각을 조직한다 할지라도, 정당의 조직이 완전치 못하면 그 실현을 보기 어려우며, 인민이 비록 多數政治를 실행코자 할지라도, 정당의 성립이 없으면 그 유익함을 거두기 어려우니, 이는 구미 각국에 屢驗한 바라. 고로 정당의 분립이 없는 국가는 없다(安國善, 〈政黨論〉(《會報》 제3호), 24쪽).

고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책임내각’과 ‘다수정치’의 실현을 위하여 정당의 존재와 정당의 분립이 불가결의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김성희가 “오늘날 세계에 정당 없는 입헌국가 없고 정당 있는 전제국가가 없다”하고, “정당이 세워진 연후에 국회가 이루어져 헌법이 정해지고, 헌법이 정해져 감독기관이 갖추어진 연후에 정부가 책임내각이 된다”고 했듯이,¹²²⁾ 애국계몽가들은, 정당은 입헌국가의 선결조건이며, 곧 국회개설에 의한 정부감독을 통하여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를 이루는 전제조건이라고 인식했던 것이다.

따라서 김성희는 정당의 책임을, “정부가 감독권을 스스로 줄 시기는 반드시 없을 것인 즉, 정부로 하여금 부득불 감독을 받게 하는 것이 국민적 정당의 책임이라”하고, 정부가 감독권을 스스로 주지 않을 것을 안다면, 국민이 마땅히 요구해야 하며, 그 요구의 목적은 ‘전국 통치기관을 대다수 인민과 더불어 共同’케 하는 것이고, 그 요구하는 것은 ‘憲法發布와 國會召集’이라고 하였다.¹²³⁾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정당은 정부로 하여금 헌법을 발포하고 국회를 소집하여 감독기관을 갖추도록 요구하여, 국가의 통치기관을 국민과 공유케 함으로써 책임내각 곧 국민적 정부를 이루게 하는 추진체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민적 정당이 국민적 정부의 수립을 추구하는 것은 곧 국민적 국가의 건설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22) 金成喜, 〈政黨의 責任〉(《會報》 제3호), 22쪽.

123) 위와 같음.

(2) 입헌군주정체론과 공화정체론

가. 입헌군주정체론

애국계몽가들은 국민국가건설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치체제를 구상하였던가. 그들은 전제정체에 대한 대안으로 입헌정체를 구상하였다.

대한자강회 부회장 윤효정은 입헌정치와 전제정치를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입헌정치의 정신은 君民同體이며 상하일치로 萬機를 公議에 의하여 결행하는 데 있으니, 그 운용하는 기초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公黨·公會에 있고, 전제정치의 특색은 君權無限이며 民권부진이며 上下睽離이며 전제억압으로, 그 운용하는 기관은 귀족 관료가 군주를 둘러싸는 私黨에 있다. … 대개 憲政은 그 근원을 자치정신에서 취하는 것이니, 헌정의 채용은 세계의 대세이며 문명의 정신이며 자연의 귀착이며 진리의 추향이라(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月報》 제5호), 19~21쪽).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전제정치는 군주와 私黨에 의해 운용되어 민권이不在하므로 군민상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 하여 전제정체를 비판 부정하고, 입헌정치는 국민 다수가 선택한 공당, 공회에 의해 운용되어 민권이 보장되므로 군민상하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다 하여 입헌정체의 채용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입헌정체의 근원은 自治精神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인민의 자치정신’은 ‘국가의 독립실력’에 직결된다고 보아, 국가에 자치제도를 구비하여 인민의 자치정신을 발휘케 하는 것이 국가독립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자기 지방과 국가에 일체감을 갖게 하여 건전한 독립국가를 조성케 하며, ‘君民一體와 上下一心을 이루게 함으로써 국권의 확장과 국력의 부강을 가능케 한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들은 먼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여 인민의 참정사상과 참정능력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立憲代議之制’를 실시하여 국가 萬年の 기초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²⁴⁾ 곧 그들은 지방자치제에 기반을 둔 입헌대의정체의 실시가 국민의 자치정신과 자치능력에 의한 국가의 독립능력

124) 尹孝定, 〈地方自治制論〉(《月報》 제4호), 18~19쪽.

과 독립유지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던 것이다.¹²⁵⁾

한편 윤효정은 국민의 애국심이 상실되면 국가는 形骸化하며, 애국심의 강약이 국가의 강약에 직결된다고 강조하고,¹²⁶⁾

국민 전체로 하여금 이 一大精神(애국심)을 발휘케 하는 데는 그 방법이 달리 없고, 오직 法制를 확립하고 민권을 공고히 하여 (국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히 하며, 自治制를 실시하고 선거법을 채용하여 점차 國政參議權을 부여하면, 君民이 同治하고 거국이 일치하여 국민이 國事를 自家事처럼 보게 할 수 있다 (尹孝定, 〈國家的 精神을 不可不發揮〉(《月報》 제8호), 7~8쪽).

고 하여, 법제의 확립에 의한 민권의 신장과, 자치제의 실시에 의한 국민참정권의 허용을 통하여, 국민이 국가와 일체감을 갖게 함으로써 강건한 애국심을 발휘케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강건한 애국심을 통한 강건한 국가의 형성은 지방자치제와 입헌대의정체에 기초한 국민참정권의 확립으로써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김성희는 논설 〈論國家〉에서 입헌정체는 평민의 사회·경제적 위치의 향상에 의한 정치참여 사상에서 연유한 것으로, 본래 평민주의에서 나왔으므로 평등권의 특질이 있으며, 입헌정체는 ‘국회대의사’를 통하여 인민이 입법의 책임을 가지고 행정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행케 하므로 대의기관의 특질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헌제도상의 군주제와 민주제는 국가원수의 선거제와 계속제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정치적 작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는 대의기관의 작용을 ① 모든 국민의 대표 ② 君權·민권의 법전상 제한 ③ 입법권의 보유 ④ 행정관의 감독으로 대별하고, 입헌대의제를 통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이 국가의 책임자가 되는 국가를 곧 ‘국민적 국가’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그는, 구미열강의 국민이 ‘세계상 일등 국민’이 된 것은 전제를 변화하여 입헌을 하고 국민을 국

125) 지방자치제 실시를 통한 민권의 신장과 국민참정권 및 자유권의 확대,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통한 국가독립의 기초 확립을 주장한 신문 논설로는 《皇城新聞》, 1906년 11월 2일, 논설 〈地方自治制度〉와 1907년 12월 22일, 논설 〈地方自治制〉 및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14일, 논설 〈地方自治說〉 등이 있다.

126) 尹孝定, 〈專制國民은 無愛國思想論〉(《月報》 제5호), 21쪽.

가의 주인으로 삼아 국가의 일을 맡도록 한 때문이라 하고, 우리 나라도 헌법의 발포와 국회의 설립을 추진하여 ‘國民國家’를 構造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¹²⁷⁾ 애국계몽가들은 헌법의 제정과 국회의 설립을 통하여 국민의 국정 참여가 확립되어야 국민국가가 형성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김성희는, 국가 멸망의 원인은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내치와 외교를 독단 처리하여, 국민의 불신을 사고 국가를 곤경에 빠뜨린 데 있기 때문에, 결국 전제정체의 罪라고 분석하고, 국가체제의 개조에 의한 국민적 내치와 국민적 외교를 제창하였다. 곧 그는 “지금의 세계는 입헌·전제양정체의 新陳嬗代之 시대”라 하고, 입헌정체를 채용해서 국민 대다수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하여, 국회의 개설과 지방자치의 실현에 의한 국민적 內治를 강조하였다. 또한 “지금 20세기 신세계는 국민적 외교의 시대라”하고, 외교 문제를 먼저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한 연후에 국민적 기반 위에서 실시하는 국민적 外交를 강조하였다.¹²⁸⁾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입헌대의정체를 채용, 의회를 통하여 내치와 외교 등 국정 전반에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 대다수의 정치와 국민의 동의에 의한 정치를 실현코자 하였다.

대한협회 회보편찬원 元泳義가 “장래 정치의 지극한 정도는 헌정과 민주의 완비 여부에 불과하다 하고, 헌정의 시조인 영국의 입헌정체는 오늘날 완전무결한 상태를 이루어 타국에 비해 우월하다”고 높이 평가했듯이,¹²⁹⁾ 애국계몽가들은 대체로 英國憲政의 우월성을 인정하였다. 김성희가 서양의 헌정사를 개관하는 가운데 영국을 헌정의 母國이라 하고,

문명국가의 헌법은 전제 범위를 벗어나 민권을 보장하고, 人民參政之權을 허용하여 全社會를 유지하고, 민선의원을 설치하여 정무를 감독하고, 자치제를 실시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군주의 神聖之位를 존중하여 책임지는 바 없게 한다. 이러한 제도가 없으면 그 국가가 없을 것이 분명하니, 안으로 憲政機關이 완비되면 밖으로 國家主權이 스스로 무결해진다(金成喜, 〈國家意義〉(《月報》제13호), 41쪽 축약).

127)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責任〉(《會報》제1호), 28~31쪽.

128) 金成喜, 〈國民의 內治 國民의 外交〉(《會報》제4호), 25~29쪽.

129) 元泳義, 〈政治의 進化〉(《會報》제7호), 26쪽.

고 했듯이, 애국계몽가들은 민권의 보장과 국민참정권의 허용, 민선의회와 지방자치제의 실시, 그리고 군주통치권의 유명무실화 등을 골자로 하는 입헌대의제의 완비가 국가 존립의 관건이라 하여, ‘영국형의 입헌대의제’가 당시 한국의 현실에서 추구할 수 있는 바람직한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다.

요컨대 대한자강회·대한협회 등 합법단체에 속한 애국계몽가들이 국민국가·국민주권국가의 건설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구상한 정치체제는 민선의회와 지방자치에 기반을 둔 입헌대의제 곧 입헌군주제였다. 애국계몽가들은 당시로서 입헌대의제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건설이 국민의 자유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자강독립을 확보할 수 있는 합당한 방도라고 믿었던 것이다.

나. 공화정체론

애국계몽가들은 입헌대의제 곧 입헌군주제를 국민국가 건설에 부합되는 현실적인 정치체제로 인식했으나,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 건설에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라고 생각하였다.

대한자강회의 평의원 설태희는 논설에서,

법률상 정체를 논함에 과다한 구별이 있으나, 대개 공화·입헌·전제로 논하니, … 가장 진보한 공화는 입헌에 勝하고 입헌은 전제에 勝함은 일견 알 수 있거니와, 각각 그 명칭은 다르나 원의는 모두 利國便民코자 하는 법칙이라. … 그 중 가장 未進位에 있는 전제로 말하더라도 군주가 독재라 할 뿐이요, 元義는 인민을 위하여 만든 것에 불과한 것인 즉, 감히 1인의 私意에 빠질 우려가 명료함에는 어찌 법이라 말하리요. 고로 나의 믿는 바는 소위 전제국은 곧 無法國이라 하노라(薛泰熙, 〈法律上 人の 權義〉(《月報》제9호), 12~3쪽).

고 하여, 정치체제를 공화정체·입헌정체·전제정체로 분류하고, 이 세 종류의 정치체제는 모두 利國便民에 근본 의도가 있으나, 가장 미진한 전제정체는 군주의 사의에 따라 운용되기 때문에 전제국을 ‘無法國’이라 매도하고, 공화정체가 가장 우수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설태희의 ‘共和政體優越論’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을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것이었다.

대한협회의 회보편찬원 원영의는 〈政體概論〉이란 논설에서, 정치체제를

군주정체와 공화정체로 대별하고, 다시 군주정체를 전제정체와 입헌정체로, 공화정체를 貴顯정체와 민주정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군주정체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공화정체는 군주와 신민이 共相和議하며, 전제정체는 독재이니 군주가 生殺與奪을 좌우하고, 입헌정체는 公立成憲하여 국가시책이 법을 준수하여 私意에 빠지지 아니하며, 귀현정체는 귀족현관이 법과 정치를 주도하여 서민은 그 지휘만을 받게 되고, 민주정체는 서민이 國事に 간여하여 군주·귀현이 정령을 행할 때 민의에 부합치 않으면 시행할 수 없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군주정치는 모든 시책에 오류가 없도록 보장할 수 없고 상하의 通情에 흠이 있으며, 공화정치는 至公無私하여 상하가 화동하므로 공화정체가 最美의 정체라고 평가하였고, 귀현정치는 상하의 권리에 있어 편벽되지 않을 수 없어 共公에 흠이 있으며, 민주정치는 만민의 公心에서 나와 상하가 大同하여 훌륭한 통치가 가능하므로 민주정체가 최미의 정체라고 평가하였다.¹³⁰⁾ 이같은 ‘民主共和政體 最美論’은 국가란 국민의 결집체이므로 모든 통치기구는 국민을 위해 설치되었다는 입장에 선, 설탤희의 ‘공화정체 우월론’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위한 정치의 목적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또한 원영의는 <정치 진화>라는 논설에서, 憲政은 국가의 모든 법률의 근본인데, 입법·사법·행정의 3대권이 군주에 귀일되어 ‘주권의 過盛한 압력’으로 인하여 인민이 반항하여 법률을 ‘議立共守’한 것이 공화정치의 기원이라 하고, 공화정치 중에서 귀족은 군권에 저항, 이를 제한하여 인민의 자유를 방호하는 공이 있으나, 특권의 힘으로 인민을 속박하는 폐단이 있게 되어, 평민의 지능과 재력이 성장함에 따라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천부의 자유를 지키려는 데서 민주정치가 유래했다고 하여, 국민의 자유를 위한 정치의 기원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의 진보성을 밝혔다.¹³¹⁾ 이어서 그는 같은 논설에서, 정치 진화의 단계를 神官政治·전제정치·입헌정치·공화정치·민주정치의 5단계로 구분하고, 신관정치는 어리석은 민중을 神意를 빌어 지배하는 단계, 전제정치는 강자가 압제적 위력을 자행하는 단계, 입헌정치는 민智의 계발로 헌법이 성립되어 무리한 압제를 벗어나는 단계, 공화정치는 군주·

130) 元泳義, <政體概論>(《會報》 제3호), 27~28쪽.

131) 元泳義, <政治의 進化>(《會報》 제7호), 25~26쪽.

신하의 자유 권리가 和同하는 단계, 민주정치는 평민이 귀족의 경멸을 받지 않고 일반권리를 지키는 단계라고 파악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정치 발전의 과정에 비추어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발전된 정체라고 평가하였다.¹³²⁾

《서북학회월보》 기고가 鮮于鑑 역시 〈국가의 개요〉라는 논설에서, “국가는 인민의 조직임과 동시에 특히 인민 의지의 조직이라” 하고, “전 인민의 의지가 직접 또는 간접(代議的)으로 독립 고유의 最高權이 된 경우에 이를 즉 民主共和制라 한다”하여, 민주공화제를 민의가 반영되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¹³³⁾

이상에서 살펴 본 것처럼, 애국계몽가들은 정치의 기원과 정치의 발전과정 및 정치의 목적에 비추어, 민주공화제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국민국가에 부합되는 가장 우월하고 진보된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당시 애국계몽단체로서 비밀결사였던 신민회는 그 通用章程에서,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며, 퇴폐한 교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 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였다.¹³⁴⁾ 그리고 그 취지서에서는, 내외의 韓人이 통일 연합하여 ‘독립 자유’로서 목적을 세우고, “新정신을 喚醒하여 新단체를 조직한 후 新國을 건설할 뿐이다”고 하여¹³⁵⁾ 新民의 육성에 의한 신국·자유문명국을 건설한다는 ‘新民新國論’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신민회는 신국·자유문명국의 정치체제로 ‘공화정체’를 구상하였다.¹³⁶⁾ 과거 독립협회의 회원들도 공화제를 잘 알고 있었으나 공화제에 대한 논의 자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¹³⁷⁾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군주제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또 당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회원

132) 元泳義, 〈政治의 進化〉(《會報》 제10호, 28쪽 및 《會報》 제11호, 22~23쪽).

133) 鮮于鑑, 〈國家論의 概要〉(《西北學會月報》 제12호), 9~10쪽.

134)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1965), 〈大韓新民會 通用章程〉, 1,028쪽.

135)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大韓新民會趣旨書〉, 1,027쪽.

136)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大韓新民會의 構成〉, 1,024쪽.

國友尙謙, 《不逞事件ニ依テ觀タル朝鮮人》, 188~189쪽(姜在彦, 《朝鮮の開化思想》, 258쪽 소재)에는 당시의 기독교도들이 ‘共和國의 건설’에 뜻을 두고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137) *The Independent*, November 1, 1898, "An Assembly of All Castes".

들도 공화제를 가장 진보적인 정치체제라고 인식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입헌 대의군주제의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 그런데 신민회가 공화제의 실현을 공식 목표로 설정한 것은 비밀결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며, 당시 합법단체들이 가진 정치체제 구상을 한 단계 높인 것이었다. 어쨌든 신민회가 구상한 ‘新民新國’은 공화정체에 기초한 자유문명국이었으며, 이것은 곧 근대 국민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같이 민주공화정체가 가장 진보적이고 최선의 정치체제라는 데에는 당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이나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구성원이나 인식을 같이 하였다. 그런데 비밀결사인 신민회가 공화제의 수립을 공식 목표로 설정했으나, 합법단체의 구성원들은 현실적으로 공화제의 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첫째로 당시 전제군주제 아래에서 혁명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는 한 표면적으로 공화제의 채용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합법적 계몽단체들은 점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체제의 단계적인 발전론을 긍정하고, 당시로서는 공화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당시 국민의 수준이나 사회 분위기로 보아 공화정체는 물론하고 입헌정체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전제군주제를 입헌대의제로 전환시키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였다.¹³⁸⁾

셋째로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은 입헌제도상 군주제와 민주제는 정치적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입헌대의군주제가 실현되면 공화제에서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어 실질적으로 민주정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¹³⁹⁾

요컨대 합법적 애국계몽단체의 구성원들이 현실적으로 추구한 정치체제는 입헌대의군주제였으나, 그들은 민주공화제가 국민국가에 가장 부합되는 최선의 정치체제라고 인식하였다. 나아가 비밀결사인 신민회는 민주공화제를 공식목표로 설정했으며, 그것은 우리 나라 민족운동사에 제기된 정치체제론의

138) 元泳義, 〈政體概論〉(《會報》 제3호), 28쪽.

139) 金成喜, 〈政黨의 事業은 國民의 責任〉(《會報》 제1호), 28~29쪽.

획기적인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의 맥락 속에서 일어난 3·1운동 직후, 국내외에서 출현한 모든 임시정부가 공화제를 내세우고 있었던 점은 한말 애국계몽가들의 공화정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깊이 음미해 볼 만한 일이다.

〈柳永烈〉

3.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1) 민중계몽운동

애국계몽가들은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일환으로 신문·잡지의 발간 및 강연회·토론회의 개최, 그리고 학교교육을 통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신문·잡지와 강연회를 통하여 ① 세계정세와 조국의 현실을 알려 국민의 분발을 촉구했고, ②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계몽했으며, ③ 민권사상·애국정신·국민국가의식을 고취했고, ④ 교육진흥·식산흥업·정치개혁의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¹⁾

또한 그들은 국권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를 설립하도록 계몽하였다. 이와 같은 애국계몽가들의 민중계몽운동은 사회 일반에 애국심과 교육열 그리고 독립의지를 일깨워서, 다수의 지식인과 실업가 그리고 민중들을 국권회복운동에 매진케 하였다.

(1) 신문 발간을 통한 민중계몽운동

애국계몽가들의 민중계몽운동은 인민의 지식을 계발하고 경제력을 향상하여 민족의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신문은 민중계몽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였다. 당시의 신문은 국권을 수호

1) 柳永烈, 〈列強의 東北아시아政略과 韓國의 國權恢復運動〉(《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 一潮閣, 1997), 347쪽.

하고 상실된 국권을 회복하려는 구국적 내용으로 채워졌다. 그 초점은 전근대적인 민중을 계몽하여 문명화된 근대적 국민으로 만들고, 민력을 양성하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데 두었다

이 시기 애국계몽신문으로는 《제국신문》(1898. 8. 10~합방)·《皇城新聞》(1898. 9. 5~합방)·《大韓每日申報》(1904. 7. 16~합방)·《萬歲報》(1906. 6. 17~1907.6.29)·《대한민보》(1909. 6. 2~합방) 등이 있었다.

李鍾一과 李承晩이 창간한 《제국신문》은 하층민과 부녀층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국문을 사용하였다. 그들은 일반 서민층에게 국문을 해독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자아의식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이 신문은 민중의 지식계발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곧 《제국신문》은 보도기관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오히려 국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계몽기관의 성격을 띠고 민중계몽운동에 진력하였다.²⁾

《황성신문》은 개명된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창간되었다. 張志淵·柳瑾·朴殷植·南宮德·申采浩 등 애국계몽가들이 주필로 활약한 이 신문은 일제의 침략정책을 폭로·규탄하며 국민계몽에 주력하였다.³⁾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황성신문》은 ‘是日也放聲大哭’이란 사설을 통하여 을사조약 체결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조약체결에 협력한 정부대신들을 규탄하며 온 국민들에게 항일의식을 일깨워 주었다.

《대한매일신보》는 梁起鐸·신채호 등 신민회의 주요 인사들이 주필로 활약하며, 일제의 침략정책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영국인 베텔(Ernest T. Bethell)이 양기탁과 합작으로 경영했던 《대한매일신보》는 국한문판·영문판·순국문판으로 발행되어 당시 최대의 발행부수를 냈으며, 영국인 소유로 되어 있었으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서 배일사상을 고취할 수 있었다. 이 신문은 이완용의 친일내각과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폭로·규탄했고, 항일의병운동과 친일과 암살활동 등을 상세히 보도하여 항일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고 이 신문은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설립운동과 민족자

2) 李海暢 〈言論機關의 活動〉(《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74), 41~42쪽.

3) 강재연, 〈국권회복을 위한 언론과 그 수난〉(《근대한국사상사연구》, 한울, 1983), 171~173쪽.

본육성을 위한 실업진흥운동을 적극 홍보하여, 그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에 노력하였다.⁴⁾

《만세보》는 천도교의 재정을 바탕으로 발간되었다. 천도교 교주 孫秉熙의 후원 아래 권동진·오세창 등이 창간한 이 신문은 그 발간 목적이 국민의 지식 계발, 곧 국민계몽에 있음을 천명하였다. 특히 《만세보》는 일반교육뿐만 아니라 여자교육에 주목하여 여성교육단체를 조직했고 여성단체와 연계하여 애국계몽활동을 폈다.⁵⁾

吳世昌·張孝根 등이 중심이 되어 大韓協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大韓民報》도 국권회복을 위한 국민의 지식계발에 발행 목적을 두었다. 《대한민보》는 국민의 사상을 통일하여 민족의 위기를 타개할 것을 강조했으며, 일진회의 합방성명이 발표되자 국민들에게 그 부당성을 폭로하며 합방반대운동을 주도하였다.⁶⁾

한편 해외에서도 교포들을 대상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신문이 발행되었다. 하와이에서는 《신조신문》·《한인시사》·《한인협성신보》·《新韓國報》, 美洲에서는 《共立新報》·《大同公報》·《新韓民報》, 露領에서는 《해조신문》·《大東公報》, 중국 상해에서는 《泰東新報》가 간행되어 항일의식과 자주독립의식의 전파에 노력하였다.⁷⁾

당시 애국계몽신문들은 신지식과 신사상의 보급으로 민중을 각성케 하고, 일제의 황무지개간권·을사조약·고종양위·한일합방의 강요 등 수많은 침략책동을 비판하였다. 일제는 1907년 7월 新聞紙法을 제정케 하여 민족언론을 규제하고 신문활동을 위축시켰으나, 애국계몽신문들은 합방 때까지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항일 여론을 일으켰다.

(2) 회지·잡지 발간을 통한 민중계몽운동

당시 애국계몽단체들은 《大韓自強會月報》·《大韓協會會報》·《西友》·《西

4) 강재언, 위의 글, 173~178쪽.

5) 李海暢, 앞의 글, 49~51쪽.

6) 李海暢, 위의 글, 52~54쪽.

7) 崔起榮, 《大韓帝國時期 新聞研究》(一潮閣, 1991), 193쪽.

北學會月報》·《畿湖興學會月報》·《湖南學報》·《嶠南教育會雜誌》·《太極學報》 등의 會誌를 발간하였다.

애국계몽단체들은 회지를 통하여 주장을 회원들뿐만 아니라, 민중들에게도 알리고자 하였다. 예컨대 대한자강회회는 “전국 동포 모두가 대한자강회월보를 읽어 조국정신을 배양하며 세계의 現狀을 이해하게 함이 국권회복의 正路이다”⁸⁾라고 하여, 모든 회원에게 회지 구독을 의무조항으로 부과했고, 일반 민중에게도 구독을 권유하여,⁹⁾ 회지발간의 목적이 국권회복운동의 기초로서의 국민의 의식계발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애국계몽단체들의 회지 내용은 그들 단체의 취지·목적·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체로 일반논설·교육논설·식산논설과 국내외 정세와 사건에 관련된 기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사회진화론·민권론·실력양성론·애국정신론·사회관습개혁론 등으로 특히 교육·식산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국권회복사상을 포함하고 있었다.

애국계몽단체들은 회지를 통하여 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 학교교육과 가정교육, 여성교육과 의무교육, 그리고 실업교육과 尙武教育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대한자강회월보》의 경우 1호에서 13호까지에 게재된 논설 181건 중 제목이 교육관계의 논설이 26건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¹⁰⁾ 《대한자강회월보》는 논설을 통하여 약육강식·적자생존의 국제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국민의 開明과 문명의 高度化가 약자를 강자로 만드는 길이며,¹¹⁾ 교육에 의한 국민개명이 정치발전을 통한 강국화의 길이라는 교육자강의 논리를 보급하였다.¹²⁾ 이처럼 애국계몽가들은 회지를 통하여 서양 문명국가의 근대적인 교육이념과 교육내용, 교육제도와 교육방법 등을 소개하며, 신교육에 의한 신학문과 신사상 보급의 중요성을 계몽하였다.

8) 尹孝定, 〈大韓自強會月報刊行祝辭〉(《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5쪽.

9)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卷末 〈注意〉 참조.

10) 柳永烈, 〈大韓自強會의 愛國啓蒙運動〉(《韓國近代民族主義 運動史研究》, 一潮閣, 1987), 50쪽.

11) 金成喜, 〈教師의 概念〉(《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25쪽.

12) 林炳恒, 〈官吏의 事業과 人民의 事業〉(《大韓自強會月報》 제7호), 58쪽.

李鍾濬, 〈教育論〉(《大韓自強會月報》 제7호), 1~2쪽.

애국계몽가들이 교육자강론과 함께 중요하게 다루었던 부분은 식산자강론이었다. 그들은 회지를 통하여 생존경쟁·우승열매의 국제사회에서 식산을 통한 국가부강의 실현이 국권회복의 길이라고 하여 경제구국의식을 계몽하였다.¹³⁾ 또한 그들은 한국의 식산부진과 국가빈약의 요인은, 수백년 간의 압제정치와 가렴주구, 그리고 전제국가의 重土主義(선비존중주의)와 관준민비의 폐습 등에 의한 국민의 근로의욕 상실과 산업기술의 부족에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따라서 그들은 회지를 이용하여, 정치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평등의 권리를 보장하고, 관준민비·직업준비의 의식을 타파하여 국민의 근로정신과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고, 각종 산업의 기술을 개발하여 생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⁵⁾

애국계몽가들은 회지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구체적 내용으로 농공상의 균형있는 발전과 임업·광업·鹽業 등 각종 자원의 개발을 주장하였다. 또한 그들은 國家富源増進策, 황무지 개간, 임업의 필요성, 토지개량, 종자개량 등에 관한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산업발달을 촉구하였다. 나아가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일본의 황무지 개간 요구의 底意를 폭로하며 민중들의 반대투쟁을 이끌어 냈다.¹⁶⁾ 한편 그들은 경제적 자주운동이었던 국채보상운동의 취지를 홍보하여 국민의 참가를 호소함으로써 그 운동을 광범위한 대중운동으로 전환시키기도 하였다.¹⁷⁾

애국계몽단체들은 회지 외에도 《소년》·《朝陽報》·《가정잡지》·《少年韓半島》·《大同報》·《教育月報》 등 수많은 일반 잡지를 발행하여 국민의 독

13)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4~35쪽.

張志淵, 〈國家貧弱之故〉(《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10~15쪽 · 제7호, 6~8쪽).

大韓子, 〈土地와 國家 人民의 關係〉(《大韓協會會報》 제6호), 12쪽.

14) 張志淵, 〈國家貧弱之故〉(《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10~15쪽.

金成喜, 〈殖産部論說〉(《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38~40쪽.

15) 金成喜, 위와 같음.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4쪽.

呂炳鉉, 〈殖産部論說〉(《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14~16쪽.

16) 鄭 灌, 《舊韓末期 民族啓蒙運動研究》(螢雪出版社, 1995), 35쪽.

17)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54~71쪽.

립정신을 고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1908년 11월에 창간된 《소년》은 신민회의 외곽 기관지로서 그 목표가 새로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애국계몽잡지였다. 《소년》의 편집 방침은 ① 애국정신 배양 ② 신지식 교육 ③ 勇敢한 志氣 장려 ④ 세계로의 시야 확장 ⑤ 애국주의적 국사·지리 교육 ⑥ 애국계몽문학 창건 보급 ⑦ 장차 국권회복의 일꾼 양성에 있었다. 이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소년》은 각국의 위인 영웅전·지리·국사·세계사 등을 게재하고, ‘애국계몽문학’이라 할 수 있는 新文學을 통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특히 ‘애국계몽시’라 할 수 있는 李光洙의 〈우리 영웅〉과 〈곰〉, 그리고 崔南善의 〈海에게서 소년에게〉 등 많은 시를 게재하여 청년들의 의식 계몽에 영향을 끼쳤다.¹⁸⁾ 尙洞靑年會에서 한글 전용으로 발간한 《가뉘잡지》는 부녀자를 주대상으로 하는 계몽잡지였다.¹⁹⁾ 그러나 계몽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실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가정으로부터의 개혁을 추구한 잡지였다.²⁰⁾

한편 회지·잡지 외에 창가집도 간행되었다. 그 내용은 愛國歌·少年冒險猛進歌·獨立歌·血竹歌·勸學歌 등 주로 애국심의 고취와 국권회복의 사상을 담고 있었다. 민족의 얼이 담긴 창가가 널리 애창되어 애국적 운동으로 확산되자, 일제 통감부는 민간인 저술의 창가집을 압수하여 창가를 통제하였다.²¹⁾

이와 같이 회지·잡지 등 출판물을 통한 자강독립사상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일제는 1909년 출판법을 공포하여 모든 원고는 통감부의 사전 검열을 받게 하였다.

(3) 강연회·토론회를 통한 민중계몽운동

애국계몽가들은 신문·잡지를 통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

18) 愼鍾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下)(《韓國學報》9, 一志社, 1977), 135쪽.

19)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使用에 관한 研究〉(《한국문화》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4), 72쪽.

20) 韓圭茂, 〈尙洞靑年會에 대한 연구(1897~1914)〉(《歷史學報》126, 1990), 104쪽.

21) 孫仁銖, 《韓國開化教育研究》(一志社, 1980), 390~397쪽.

라 강연회와 토론회를 통하여 직접 민중 앞에서 국권회복을 위한 계몽활동을 전개하였다. 신문·잡지가 구독 대상에 제약을 받는 것에 비해, 애국계몽강연은 전국에 걸쳐 직접 민중을 상대할 수 있었다. 애국계몽강연은 각종 단체의 通常會·강연회·토론회·친목회·학교 운동회 등 각종 집회에서 이루어졌다. 그 내용은 애국심의 고취, 신지식·신사상·신산업을 통한 실력의 양성, 실력양성을 통한 국권회복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애국계몽강연은 단체 또는 회원 개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초기의 강연활동은 명망있는 인사를 초빙하여 연설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형태였다. 전국적인 국민교육의 보급을 위해 창립된 國民教育會는 일부 有志인사들을 초빙하여 ‘생명재산 보호’, ‘民智開發’, ‘교육발달 事’ 등을 주제로 연설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의 애국심 고취에 노력하였다.²²⁾ 나아가 국민교육회 간부들은 각종 애국계몽단체의 통상회·총회, 지회 및 학교 연합운동회·간친회 등에 참석하여 강연활동을 벌였다. 대한자강회는 존속기간 17개월 동안 16회에 걸친 정기연설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42명의 연사들이 계몽강연을 했을 정도로 애국계몽강연에 주력하였다.²³⁾

서북학회는 강연을 통한 민중계몽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였다. 서북학회는 지식계발을 위한 강연활동을 목적으로 西北協成學校 내에 心學講演所를 설치하여 강연활동을 벌였다. 그 설립 취지는 당시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극복할 청년들의 올바른 방향을 이끌며, 민중의 양심을 계발하기 위하여 도덕을 연마하려는 데에 있었다.²⁴⁾ 이와 같은 취지에 따라 심학강연소는 민중, 특히 청년층을 주대상으로 강연활동을 전개하여 당시 청년들의 삶의 가치를 애국적인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런데 이러한 애국계몽강연은 일제의 탄압을 받게 되었다. 《소년》지는 잡지의 간행 외에 ‘少年雜誌社 公開講演會’의 개최를 시도하여, ‘失敗主義’(崔麟) 등 여섯 주제를 가지고 민중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가지려 하였으나, 일제의 금지로 무산되고 말았다.²⁵⁾

22) 申惠暉, 〈大韓帝國期 國民教育會 研究〉(《梨花史學研究》20·21, 1993), 156쪽.

23) 《大韓自強會月報》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本會會報〉와 〈本會會錄〉 및 《大韓每日申報》 관련기사.

24) 《西北學會月報》제10호, 〈心學講演〉, 19~21쪽.

25)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26일, 광고.

애국계몽강연에서 민중을 감동시키는 웅변으로 이름을 떨친 인사로는 안창호·이동휘·崔光玉·이상재·윤치호 등을 들 수 있다. 당대의 대표적인 강연가였던 안창호는 연설을 통하여 “民族競爭時代에서 독립한 국가 없이 민족이 서지 못하고 개인이 존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국민 각자가 각성하여 큰 힘을 모아야만 조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큰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각자가 분투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⁶⁾ 또한 그는 “지금은 군사력이 미약하나 장기적으로 착실히 전쟁을 준비하여 우리 나라를 侵害하는 강국과 開戰하여 국권을 회복하자”²⁷⁾고 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전쟁 준비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안창호의 강연활동으로 청중들은 많은 감명을 받아 婦女들이 비녀와 指環을 빼서 애국사업에 헌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계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²⁸⁾ 특히 巨商 이승훈을 감화시켜 교육·식산을 통한 구국운동에 헌신케 하였고, 안중근과 여운형도 안창호의 강연에 감동하여 민족교육에 진력하게 되었다. 역시 당대의 대표적인 연설가로 활약한 李東輝도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교육계몽을 위한 강연활동을 벌여 수많은 민족학교의 설립을 촉진시켰다.

이와 같이 애국계몽가들은 전국 각지를 순회하면서 강연회를 개최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각지의 사립학교에서 운동회 개최를 주도하며 계몽강연을 실시하였다. 서우학회는 각지의 사립학교들이 연합운동을 열도록 주선하고, 운동회에 반드시 總代를 파견하여 강연을 통해서 교육구국활동을 촉구하였다.²⁹⁾ 그리고 그들의 운동회 개최는 강연활동 외에도 또 다른 목적이 내포되어 있었다. 學部次官 俵孫一은 당시 운동회의 성격을 “武裝的 시위의 운동회이며 교육의 本旨와는 相符되지 않는다”³⁰⁾고 하였다. 이처럼 당시의 운동회는 단순히 체력의 증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의 자주독립에 대한 열망을 표출시키고, 장기적으로 실전에 대비하자는 목적하

26) 島山紀念事業會, 《島山安昌浩》(1947), 17~18쪽.

주요한, 《安島山全書》(三中堂, 1971), 57~63쪽.

27) 安昌浩, 雜俎 〈演說〉(《西友》 제7호), 25쪽.

28) 李松姬, 《大韓帝國末期 愛國啓蒙學會研究》(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5), 54쪽.

29) 李松姬, 위의 책, 44쪽.

3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 (1965), 919쪽.

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애국계몽가들은 운동회를 개최하여 애국계몽강연을 실시했고, 나아가 미래의 독립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실전훈련을 실시했던 것이다.³¹⁾

이와 같이 전국 순회강연과 각 지역의 지회활동, 대운동회를 통한 계몽강연은 민중의 지식계발과 애국심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곧 애국계몽강연은 애국계몽운동의 취지를 전국적으로 파급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민중으로 하여금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에 나서게 한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2) 교육구국운동

교육구국운동은 애국계몽가들이 국권회복을 위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실력양성운동이었다. 그러므로 애국계몽가들은 수많은 정치·사회·교육단체들을 조직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대에 들어 초기 애국계몽단체들은 全德基 중심의 尙洞靑年會와 헬버트를 회장으로 하는 황성기독교청년회처럼 선교사나 교회와 연계하여 교육·계몽·선교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李儁·李原兢·전덕기 등 애국계몽가들은 國民敎育會를 설립하였다.³²⁾ 나아가 을사조약 이후 대한자강회 등 전국적인 애국계몽단체들과 서우학회 등 각 지역단위의 애국계몽학회들이 조직되어 본격적으로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 및 신민회 등 무수한 애국계몽단체들은 학교 설립과 민족교과서 편찬, 그리고 의무교육과 실업·상무교육에 힘썼다.

(1) 근대학교 설립운동

애국계몽가들은 교육진흥을 위하여 일차적 과제로 전국 각지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식민지화 작업이 교육부문에서는 관공립학교를 통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애국계몽가들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여 근대

31)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京城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1926), 301쪽.

32) 申惠暉, 앞의 글, 151~152쪽.

교육과 민족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선구적 애국계몽학회인 국민교육회(1904. 8)는 일반국민의 교육 곧 보통교육의 발달에 설립 목적을 두고, 학교설립과 서적편찬에 노력하였다. 국민교육회는 普光學校(1905. 8)·漢南學校(1906. 9)·國民師範學校(1905. 12) 등을 설립하였다.³³⁾

한북흥학회는 漢北義塾(1906. 12), 서우학회는 사범양성을 위한 西友學校(1907. 11), 서북학회는 西北協成學校(1908. 1)를 설립하여 민족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서북협성학교는 師範速成科로 출발하여 이후 보통과와, 일제의 산림 침탈에 대응하려는 測量科를 두었다. 또한 서북학회는 노동계층의 교육을 위한 水商夜學校, 경제적 실력양성을 위한 농림강습소를 경영하였다.³⁴⁾ 이와 함께 서북학회는 각지에 支校를 설치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정치·사회단체들도 학교의 설립을 권장하고 직접 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였다. 대한자강회의 고령지회는 靈新學校를, 남양지회는 普興學校를, 의주지회는 自新學校를, 인천지회는 仁明學校를, 그리고 많은 지회들이 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대한자강회는 남양지회·의주지회·삼화지회가 학교관계로 지방관아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고, 인천지회의 학교설립시에는 본회 간사원을 總敎師로 파견하는 등 지방지회의 학교설립과 운영을 후원 장려하였다.³⁵⁾

대한협회의 지방지회들은 더욱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경영하였다. 전주지회는 涵育學校와 育英學校를,³⁶⁾ 포천지회는 玉成義塾과 莘野義塾을,³⁷⁾ 영흥지회는 洪明學校를 운영하였다.³⁸⁾ 해주지회는 鄉校 내에 사범학교의 설립을 추진했고,³⁹⁾ 碧城·大寧·齊民 3개 학교를 통합하여 學部에 인가를 청원하였

33) 申惠喤, 위의 글, 155·169~171쪽.

34) 李松姬, 앞의 책, 86~87쪽.

35) 《大韓自強會月報》제4호 46쪽, 제6호 76·82쪽, 제7호 61쪽, 제8호 58~59쪽, 제9호 44~46쪽, 제11호 67·72쪽, 제12호 71쪽.

36) 《大韓協會會報》제2호, 58쪽.

37) 《大韓協會會報》제5호, 57쪽.

38) 《大韓協會會報》제7호, 57쪽.

39) 《大韓協會會報》제4호, 58쪽.

다.⁴⁰⁾ 단천지회는 維新學校를 운영했고, 유신학교 내에 중학교를 세웠다.⁴¹⁾ 남해지회는 育英學校를 운영하기로 하고,⁴²⁾ 郡內 공공의 재산과 향교토지를 학교에 부속하기로 했다.⁴³⁾ 경성지회는 각 면과 동에 國文學校를 설립하기로 했으며,⁴⁴⁾ 제주지회는 폐교된 義興學校를 인수하여 경영했다.⁴⁵⁾ 덕원지회는 과거 대한자강회가 설립했으나 폐교 지경에 이른 普文學校를 인수하여 운영 했으며, 德源府 향교를 설득하여 향교 안에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다.⁴⁶⁾ 부안 지회는 永信學校를 운영하면서 開明義塾도 신설하게 되었다.⁴⁷⁾

대한협회의 지회들은 신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 설립에 노력했고,⁴⁸⁾ 삼립 산야를 일정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국유지로 몰수하도록 규정한 새로운 山林法에 대응하여 측량과와 측량학교를 설립하였다.⁴⁹⁾ 대한협회 지회들은 夜學校의 설립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대구지회는 國民夜學校를, 해주지회는 회관 안에 講習所夜學校를 설치했고,⁵⁰⁾ 남원지회는 법률·일어·산술 3과의 야학을 설립하였다.⁵¹⁾ 우리 나라의 야학은 1907년 7월에 설립된 馬山勞動夜學에서 비롯되었는데,⁵²⁾ 대한협회 지회들의 야학설립으로 더욱 확산되어 갔다.

신민회 회원들도 전국 각지에 무수히 많은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보창학교는 이동휘가 신민회의 노선에 따라 강화읍에 세운 중학교로, 강화군에만 21개의 소학교와 支校가 설립되었다.⁵³⁾ 대성학교는 안

40) 《大韓協會會報》 제12호, 56쪽.

41) 《大韓協會會報》 제11호, 52쪽.

42) 《大韓協會會報》 제6호, 68쪽.

43) 《大韓協會會報》 제6호, 68~69쪽.

44) 《大韓協會會報》 제7호, 57쪽.

45) 《大韓協會會報》 제7호, 59~60쪽.

46) 《大韓協會會報》 제9호, 57쪽.

47) 《大韓協會會報》 제12호, 56쪽.

48) 《大韓協會會報》 제4호, 58쪽 · 제12호, 25쪽.

《大韓民報》, 1910년 7월 23일, 〈教育界〉.

49) 《大韓協會會報》 제5호, 60 · 62쪽.

宋炳基(外) 《韓國近代法令資料集》 VI (國會圖書館, 1971), 233~234쪽.

50) 《大韓協會會報》 제8호, 62쪽 · 제12호, 56쪽.

51) 《大韓民報》, 1910년 5월 29일.

52) 이균영, 《신간회 연구》(역사비평사, 1993), 322쪽.

창호가 평양에 설립한 중등교육기관으로, 민족운동의 간부 양성과 국민교육의 사범양성에 목적을 두고, 지식계발뿐만 아니라 애국정신과 상무정신의 고양에 힘썼다. 그리하여 역사교육과 兵式體操를 중요시했다.⁵⁴⁾ 李昇薰이 평북定州에 세운 五山學校 역시 국권회복을 위한 인재양성에 역점을 두었으며, 항일독립투사를 배출한 신민회계열의 대표적인 학교의 하나였다.

한편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근대대학도 설립되었다. 1905년에 전문교육기관으로 보성전문학교가 설립되었다. 1906년 9월에는 平壤 崇實大學이 창건되었으며, 1910년 3월에는 梨花學堂 大學部가 설치되어, 함방 이전에 이미 우리 나라에 대학교육이 실시되었다. 특이한 사실은 우리 나라 최초의 4년제 근대대학인 평양 숭실대학이 기독교 선교사들과 평양주민들의 협력에 의하여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 보고서(1906)는 ① 숭실대학의 설립이 한국인들의 대학교육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여 계획되었고, ② 숭실대학 설립계획이 제시된 평양의 교회집회에서 2,000달러 이상의 엄청난 모금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 준다.⁵⁵⁾ 《大韓每日申報》(1906. 7)도 〈平壤大學校 설립을 축하함〉이란 장문의 기사 중에서, “근래에는 평양 예수교회에서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일반 남자들의 의견은 으레 있는 일이거니와, 同地의 부녀들은 금은 반지 패물 등속을 그 이름도 밝히지 않고서 앞다투어 기부하여, 며칠 되지 않아 수천원(약 6천원)에 이르렀다.”⁵⁶⁾고 경탄해 하였다. 을사조약 이후 애국계몽운동이 풍미하는 가운데, 숭실대학이 평양주민들의 거대한 모금에 힘입어 설립된 것은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 ‘평양주민의 대학’ 곧 ‘민족적 대학’의 성격을 띠고 설립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한국 최초의 근대대학이 애국계몽운동을 배경으로 하여 설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⁵⁷⁾

53) 李尙根, 〈愛國啓蒙團體의 教育救國運動〉(《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1992), 176~179쪽.

54) 金滢植, 〈平壤大成學校와 安昌浩〉(《三千里》, 1932년 1월호). 주요한, 앞의 책, 89쪽.

55) *Report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the Annual Meeting*, Seoul, Sept. 1906, p. 36.

56) 《大韓每日申報》, 1907년 7월 13일, 논설 〈賀平壤大學校設立〉.

57) 柳永烈, 〈韓國 최초 近代大學의 설립과 民族的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 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7), 104~107쪽.

애국계몽가들의 학교설립운동으로 1907년에서 1909년 사이에 무려 3천여 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어 근대교육과 민족교육이 실시되었다. 이에 일제는 1908년 8월 〈사립학교령〉과 〈학회령〉을 공포하여 민족교육을 말살하려 했고, 1909년 2월에는 〈寄附金募集取締規則〉을 제정하여 사립학교를 탄압하였다.⁵⁸⁾

(2) 교과서 편찬운동

애국계몽가들은 민족교육에 필수적인 국사와 국어교육 등을 올바로 시키기 위하여 교과서 편찬을 추진하였다. 당시 일제 통감부는 한국의 교육정책을 장악하고 한국의 자주적 민족교육에 제약을 가하고 있었다. 국사과목은 이미 1895년 갑오개혁 이후 學部가 설치되면서 교과과정으로 중요시되었으며, 국사교육이 애국사상 및 독립사상 고취에 중요하다고 인식되어 러일전쟁 이후에는 국사교육의 붐이 일어났다.⁵⁹⁾ 이에 통감부는 학부에 일본인을 배치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등 교육정책 전반에 관여하며,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교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억압하였다.

더욱이 통감부는 日文教科書を 편찬하여 식민지화 교육을 실시하려고 하였다. 일본인 學部 參與官 시데하라 히로시(幣原坦)가 日文中로 초등 및 중등 교과서를 편집하려고 하자,⁶⁰⁾ 대한자강회는 일문교과서에 의한 교육은 한국 정신을 소멸시킬 것이라 주장하고, 학부대신에게 일문교과서 편집문제를 강력하게 항의하였다.⁶¹⁾ 결국 일제가 추진한 일문교과서 편집은 애국계몽가들이 이끈 사회 여론에 의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일제는 1908년 ‘사립학교령’과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케 하여, 관찬 교과서에는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내용이 제외되었으나, 민간 교과서는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위주로 편찬되었다.

58) 尹漢喆, 〈韓末 私立學校令 以後 日帝의 私學彈壓과 그 特徵〉(《한국독립운동사연구》 2,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65~103쪽.

59) 金成俊, 〈舊韓末의 國史教育에 對하여〉(《大東文化研究》 8, 성균관대, 1971), 189쪽.

60) 《大韓每日申報》, 1906년 6월 6일, 잡보 〈教育禍胎〉.

61) 《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36~37쪽.

당시 대표적인 민간교과서 편찬자는 玄采·安國善·장지연·신채호·유근·鄭寅琥·元泳義·安鍾和·金宇植 등이다. 가장 많은 교과서를 편찬했던 玄采는 《普通教科東國歷史》·《東國史略》·《萬國史略》 등의 역사교과서와 《幼年必讀》·《幼年必讀釋義》·《大韓地誌》 등을 저술했고, 《淸國戊戌政變記》·《越南亡國史》 등을 번역했다. 그는 이와 같은 저서·역서를 통하여 열강에 침탈당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越南과 폴란드의 멸망을 귀감으로 삼아 조국이 자강하여 열강의 대열에 서기를 염원하였다.⁶²⁾ 또 다른 대표적인 교과서 편찬자인 안국선은 《禽獸會議錄》·《政治原論》·《比律賓戰史》 등을, 장지연은 《大韓新地誌》·《녀중독본》·《埃及近世史》 등을 편찬 번역하였다.⁶³⁾

그리고 교육단체와 정치사회단체도 독자적으로 교과서를 편찬하였다. 사립 학교인 徽文義塾은 교과용 도서로 《高等小學修身書》·《中等修身教科書》 등을 편찬하였다. 국민교육회에서는 인쇄소를 설치하고, 《大東歷史略》·《新撰小博物學》(1906. 6)·《初等小學》(1906. 10)·《新撰小物理學》·《初等地理教科書》(1907. 7) 등을 간행하였다.⁶⁴⁾ 《대동역사략》은 조선왕조의 개국기원을 사용하고 ‘任那日本部說’을 배제하는 등 당시 일본사학의 영향이 지배적인 학계, 교육계에서 民族史書로서 출간되었다.⁶⁵⁾ 보통학교용 국어 교과서로 쓰인 《초등 소학》은 일제가 의도하는 일어수업, 일어교과서 사용에 대한 위기감에서 편찬되어,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되었는데, 《황성신문》이 국가사상을 주입하는데 적절한 목적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독립의 원동력’이라고 평론할 정도로 민족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⁶⁶⁾ 興土團에서도 《初等本國略史》·《初等本國地理》 등을 독자적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책들은 철저한 민족주의적 사상과 배일사상을 담고 있었다.⁶⁷⁾

한편 민간에서 민족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교과서 편찬이 널리 확산되면

62) 盧秀子, 〈白堂 玄采研究〉(《梨大史苑》 8, 1969), 6쪽.

63) 東亞日報社, 《日政下禁書 33권》(《신동아》 別冊附錄, 1977), 254~276쪽.

64) 申惠暉, 앞의 글, 156쪽.

65) 趙東杰, 〈韓末史書와 그의 啓蒙主義의 虛實〉(下)(《韓國學論叢》 10,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1987), 155~159쪽.

66) 《皇城新聞》, 1907년 7월 15일, 논설 〈初等小學〉.

67) 白淳在, 〈教科書 編纂〉(《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84), 221~222쪽.

서 교과서 편찬을 목적으로 한 전문회사도 등장하였다. 1906년 4월에 설립된 廣學社는 동서의 서적을 참작하고 한국의 성질을 절충하여 초등교육에서 고등교육에까지 널리 쓰일 교과서를 편찬하고자 했다.⁶⁸⁾

그리고 애국계몽가들은 애국주의·민족주의 교육을 위한 교과서와 각종 서적을 널리 배포하였다. 서우학회는 민족교육에 필요한 교과서를 평양의 지방사무소를 통하여 각지의 사립학교에 배포하였다.⁶⁹⁾ 신민회는 1908년 평양에 太極書館을 설립하고 서울에 지점을 두어, 경향 각지의 학교에 각종 서적과 교과서를 공급하였다. 태극서관은 《三國史記》·《東國通鑑》·《擇里志》·《海東小學》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던 《漢文讀本》과 梁啓超의 《飲水室文集》 등을 취급하였다.⁷⁰⁾

애국계몽가들이 민족교육을 위한 교과서를 편찬하여 보급하자, 일제 통감부는 검정제도에 의거 학부에서 인가하지 않은 교과서의 사용을 금지시켰다.⁷¹⁾ 이에 《대한매일신보》는 학부의 교과서검정 방법은 한국을 멸망케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고,⁷²⁾ 민족적 교육기관은 인가받지 않은 교과서를 等寫하여 몰래 사용하기도 하였다.⁷³⁾

대한협회 평의원 장지연은 애국교육을 무리하게 금지하는 교과서 검정규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당분간 대한협회와 각 학회가 심사위원을 정하여 교과서를 균일케 할 것을 주장하였다.⁷⁴⁾

(3) 의무교육 실시운동

애국계몽가들은 민족의 실력양성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우리 역사상 최초

68) 《大韓每日申報》, 1906년 4월 28일, 잡보 〈廣學社趣旨書〉.

69) 《西友》 제6호, 會報, 46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4일, 잡보 〈教育模範〉.

70) 尹慶老, 〈新民會 活動의 經濟的 基盤〉(《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民族獨立運動史論叢》, 1992), 156~158쪽.

71) 高橋濱吉, 앞의 책, 178~185쪽.

72) 《大韓每日申報》, 1909년 3월 16일, 논설 〈國家를 滅亡케 하는 學部〉.

73) 김종덕, 〈한말계몽운동의 계보와 성격〉(《韓國의 社會와 文化》 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200쪽.

74) 金項旬, 《大韓協會 研究》(단국대 박사학위논문, 1992), 120~121쪽.

로 의무교육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들은 모든 국민이 신교육을 받을 수 있는 보통교육을 강조했고, 그 방안으로 의무교육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들의 의무교육 실시 주장에는 국민교육의 확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국민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대한자강회는 즉각적인 국권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교육진흥을 장기적인 국권회복의 방법으로 간주하고, 의무교육이 아니면 국민에 대한 교육의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의무교육 실시야말로 국권회복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역설하였다.⁷⁵⁾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 실시의 주장은 1906년 8월의 임시평의회에서 제기되었고,⁷⁶⁾ 10월 20일의 통상회에서 의무교육실시 건의안이 최종 확정되었다.⁷⁷⁾ 대한자강회에서 확정된 의무교육 실시안은 ① 적당한 행정구역을 단위로 學區를 정하여 區立小學校를 설치하고, ② 구립소학교의 설비와 유지비용은 학구 내 주민이 부담하며, ③ 학구 내 주민은 學務委員을 선출하여 교과서의 선정 등 학무 일체를 위임시키며, ④ 학령은 남녀 만 7세로부터 만 15세까지 8년간으로 하되, 처음 5년간은 初等科로 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자는 것이었다.⁷⁸⁾ 대한자강회는 1906년 10월 26일 정부와 중추원에 의무교육에 관한 건의서의 제출을 시작으로, 1907년 8월 해산될 때까지 참정대신과 학부대신을 면담하며, 지속적으로 의무교육 실시를 건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참정대신은 의무교육 실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소관부서인 학부와 협의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했고, 학부대신은 의무교육은 당연히 실시해야 하나 좀더 시간을 두고 실시방법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였다.⁷⁹⁾

한편 1907년 1월 9일의 중추원회의에서는 정부에서 자문한 의무교육의안을 통과시키고, 1월 하순과 2월 하순 2차에 걸쳐 의무교육의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였다.⁸⁰⁾ 서울 各署(5署)의 대표들도 정부가 우선 의무교육령을 반포하

75) 尹孝定, 〈今日國民之感念如何〉(《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51쪽.

76) 尹孝定, 〈義務教育實施議案〉(《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42~43쪽.

77) 《大韓自強會月報》 제5호, 37·43~44쪽.

78) 《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義務教育條例大要〉, 41~42쪽.

79) 《大韓自強會月報》 제6호, 76·78쪽, 제7호, 59~60쪽, 제8호, 65~66쪽.

80) 《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樞院會議〉, 66쪽·제9호, 〈樞院議決〉, 71쪽.

고 실시 가능지역부터 실시토록 학부에 건의하였다.⁸¹⁾ 이와 같이 각 방면으로부터의 의무교육 실시 주장에도 불구하고, 학부대신이 의무교육 실시 건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답변한 것은 “아직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⁸²⁾ 결국 의무교육령이 반포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시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對韓愚民化政策을 펴고 있던 일제 통감부가 의무교육 실시운동을 국권회복운동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이를 방해했기 때문이었다.⁸³⁾

대한자강회의 의무교육 실시운동은 비록 일제에 의해 저지당했지만 애국계몽단체의 신교육구국운동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 마침내는 평양 지역에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다. 서우학회는 대한자강회의 건의에 따른 정부의 처리를 기다릴 것 없이 곧바로 관서지역에서만이라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우선 평양군 각 면에 소학교 1개교와 敎務員 2인씩을 선정하여, 우리 나라 최초로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⁸⁴⁾ 한북흥학회 2대 부회장 이동휘도 강화군 군내의 유지인사들과 함께 學務會를 조직하고, 강화군을 56개 구역으로 나누어 학령에 달한 아동을 각 구역의 각 학교에 의무적으로 입학케 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했던 것이다.⁸⁵⁾

(4) 실업·상무교육 실시운동

애국계몽가들은 국민 보통교육을 위한 의무교육 실시운동과 함께 국민의 자립생활을 위한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국권회복 전쟁에 대비한 상무교육을 중시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국가의 독립은 자강의 실현에서 가능하고, 자강의 실현은 실업의 발달에서 가능하며, 실업의 발달은 지식 곧 교육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여 실업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⁸⁶⁾ 그들은 실업교육을 통하여 국민

81) 《大韓自強會月報》 제11호, 〈代表質稟〉, 73~74쪽.

82) 《大韓自強會月報》 제13호, 61쪽.

83) 愼鏞廈, 〈韓末의 愛國啓蒙運動〉(《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文學과 知性社, 1980), 85쪽.

84) 朴殷植, 〈祝義務教育實施〉(《西友》 제7호), 2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24일, 잡보 〈教育模範〉.

85) 邊勝雄, 〈韓末 私立學校 設立動向과 愛國啓蒙運動〉(《國史館論叢》 18, 1992), 51쪽.

86) 李鍾藩, 〈教育論〉(《大韓自強會月報》 제7호), 1~2쪽.

의 경제적 자립능력에서 얻어지는 개인적인 독립정신을 국가적인 독립사상으로 승화시켜 국가독립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⁷⁾ 나아가 그들은 실업교육을 통하여 각종 산업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國家富源을 증식하여 자강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⁸⁸⁾ 곧 애국계몽가들이 의도하는 실업교육은 국민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립과 향상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독립사상을 배양하여 국가의 독립과 부강을 도모하려는 교육이었다.

애국계몽단체들은 산업진흥을 위한 계몽활동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업부를 조직하고, 農業・工業・商業學校를 설립하여 실업교육을 실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⁸⁹⁾

예컨대 서북학교는 농림업의 발달로 경제적 도탄에 빠진 인민의 생활을 개선하고자 농림강습소를 설치하여 농업교육을 실시하였다.⁹⁰⁾ 대한자강회 회장 윤치호가 경영한 韓英書院은 과수・채소・원예・목축・목공・철공・피혁・직조・사진술 등의 과목을 개설하고, 농장과 공장을 갖추어 이론과 실습을 통하여 철저한 실업교육・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⁹¹⁾ 평양의 숭실학교는 교내에 목공부・인쇄부・鑄物部・철공부를 갖춘 공장 곧 崇實學校機械廠(Industrial Department)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자력으로 학비를 조달하게 하고, 졸업 후 유용한 사회인이 되도록 철저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였다.⁹²⁾ 이러한 실업교육・직업교육의 실시는 한국인 개개인의 근로정신의 고취와 경제적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국가적인 독립사상으로 승화시키려는 것이었다.

한편 애국계몽가들은 실업교육을 통한 국력의 배양에 못지 않게 독립전쟁

87) 呂炳鉉, 〈殖産部論說〉(《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15~16쪽.

88) 張志淵, 〈殖産興業의 必要〉(《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2~33쪽.

89)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일, 논설 〈西北學校內 農林講習所 發起〉・12월 18일, 논설 〈商業上 知識의 必要〉・1908년 6월 7일, 寄書 〈工業을 宜獎勵〉.

90) 《大韓每日申報》, 1909년 9월 2일, 논설 〈西北學校內 農林講習所 發起〉.

91) 金永義, 《佐翁尹致昊先生略傳》(基督教朝鮮監理會總理院, 1934), 198・209쪽.
尹致昊, 〈風雨二十年—韓末政客의 回顧談〉(《東亞日報》, 1930년 1월 15일).

92)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1910, pp. 12~13 "Student Help".
Catalogue of the Union Christian College and Academy, June 1913, Pyeng Yang, p. 13 "Self-help for Presbyterian Students".

에 대비한 상무교육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이 상무교육을 강조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권 상실의 중요한 원인이 文을 숭상하고 武를 천시하여 국력이 쇠약해진 까닭이라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文武의 균형적 육성이 천하의 두 개의 대업”이라 하고, 국가 권력을 회복하고 민족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스파르타식 상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⁹³⁾ 또한 그들은 세계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상무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며, 상무교육이 아니고서는 결코 국가정신·민족주의·문명주의를 유지하고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⁹⁴⁾

애국계몽가들은 당시 한국인의 군사교육은 현실적으로 각종 학교에서 체육교육을 통하여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⁹⁵⁾ 그리고 그들은 군사교육 곧 상무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은 “국민 일반의 체육을 발달시켜 국민으로 하여금 씩씩하고 활발한 기품을 갖도록 함에 있다”고 주장하였다.⁹⁶⁾ 애국계몽운동 당시 초기의 체육교육은 체조가 중심을 이루었다. 당시 학교체조는 주로 육군사관이 지도하는 군대식 兵式體操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부족한 체육교사와 체조의 보급을 위하여 각 학교 교사와 교원을 상대로 체조강습회도 개최되어 체육교육이 활성화되었다.⁹⁷⁾

이러한 군사적 실력양성을 염두에 둔 학교체육은 운동회의 개최로 더욱 확산되었고, 각급 학교의 운동회는 연합운동회로 발전하였다. 운동회에서 행해졌던 接戰競技는 砲兵隊·步兵隊·衛生隊·決死隊로 나누어 공격과 방어 등 실전과 같은 군사훈련을 하였는데, 이것은 단순히 체력증진이라는 목적 외에 국권회복을 위한 미래의 실전에 대비하고자 한 것이었다.⁹⁸⁾ 애국계몽가들의 상무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계몽으로 大韓體育俱樂部 등 민간 체육단체들이 발족되어, 상무적인 체육활동이 학교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일반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갔다.⁹⁹⁾

93) 朴殷植, 〈文弱之弊는 必喪其國〉(《西友》 제10호), 1~6쪽.

94) 《大韓每日申報》, 1910년 2월 27일·3월 3일, 논설 〈二十世紀 新國民〉.

95) 《大韓每日申報》, 1908년 9월 22일, 논설 〈教育勃興의 兆〉.

96) 《大韓每日申報》, 1908년 4월 10일, 논설 〈尙武教育의 必要〉.

97) 邊勝雄, 앞의 글, 96쪽.

98) 《皇城新聞》, 1908년 6월 9일, 잡보 〈分校運動盛況〉.

3) 경제구국운동

애국계몽가들은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된 요인의 하나는 殖産의 부진에 따른 국가의 빈약에 있다고 보고, 교육구국운동과 더불어 식산흥업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교육과 식산에 의한 국민의 지식과 경제적 향상을 ‘유일한 自強策’ 또는 ‘국권회복의 實務’라고 여겼던 것이다.¹⁰⁰⁾ 그들은 식산흥업 활동이 현실적으로는 일제의 경제적 침탈을 억제하고, 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부강을 통한 국권회복의 기초가 된다고 믿었다.¹⁰¹⁾ 그러므로 그들은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응하여 민족의 경제적 자립을 추구하는 경제적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일제의 황무지개척권 요구에 반대운동을 주도했고, 일제에 대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했으며, 일제의 토지침탈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케 했고, 민족자본의 육성에 의한 민족자립경제의 건설에 노력하였다.

(1)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

일본은 1904년 6월 나가모리(長森藤吉郎)를 통하여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한국의 막대한 山林・川澤 등의 개간권을 넘겨받아 사실상 한국의 토지를 약탈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1904년 7월 전 중추원 의관 宋秀萬・沈相震 등이 서울에서 輔安會를 조직하여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반대운동을 벌였다.

일본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는 일제의 대한제국에 대한 식민지화 계획 수행의 일환이었다. 일제는 러일전쟁 도발 직후 韓日議政書를 강제로 체결하고, 새로운 對韓方針을 강구하여 한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간섭체제를 갖추고,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경영을 위한 이권 획득을 급선무로 삼았다. 이러한

99) 邊勝雄, 앞의 글, 99쪽.

100)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大韓自強會趣旨書〉, 9~10쪽.

尹孝定, 〈志士의 眼淚와 學生의 指血〉(《大韓自強會月報》제8호), 52쪽.

101) 張志淵, 〈嵩齋漫筆〉(《大韓自強會月報》제2호, 17~18쪽・제3호, 9~10쪽).

일본의 계획을 실천하려는 것이 ‘對韓施設綱領’이었다. 그 중 ‘拓殖’ 문제에 관한 내용의 골자는, 한국을 일본의 식량과 원료 공급지 및 상품 시장으로 만드는 한편, 일본 안의 과잉 인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 전역에 일본인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었다. 일제는 이런 목적으로 1904년 6월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황무지개간권을 요구하였다. 그것은 국가소유 황무지에서는 일본인이 경작 및 축산의 특허 혹은 위탁을 받아 경영하고, 민유지에서는 외국인 토지소유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인정받게 하려는 것이었다.¹⁰²⁾ 일본이 한국 정부에 제시한 황무지개간권의 내용은 한국의 토지개간권, 토지의 이용수익권을 50년 기한으로 일본인에게 위임하라는 것이었다. 그들이 말하는 개간권은 한국 전체 황무지의 개간·정리·척식 등 일체의 경영을 통해 얻어지는 광범위한 수익권을 담고 있었다.¹⁰³⁾

사실상 일본이 대한제국 전국토의 30%에 해당되는 황무지를 무상으로 강탈하려는 요구에 대하여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졌다. 일본의 황무지개간권에 관한 계약을 둘러싼 한일 양국 정부의 논의가 분분할 때, 유생 21명이 전국 13도에 排日通文을 돌린 것을 계기로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이 촉발되었다.¹⁰⁴⁾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하여 관인과 유생들의 상소에 의한 초기의 반대운동은, 일본의 요구가 강압화함에 따라 輔國安民을 표방한 보안회 중심의 구국민중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보안회는 연일 서울 종로의 白木廬 都家에서 집회를 열고, 일본의 山林·川澤·原野·荒蕪地 개간권 요구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하며, 일본과의 교섭을 담당했던 외부대신 李夏榮을 성토하였다.¹⁰⁵⁾ 보안회의 황무지개간권 반대투쟁은 일본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위기의식이 팽배했기 때문에 신분 계급을 초월하여 거족적인 구국운동으로 전개되었다.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성토대회와 선언문 발표 외에도, 각국 공사관에 서한을 발송하여 일본의 부당한 요구를 국제여론에 호소하는 외교운동을 진

102) 《日本外交文書》37권 1책, 對韓方針竝ニ對韓施設綱領決定ノ件, 351~356쪽.

103) 尹炳奭, 〈日本人의 荒蕪地開拓權 要求에 대하여〉(《歷史學報》22, 1964), 42~44쪽.

104) 尹炳奭, 위의 글, 49~52쪽.

105) 《皇城新聞》, 1904년 7월 15일, 잡보 〈宋氏演說〉.

개하기도 하였다.¹⁰⁶⁾ 보안회의 민중을 동원한 조직적인 황무지개척권 반대투쟁은 일제의 경제적 침략에 대한 반대운동에서 전민중적 반일운동으로 확대되었다.

일제는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거족적인 반일운동을 강경한 방법으로 진압하였다. 일제는 1904년 7월 20일 서울 내외에 군사경찰제를 실시하고, 헌병대장에게 ‘군사경찰시행에 관한 실시사항’이란 훈령을 내려, 소위 치안에 방해가 되는 집회를 금지시키고, 황무지개간권에 반대하는 신문의 발행을 정지했으며, 반대운동을 주도한 보안회 간부들을 체포 구금하는 등 군사경찰에 의한 탄압을 강화하였다.¹⁰⁷⁾ 결국 보안회 중심의 거족적인 황무지개간권 반대운동에 직면하여, 정부는 “전국의 국토를 尺寸이라도 절대로 외국인에게 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3천여 명의 군중이 운집한 항의집회의 해산을 종용하자, 보안회는 집회투쟁을 보류하였다.¹⁰⁸⁾

보안회는 일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철회의 약속을 받고 해산하였지만, 보안회 都總務였던 李儁을 중심으로 大韓協同會(1904. 9)가 결성되어 일본의 황무지에 대한 야욕을 확실하게 분쇄하고자 하였다. 대한협동회는 결성 초기에는 회장 이상설, 부회장 이준, 총무 정운복, 평의장 이상재, 서무부장 이동휘, 편집부장 이승만, 지방부장 양기탁, 재무부장 허위 등의 조직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그 후 대한협동회는 이준을 회장으로 선출하고,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협조적이었던 궁내부대신 閔丙奭과 외부대신 李夏榮의 탄핵을 계획했으며,¹⁰⁹⁾ 일제의 토지침탈 획책 등을 성토했으며 반일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격렬한 반일투쟁의 결과 대한제국 정부가 마침내 ‘長森荒蕪付許可文券’을 돌려받고 일제의 황무지 침탈야욕을 저지할 수 있게 되었다.¹¹⁰⁾

결국 보안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일제의 황무지개간권 요구에 대한 반대운동은 정부 대신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을 망라한 구국민족운동으로 발전하여 일제의 침략야욕을 좌절시켰으며, 이것은 근대적 민

106) 《皇城新聞》, 1904년 7월 23일, 잡보 〈會長說明〉·〈函訴各館〉.

107) 《皇城新聞》, 1904년 7월 23일, 잡보 〈日兵捕縛會員〉·7월 25일, 잡보 〈押人散會〉.

108) 《皇城新聞》, 1904년 7월 25일, 잡보 〈政府告示〉·7월 28일, 잡보 〈諭禁撤市〉.

109) 申惠暲, 앞의 글, 160쪽.

110) 柳子厚, 《李儁先生傳》(東方文化社, 1947), 103~107쪽.

중운동의 효시인 독립협회의 만민공동회 운동과 비견되는 전민족적 반침략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2) 국채보상운동

한말에 일제의 경제침략은 막대한 차관을 대여하여 한국경제의 예속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에 애국계몽가들은 근대사회에서 행해지는 국민적 모금방식에 의하여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독립협회의 ‘국민적 모금에 의한’ 독립문 건립운동을 방불케 하는 국권회복을 위한 근대적 경제구국운동이었다.

일제는 1904년에 고문정치를 시작하고, 특히 을사조약 이후에는 한국경제를 파탄시켜 일본경제에 예속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소위 施政改善을 명목으로 한국에 高利의 차관을 대규모로 강요하였다. 1905년 한 해만 해도 일본으로부터 650여 만원의 차관이 도입되었고, 1907년 2월까지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짚어진 외채는 모두 1,300만 원에 달했는데,¹¹¹⁾ 이는 대한제국의 1년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예산 규모는 세입이 약 1,319만 원, 세출이 약 1,396만 원이었다.¹¹²⁾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國債를 갚고 일본에의 경제적 예속화를 탈피하려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 거족적인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애국계몽가들의 주도하에 시작된 이 운동은 고종 황제를 위시하여 전·현직 관료, 유생, 부인회, 군인, 해외 교포 등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초월하여 거족적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2월 16일 대구 廣文社의 특별회의에서 사장 金光濟, 부사장 徐相敦 등 10여 명의 공동 발기인 이름으로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書’란 격문을 전국에 발송한 데서 시작되었다. 발기인들은 국채보상취지에서 국고로 상환할 수 없는 국채 1,300만 원을 국민된 의무로서 갚아 국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으로 2천만 인민이 3개월 동안 담배를 끊고 그 대금으로 1인당 매달 20전씩을 거두어 1,300만 원을 갚자는 斷煙에

111) 申載洪, 〈主權守護運動〉Ⅱ,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257~258쪽.

112) 《大韓每日申報》, 1906년 11월 16일, 관보 〈光武 11年度 歲入歲出豫算〉에 의하면, 1907년도의 세입총액은 13,189,336원이고, 세출총액은 13,963,035원이었다.

의한 募金論을 제시하였다.¹¹³⁾

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국채보상운동 취지서가 발표되자 《황성신문》·《대한매일신보》·《제국신문》·《만세보》 등 당시 민족언론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국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였다.¹¹⁴⁾ 특히 대한매일신보사는 사원 전원이 단연을 결의하고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으며, 국채보상 의연금을 신문사가 직접 모금하고, 募金欄을 증면하면서까지 그 성명과 액수를 지상에 게재하였다.¹¹⁵⁾

애국계몽단체와 학회 및 전국 각지의 학교도 앞장서서 국민을 계몽하며 모금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3월 1일의 임시평의회에서 대한자강회 회원인 김광제의 국채보상에 관한 의안을 수리하고,¹¹⁶⁾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대한자강회는 《월보》 제9호 논설에서 ‘斷煙償債問題’를 논하고, 雜錄欄의 15면을 할애하여 국채보상운동을 극구 찬양하는 한편, 그 발기 경위와 경향 각지에서 조직된 국채보상단체의 취지서 7건을 全載하여 국채보상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¹¹⁷⁾ 그리고 대한자강회는,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 자체보다도 국민이 국가를 알고 ‘愛國鎮誠’을 표시하는 증거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하고,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大韓國 正當한國民의 新人口調査’이며 국권회복운동임을 강조하였다.¹¹⁸⁾ 또한 그 회원들은 개별적으로 국채보상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참여하여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한자강회는 국채보상운동과 때를 같이 하여 회원인 李鍾一·金相範 등 10명이 사회유지 44명과 함께 光武社를 발기하여, 외국인 수중의 鐵道償還運動을 통한 경제구국운동을 추진하기도 했다.¹¹⁹⁾ 서우학회도 ‘國債報償問題’라는 제목으로 유학생 등의 글을 싣고 의연금을 모집하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¹²⁰⁾

113)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59~62쪽.

114) 申載洪, 앞의 글, 260쪽.

115) 李尙根, 앞의 글, 22쪽.

116)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46쪽.

117) 張志淵, 〈斷煙償債問題〉(《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1~3쪽·57~71쪽.

118) 《大韓自強會月報》 제10호, 〈巷論衢謠〉, 67~70쪽.

119) 《大韓自強會月報》 제9호, 〈光武社趣旨書〉 및 관련기사, 54~56쪽

120) 《西友》 제6호, 〈國債報償問題〉, 27~33쪽.

국채보상운동의 결과 1907년 4월말까지 4만여 명의 국민이 모금에 참여했고 5월말까지 230여 만원의 기금이 모금되는 성과를 거두었다.¹²¹⁾ 그러나 국채보상운동은 통감부가 배일운동으로 간주하고 탄압하여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통감부 경무총감은 통감에 보고하는 가운데, 국채보상운동은 기독교청년회 · 대한자강회 · 대한매일신보 등의 후원하에 “그 목적은 현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일본의 국채 1천 3백만 원을 보상하는데 있다고 표방하나, 내용은 국권 회복을 의미하는 일종의 배일운동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확인하였다.¹²²⁾ 그러므로 통감부는 국채보상운동의 주동적 역할을 했던 대한매일신보사를 탄압하기 위해 사장 베델(Bethell)과 총무 겸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 회계인 양기탁을 의연금 30만 원 횡령죄로 몰아 구속하는 등 온갖 방해공작을 하였다.¹²³⁾ 결국 국채보상운동은 일제의 비열한 방해공작에 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의 실패 요인으로서는 통일적인 지도체제가 결여되었고, 고급 관료층과 부유층이 거의 모금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¹²⁴⁾

(3) 부동산침탈 반대운동

애국계몽단체들은 일제가 한국의 토지잠식을 획책하며 경제적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자, 이에 반대하여 부동산관계 법령의 제정을 통한 경제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에 일본인의 來韓移住者는 급격히 증가하여 농업 · 임업 · 어업 · 광업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5일, 광고 · 4월 3일, 잡보 〈西友開會〉.

121) 申載洪, 앞의 글, 262쪽.

최근의 趙恒來, 〈국채보상운동〉(《한민족독립운동사》 1, 국사편찬위원회, 1987), 668쪽에서는 약 188,000원으로 밝히고 있다. 후자에 공감을 하면서도 일단 통설에 따랐다.

122) 《駐韓日本公使館記錄》, 1907년 3월 2일, 〈出張中接受電信控〉.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6(探求堂, 1972), 590~591쪽.

123) 崔俊, 〈國債報償運動과 프레스 캠페인〉(《韓國新聞史論攷》, 一潮閣, 1976), 118~119쪽.

124) 李尙根, 앞의 글, 26쪽.

등 한국의 각종 산업에 침투하고 있었다. 장지연은 을사조약 이후 日人來韓者の 수는 1월에 5백여 명으로 1개월에는 1만 5천여 명, 1년에는 18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일본인 이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경제적 침탈에 의한 경제적 식민지화의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1904년 이래 문제가 된 일본인의 황무지개간권 요구도 결국 급증하는 일본인 이주자를 위한 것이라 하고,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인 스스로 전국에 산재한 황무지를 개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²⁵⁾

뿐만 아니라 장지연은, 을사조약 이후 일본인들은 토지를 불법매입하여 큰 자금을 들이지 않고 沃土를 획득함으로써 노력과 자금을 들여 황무지개간의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하고, 이런 추세로 가면 옥토는 일본인이 차지하고 한국인은 황무지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이처럼 일본인에게 田土를 불법으로 매도하고 典當잡히는 풍조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장지연 등 대한자강회 회원들은 토지의 불법매도의 금지가 경제적 식민지화를 막는 긴급한 과제라고 인식하였다.¹²⁶⁾

원래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제한한 조약은 1883년 韓英條約을 통하여 제정되었다. 이때 외국인에게 토지 소유는 개항장 10리 이내로 제한되었지만, 열강의 침략이 강화되면서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였다. 특히 일본의 불법적인 토지침탈에는 거의 대응력을 상실한 상황이 되어, 외국인 거류지로부터 10리 밖의 불법적 토지매매 현상은 점차 확대되어 갔다.¹²⁷⁾

이러한 일본인의 토지침탈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선 단체는 대한자강회였다. 대한자강회는 토지 불법매매의 원인은 ‘地契制度’가 일정하지 않고 법률이 엄정하지 않기 때문이라 하고, 1906년 5월 부동산 매매시에 관청의 증명서를 첨부케 하는 법령을 반포하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¹²⁸⁾ 대한자강회는 건의서를 통하여, 한국에는 아직 토지계약법이 확정되지 않아 관청을 거치지 않고 사사로이 토지를 매매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토지의 불

125) 張志淵, 〈嵩齋漫筆〉(《大韓自強會月報》 제2호), 18쪽.

126) 張志淵, 〈嵩齋漫筆〉(《大韓自強會月報》 제3호), 9~10쪽.

127) 鄭然泰, 《日帝의 韓國農業政策(1905~1910)》(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35~40쪽.

128) 《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39~40·53쪽.

법적인 매매와 전당이 성행하여, 인민의 산업이 꺾이고 사회의 풍기가 문란케 되었음을 지적하고, ① 전답·산림·原野를 매매·양여·전당할 때는 정당한 소유주가 확실한 계약문서를 동장 및 면장을 경유하여 당해 지방관청에 제출하고, 지방관청의 확인증명을 발급받은 후에 매매와 전당을 허용할 것, ② 증명서의 첨부이 없는 매매와 전당은 무효로 하고, 지방관의 조사 부실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는 지방관이 배상케 하고, 동장·면장의 공증이 소홀하면 이들을 처벌할 것 등을 법령으로 반포할 것을 요청하였다.¹²⁹⁾

이 건의에 대하여 참정대신 朴齊純은 정부에서는 대한자강회의 건의안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하나, 소관부서인 法部에서 ‘民産契約文書’가 확정되기 전에 官에서의 증명발급은 곤란하다고 하며, 사기·위조에 대한 벌칙은 의논중이라고 답변하였다.¹³⁰⁾ 그 후 대한자강회가 지속적으로 부동산증명서에 대하여 건의한 결과로, 1906년 10월 26일에는 칙령 제65호로 ‘土地家屋證明規則’이 반포되고, 11월 2일에는 法部令 제4호로 ‘土地家屋證明規則施行細則’이 반포되었으며, 11월 9일에는 이를 시행키 위한 法部訓令이 내려져 12월 1일부터 시행케 되었다.¹³¹⁾

그러나 일본은, 한국 내 일본인 지주·자본가·농민들의 개항장 10리 밖의 토지매매 요구에 따라, 한국 토지 침탈을 위한 관계법령 마련에 몰두한 결과,¹³²⁾ 외국인의 토지매매가 법적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대한자강회는 1907년 1월 9일의 통상회에서, 정부가 반포한 부동산관계의 법령은 토지·가옥이 외국인에게 불법매도되는 폐단을 막으려는 대한자강회의 의도와 달리, 오히려 전국의 토지·가옥을 내외국인에게 매도하는 것을 공인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1월 30일에는 정부에 질문하여 토지관계 법령의 시정을 요구하였다.¹³³⁾ 정책자문기구였던 중추원에서도 개항장 10리 밖의 외국인 토지소유

129)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建議書〉, 54~55쪽.

130) 《大韓自強會月報》제2호, 49~51쪽.

131) 宋炳基(외), 《韓末近代法令資料集》V(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71), 291~292·300~303·318~320쪽.

132) 鄭然泰, 앞의 책, 40~41쪽.

133) 《大韓自強會月報》제8호, 50쪽.

尹致昊, 〈政府質問〉(《大韓自強會月報》제8호), 70~71쪽.

허용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다.¹³⁴⁾

결국 부동산의 불법매매와 전당을 막아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일본의 경제적 식민지화를 저지하려는 애국계몽가들의 노력은 일제의 ‘보호국체제’ 하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¹³⁵⁾

(4) 민족경제 건설운동

애국계몽가들은 식산흥업을 통한 민족경제의 건설을 국권회복의 중요한 방책으로 삼았다. 그들은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낙오된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적 침체에 있다고 파악하고, 국민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 부강의 실현이 곧 국권회복의 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의 근로의식과 생산의욕을 고무시키고, 각종 산업의 생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식산진흥론을 제시했으며, 일제의 경제 침탈에 대한 경각심과 근대적인 경제의식을 일깨워 민족산업의 발흥에 노력하였다.¹³⁶⁾ 애국계몽가들은 경제적 계몽운동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민족경제의 확립을 위한 실천운동을 전개하여, 근대적 회사를 설립하고 한국인 상공회의소와 경제연구단체 및 실업장려단체들을 조직하여 경제적 자립과 국가의 부강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산업의 진흥에 상당한 성과를 낸 단체는 비밀결사인 신민회였다. 신민회는 민족산업 진흥을 위한 방법으로 “실업가에 권고하여 영업방침을 지도할 것”과 “본회에 합자로 실업장을設하여 실업계의 모범을 작할 것”¹³⁷⁾을 제시하고, 자립적 실업가 육성 및 합자회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곧 신민회는 민족산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신민회 회원들이 합자형태의 공장과 근대적 기업을 설립 발전시켜 민족자본을 육성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실천운동으로서 신민회는 商務同事·平壤磁器會社 등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경제단체를 설립하였다.

1908년 2월, 신민회는 서구의 근대적인 수입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업에 진

134) 《中樞院來文》, 1907년 1월 30일, 中樞院照會 8호.

135) 柳永烈, 앞의 글(1987), 57~59쪽.

136) 柳永烈, 〈大韓自強會와 新民會의 民族運動〉(《大韓帝國期の 民族運動》, 一潮閣, 1997), 193~194쪽.

137)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1(1965), 〈大韓新民會通用章程〉, 1,028쪽.

출하여 龍川 場市에 상무동사를 설립하였다. 상무동사는 신민회 지도부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주주가 참여한 합법적인 주식회사였는데, 자본금이 무려 9천여 원에 달하여 당시의 경제 상황에서는 거대한 규모의 회사였다. 상무동사는 이탈리아의 무역상사 巴馬洋行과 1만 5천여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서구 상품의 직무역을 시도했으며, 특히 일본 상품의 불매운동과 항세운동을 전개하였다. 1909년 4월 통감부가 市場稅를 제정 공포함에 따라 한국상인들의 항세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반일항세운동은 상무동사의 임원이었던 宋子賢·黃菊保 등이 주도하였다. 이후 항세운동은 일본인을 타살하는 商民蜂起로 비화되어 범국민적 항일운동으로 발전하였다.¹³⁸⁾ 요컨대 상무동사가 주도했던 항세운동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경제침략에 반대하여 토착자본을 수호하고 민족자본을 형성하고자 한 경제구국운동이었으며, 李昇薰이 외래 자본의 침투에 맞서고자 제창한 이른바 ‘關西資門論’과 상통하는 것이었다.¹³⁹⁾

평양 자기회사 역시 ‘관서자문론’의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설립되었다. 신민회는 민족산업 부흥의 상징으로서 磁器에 주목하여, 1908년 2월 평양에 磁器製造株式會社를 설립하여 도자기를 생산하였다.¹⁴⁰⁾ 이승훈 등은 총 1,200주를 공모, 자본금 6만 원을 모금하여 ‘평양자기제조주식회사’를 거족적인 민족산업으로 운영하려 하였다.¹⁴¹⁾ 그러나 총 주식 1,200주를 다 채우지 못하고 800주만 소화하였고, 제품의 생산단계에서 판매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자기회사는 일체의 경제적 침투가 심화된 당시 상황에서 토착자본을 규합하여 민족적 회사로 운영하려 했던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¹⁴²⁾

상무동사·자기회사 외에도 신민회는 평안북도 納淸亭에 무역상사 咸 都

138) 尹慶老, 앞의 글, 146~151쪽.

139) 金道泰, 〈南岡 李昇薰〉(韓國印刷株式會社, 1950), 42~46쪽. ‘관서자문론’은 서북지방의 상업공자들이 토착자본을 규합하여 민족자본을 형성하자는 주장으로 이후 영남, 호남지방의 토착자본과의 연계를 계획한 명실상부한 민족자본 형성론의 한 방책이었다.

140)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下)(《韓國學報》9, 一志社, 1977), 143~154쪽.

141) 《大韓每日申報》, 1908년 10월 16일, 광고.

142) 尹慶老, 앞의 글, 154~155쪽.

賣商社로서 ‘協成同社’를, 安岳에는 소규모의 모범 방직공장과 연초공장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민족경제 건설운동에 전력을 기울였다.¹⁴³⁾

대한협회도 신민회와 마찬가지로 민족산업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대한협회의 본회와 경성지회·부안지회·제주지회·덕원지회·광주지회 등은 實業部를 설치하고 식산흥업의 장려에 노력하였다. 대한협회 직산지회·영흥지회·창성지회·선천지회는 식목과 조림운동을 폈고, 군산지회는 모범농장의 건설을 추진하였다. 대한협회 자인지회는 실업권장회를 설치하여 농작물의 개량과 농산물품평회를 열었고, 경주지회는 근면회를 조직하여 식산흥업과 근면저축을 장려했으며, 전주지회와 군산지회는 회사와 상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기도 했다.¹⁴⁴⁾ 또한 서북학회도 민족산업의 진흥에 노력하여, 숙천 갈산동에 農會, 평양에 농림학교와 농사시범장, 그리고 철산에 製紙會社를 설립하여 실업장려운동을 전개하였다.¹⁴⁵⁾

이와 같이 애국계몽단체들이 각지에 상회사와 공장, 농회와 농장, 실업학교 등을 설립하여 민족산업을 진흥시키고, 외래자본에 대항하여 토착자본을 모아 민족경제를 확립하려 했던 경제구국운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규모의 민족자본으로 대규모의 일본 독점자본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애국계몽가들이 일제의 경제침탈에 대한 경각심과 근대적 경제의식을 일깨워 주었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근대산업의 진흥과 민족산업자본의 발흥에 기여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고 하겠다.

4) 정치구국운동

일본은 1894년에 청일전쟁을 도발하고, 1904년에는 러일전쟁을 도발하여 본격적으로 한반도 침략에 나섰다.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열강의 인정을 받고,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외교

143) 愼鏞廈, 앞의 글(1977), 145~146쪽.

144) 柳永烈, 〈大韓協會支會의 組織과 활동〉(앞의 책, 1977), 267~270쪽.

145) 李松姬, 앞의 책, 9쪽.

권을 박탈하였다. 그 후 일본은 통감정치를 통하여 대한제국의 점진적 병탄을 꾀하다가, 1907년 헤이그 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킨 뒤, 한국군대를 해산시키고, 결국 대한제국을 합병하였다.

애국계몽가들은 이와 같은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권회복과 국민국가건설을 위한 반일 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생존경쟁·우승열패의 국제사회에서 “정치의 우열이 국가의 강약을 좌우한다”¹⁴⁶⁾고 믿고, 국민에게 정치발전의 중요성을 계몽하고 정부에 정치개혁을 건의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여 을사조약 반대운동, 고종양위 반대운동, 한일합방 반대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다.

(1) 을사조약 반대운동

일본은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직후 한일의정서를 체결하여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간섭의 강도를 높였고, 5월에는 ‘對韓方針’과 ‘對韓施設綱領 및 細目’을 정하여 각종의 이권을 탈취하여 갔으며,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강제에 의하여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을사조약에 반대하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첫째로 趙秉世 등 유생·관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보호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의 처벌과 강제로 체결된 조약의 폐기를 황제에게 촉구하는 상소운동이 일어났다.¹⁴⁷⁾ 둘째로 고종황제와 왕실 측근들은 을사조약의 강제 체결을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일본에 대한 국제적 압력으로 조약을 취소케 하려는 외교운동을 시도하였다.¹⁴⁸⁾ 셋째로 閔泳煥·조병세 등 국권상실에 울분한 우국지사들은 죽음으로써 굴욕적인 ‘보호조약’에 항거하였다.¹⁴⁹⁾ 넷째로 위정척사

146) 李鍾溶, 〈教育論〉(《大韓自強會月報》 제7호), 1~2·5쪽.

147)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6(探求堂, 1972), 381~394쪽.

148) 董德模, 〈韓國과 20世紀初의 國際政勢〉(《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32~33쪽

李光麟, 《韓國史講座》5(一潮閣, 1981), 470~471쪽.

149) 朴殷植, 《韓國痛史》(三平閣, 1946), 90~96쪽.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6, 392~396쪽.

론의 입장에 있던 수구유생들은 무력으로 일본 세력을 몰아내고 국권을 회복하려는 항일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¹⁵⁰⁾ 다섯째로 개화자강계열의 인사들은 일본에 의한 국권의 일부 상실의 원인이 일본의 침략에 그 원인이 있지만, 우리의 실력부족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파악하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애국계몽가들도 을사조약 체결에 반대운동을 폈다.

애국계몽단체의 을사조약 반대운동은 조약 체결을 10여 일 앞두고, 일진회가 “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게 위임하여 일본의 지도와 보호를 받음으로써 국가 독립을 유지할 수 있고 국가의 안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서를 발표함¹⁵¹⁾에 따라 촉발되었다. 황성기독교청년회·상동청년회·국민교육회·동아개진교육회·대한구락부·공진회·헌정연구회 등 애국계몽단체들은 일본의 ‘보호정치’에 찬성하는 일진회를 규탄하는 범국민적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¹⁵²⁾

《황성신문》·《제국신문》·《대한매일신보》 등 애국계몽언론들은 기만적인 을사조약 체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편, 경향 각지의 조약반대운동을 상세히 보도하여 민족정신을 불러일으키고 반일운동을 고취시켰다.¹⁵³⁾ 황성신문사 사장 겸 주필 장지연은 〈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논설을 통하여 일본의 교활한 침략술책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을사조약에 찬성한 대신들을 비판하여 민족적 분노를 일으켰다.¹⁵⁴⁾ 《대한매일신보》는 죽음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민영환과 조병세의 순국을 찬양하고, 그 유서 전문을 신문에 공개하여 항일의식을 고취하고 국권회복에 매진할 것을 호소하였다.¹⁵⁵⁾ 애국계몽언론을 통한

150) 李元淳, 〈대한제국의 종말과 의병항쟁〉(《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6), 8~10쪽.

151) 《皇城新聞》, 1905년 11월 6·7일, 잡보 〈一進會宣言書〉.

152) 李求鎔, 〈主權守護運動〉 I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78), 231쪽.

153) 申載洪, 앞의 글, 234~235쪽.

154) 《皇城新聞》, 1905년 11월 20일, 논설. 이 논설 게재를 이유로 장지연은 경무청에 구금되고 《황성신문》은 압수 및 정간당하고 말았다(《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21일, 논설 〈皇城義務〉).

155)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3일, 논설 〈讀桂庭閔輔國遺書〉·12월 5일, 논설 〈讀趙元老遺書〉.

이들의 순국 소식은 온 국민의 반일감정을 격화시켰다.

기독교 청년학생들은 서울과 지방에서 을사조약 반대시위를 벌였다. 한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은 외세의 침탈과 지배층의 압제로부터 고통받는 한국민 중의 영적인 구원과 현실생활의 구원을 위한 선교교육을 실시하여,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는 강한 민족적 성향을 띠고 있었으며 항일구국운동의 온상이 되었다.¹⁵⁶⁾ 기독교 민족운동 단체인 尙洞靑年會¹⁵⁷⁾는 중등교육기관인 상동청년학원을 설립하고 학문을 통한 빈곤추방과 국세회복을 위해 활동하였다.¹⁵⁸⁾ 상동청년회는 1905년 11월 일진회의 을사조약 체결 책동에 반대하여 회원 천여 명이 구국기도회를 열어 항의했으며, 조약반대 상소를 올리고 大漢門에서 강제적인 조약체결반대 가두연설을 하였다.¹⁵⁹⁾ 그리고 회장 全德基와 鄭淳萬 등은 좀더 강경한 투쟁방법으로 박제순 등 을사오적의 암살을 모의했으나 일본군대의 삼엄한 경비로 실패하고 말았다.¹⁶⁰⁾

평양의 숭실학교 학생들은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한동안 수업을 전폐하고 을사조약 반대시위에 나섰다. 金永瑞 등 시위에 적극적인 학생들은 서울로 올라와서 200여 명의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한문 앞에서 연 3일 동안 을사조약 취소투쟁을 벌였다. 이때 평양 숭실학교 학생들은 서울의 기독교 민족운동 단체인 상동청년회와 연계하여 가두시위를 벌여, 서울과 평양의 항일 청년학생 연합시위를 연출했던 것이다.¹⁶¹⁾

한편 羅喆·吳基鎬 등은 계몽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을사5적의 암살을

156) 崔永禧, 〈乙巳條約을 前後한 韓國民의 抗日鬭爭〉(《史叢》 12·13, 1968), 612쪽. 韓根祖, 《高堂 曹晩植—偉대한 韓國人》 10(太極出版社, 1972), 84~85쪽.

157) 상동청년회는 전덕기·정순만 등의 주도로 이준·이동휘 등의 후원을 얻어 1903년 조직된 단체였다. 상동청년회 출신들은 신민회 등 애국계몽단체에서 활약하였고 신민회 창건의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특히 미주·연해주·간도 등 해외에서의 국권회복운동을 주도하였다. 명실공히 1900년대 국권회복운동의 발원지라 할 수 있다(韓圭茂, 〈尙洞靑年會에 대한 연구〉, 《歷史學報》 126, 1990).

158) 申惠喲, 앞의 글, 163쪽.

159) 金九, 《白凡逸志》(敎文社, 1979), 147~148쪽.

160) 鄭喬, 《大韓季年史》 下 (국사편찬위원회, 1967), 191쪽.

161) William M. Baird, *Pyeng Yang Academy, K. M. F.* vol. 2, No. 12 (October, 1966) p. 221. Lak-Geon George Paik,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1832~1910*, Union Christian Press, 1927, p. 330.

金永瑞의 對政府褒賞申請書 寫本 참조.

목적으로 비밀결사인 自新會를 조직하였다.¹⁶²⁾ 자신회는 을사조약 체결의 책임이 다섯 대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보호국체제에 대한 저항운동으로서 을사조약의 암살을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자신회 회원들은 폭탄장치를 한 상자를 선물 상자로 가장하여 참정대신 박제순과 내무대신 李址鎔의 암살을 기도했으며, 군부대신 權重顯을 권총으로 저격하는 등 다섯 명의 매국대신을 암살하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¹⁶³⁾

(2) 고종양위 반대운동

을사조약 체결 이후 일제는 통감정치를 실시하여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잠식해 오는 식민지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애국계몽가들은 정치체도의 개혁을 통하여 국민적 단결을 모색하였다. 그 중의 하나가 대한자강회의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주장이었다.

대한자강회를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가들은 자강독립의 전제와 목표로서의 ‘국민국가건설론’을 주장하였다. 그들은 국가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국가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국가 수립의 필요성을 계몽하였다. 그들은 국민국가에 부합되는 정치체제로서 共和政體가 가장 진보적이고 우월한 정체라고 인식했으나, 현실적인 실현 불가능성 때문에 立憲代議政體의 점진적인 실시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입헌대의제도의 실시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치능력 배양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의 자치능력 배양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¹⁶⁴⁾

대한자강회 등 애국계몽단체들의 입헌대의제도 확립을 전제로 한 지방자치제도 실시의 요구는 회원들의 논설과 연설 등 언론을 통하여 주장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중추원에 반영되어 1907년 1월 30일의 중추원 회의에서는 인민의 자치제도를 우선 서울에서부터 실시하자는 안건을 결의하여 정부에 회했고, 같은해 2월 25일의 중추원 회의에서는 인민자치제도의 실시를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¹⁶⁵⁾

162) 崔永禧, 앞의 글, 616~617쪽.

163) 申載洪, 앞의 글, 251~253쪽.

164) 柳永烈, 앞의 글(1987), 63쪽.

그러나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서, 더욱이 일본이 대한제국의 병합을 획책했던 상황에서, 한국민의 자치능력을 배양시킬 지방자치제도의 실시가 이루어질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자강회를 중심으로 한 애국계몽가들의 국민에 대한 정치의식의 고취와 그들의 정치개혁의 주장은 당시의 민족운동에 많은 영향을 끼쳤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¹⁶⁵⁾

1907년 전반기 애국계몽가들의 지방자치제도 실시운동 등 정치제도 개혁운동이 한창일 때, 일제는 헤이그 密使事件을 트집잡아 고종을 양위시키고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하였다. 자국의 황제가 외국의 강제력에 의해 양위되는 정치적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애국계몽단체들은 고종양위 반대를 통한 반일적 정치구국운동을 전개하였다.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은 미국·영국 등 열강의 국제적인 밀약으로 진행되었으나, 국제정세에 어두운 고종은 국제여론에 호소하여 국권을 회복하고자 3명의 밀사를 헤이그 平和會議에 파견하였다. 밀사 일행은 1907년 6월 25일 현지에 도착하여 외교활동을 벌였으나, 대한제국에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참석이 거부되고, 러시아·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각국 위원들로부터 면회조차 거절당한 채, 萬國記者協會에서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상과 을사조약의 강제성을 폭로하였다.¹⁶⁷⁾

이에 일본 정부는 헤이그 밀사사건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내정에 관한 전권의 장악을 목표로 세우고, 고종의 양위와 통감의 동의에 의한 행정, 그리고 대신·차관 등 주요 관직에 일본인 임명 등을 실현할 방안을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훈령하였다.¹⁶⁸⁾ 이토는 한국의 총리대신을 불러, 고종의 밀사파견은 일본에 대한 적대행위이고 협정위반이므로, 일본은 한국에 선전포고할 권리가 있다고 위협하여 고종의 양위를 강박했으며, 한국의 총리대신과 내각대신들은 일본 정부의 책임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종에게 양위를 강요하였다.¹⁶⁹⁾ 고종은 처음에는 양위를 완강히 거부했으나, 일제

165) 《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樞院議決自治制〉, 66쪽·〈樞院議決〉, 71쪽.

166) 柳永烈, 앞의 글(1987), 63~64쪽.

167)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6, 625~627·629쪽.

168) 위의 책, 634쪽.

169) 위의 책, 636~637쪽.

와 한국 내각대신들의 강요로 1907년 7월 18일에는 황태자에게 대리청정케 했다가, 7월 21일에는 황태자에게 帝位를 완전히 넘겨주게 되었다.¹⁷⁰⁾

헤이그 밀사사건에 대하여 통감 이토로부터 책임추궁을 받은 이완용 내각이 고종의 양위를 간청한 7월 16일 경부터 대한자강회·동우회·대한구락부·기독교청년회·국민교육회의 회원들은 서울 도처에서 연설로 민심을 고무하기 시작하였다.¹⁷¹⁾ 7월 18일 헤이그 밀사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일본 외무대신이 내한하자, 항간에 황제가 사죄차 渡日하리라는 설, 혹은 황제가 양위하리라는 설, 혹은 韓日新協約이 체결되리라는 설이 유포된 가운데, 대한자강회와 동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서울시민 수천 명이 궤기하여 종로에서 민중대회를 열고 대한문 앞에서 일본 경찰과 충돌하였다.¹⁷²⁾

7월 19일 황태자 대리청정의 소식이 전해지자, 대한자강회와 동우회 회원들은 종로에서 대중시위를 조직하여 내각대신들을 성토했고 決死會를 구성하여 일진회의 기관지인 國民新報社를 습격 파괴하였다. 한편 시위대의 일부 군인들은 탈영하여 종로파출소를 습격, 일본 경찰에게 사격을 가하여 사상자를 내기도 하였다.¹⁷³⁾ 황태자 대리식이 거행된 7월 20일에도 대한자강회·동우회 회원들을 비롯한 수만 명의 시민들은 慶運宮을 둘러싸고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대한자강회·동우회의 젊은 결사대들 주도하에 성난 민중들은 총리대신 이완용의 집을 방화 파괴하고, 시내의 경찰서와 파출소를 습격 파괴하였다.¹⁷⁴⁾ 그러나 7월 21일에 일본경찰과 헌병은 서울시내 요소에 기관총을 가설하고 삼엄한 경비를 펴 시민들의 시위를 봉쇄했고, 이런 가운데 고종은 황태자에게 완전히 양위하게 되었던 것이다.¹⁷⁵⁾

170) 위의 책, 638~643쪽.

鄭 喬, 앞의 책, 266~171쪽.

171) 釋尾東邦, 《朝鮮併合史》(朝鮮及滿洲社, 1926), 360쪽.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6, 636~637쪽.

172) 國史編纂委員會, 위의 책, 639~640쪽.

173) 위의 책, 640~641쪽.

釋尾東邦, 앞의 책, 361쪽.

174) 國史編纂委員會, 위의 책, 642~643쪽.

釋尾東邦, 위의 책, 362~363쪽.

175) 國史編纂委員會, 위의 책, 643~646쪽.

일제는 고종을 퇴위시킨 뒤, 곧바로 新聞紙法(7. 24)과 保安法(7. 27)을 반포하여 한국인의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활동을 질식케 하고, 丁未七條約(7. 24)과 軍隊解散(8. 1)을 강요하여 대한제국의 행정권·사법권·군사권을 탈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그리고 통감부는 이완용 내각의 宋秉畯으로 하여금, 대한자강회가 민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보안법 제2조 “내부대신은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結社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1907년 8월 21일에 대한자강회를 강제로 해산케 하였다.¹⁷⁶⁾

요컨대 일제의 강요에 의한 대한제국 황제의 퇴위라는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대한자강회 중심의 정치운동은 월보와 연설 등 언론과 출판을 통한 계몽운동 형태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대중시위 형태로 전환되었고, 이로써 대표적 애국계몽단체였던 대한자강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말았다. 일제의 보호국 체제하에서 애국계몽단체들의 정치운동이 언론을 통한 계몽운동에서 국권수호를 위한 대중시위로 전환되었을 때, 그 단체의 존립 자체마저 불가능했던 것이다.

(3) 한일합방 반대운동

1909년에 들어 軍部 주도하의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에 대한 적극정책을 추구하여, 6월에는 對韓 온건파인 통감 이토를 퇴진시키고, 7월에는 “적당한 시기에 한국의 병합을 단행할 것”과 “병합의 시기가 도래하기까지는 병합방침에 基하여 충분히 보호의 실권을 거두고 힘써 실력부식을 도모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국병합 방침을 확정하였다.¹⁷⁷⁾ 일제는 한국병합을 실현키 위한 정치 작업으로 9월과 10월에 걸쳐 소위 ‘남한폭도 대토벌작전’을 벌여 잔인하게 항일의병운동을 진압하고, 한편으로는 친일단체인 일진회를 앞세워 한국의 유력한 정치세력을 규합하여 한일합방의 여론을 조성시키려고 하였다.

176) 李鉉淙, 〈大韓自強會에 대하여〉(《震檀學報》 29·30, 1966), 170쪽.

《大韓每日申報》, 1907년 8월 23일, 別報〈吊大韓自強會文〉.

177)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6, 855~857쪽.

1909년 8월부터 태동된 일진회·대한협회·서북학회의 3파 제휴론은 대한 온건파인 통감 이토가 퇴진한 뒤, 일진회의 李容九와 宋秉畯이 한일합방을 추진하기 위하여, 먼저 국내의 유력한 정치 사회단체를 규합하려는 데서 시작되었다. 당시 유력한 정치 사회단체로는 대한협회·서북학회·일진회의 3개 단체를 꼽을 수 있었다. 대한협회와 서북학회는 평소에 배일주의를 표방하여 친일적인 일진회와는 전혀 입장을 달리했으나, 당시 이완용 내각의 횡포에 대해서는 다같이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일진회의 이용구 등은 그 일치점을 이용하여 3파 제휴를 실현하여 한일합방운동에 이용함으로써 합방정국을 주도하려 했던 것이다.¹⁷⁸⁾ 그런데 서북학회가 응하지 않게 되어 일진회와 대한협회의 제휴가 모색되었다.

대한협회는 대한자강회의 후신으로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국민적 정당을 자부하며 정권 장악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대한협회는 1908년 8월 ‘東洋拓殖株式會社法’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계기로 이완용 내각 반대운동을 전개하여 이완용 내각의 퇴진을 요구하는 단계에까지 갔다. 이러한 현상은 1909년 초반까지 지속되었다. 당시 대한협회는 정권을 담당하고 있던 총리대신 이완용뿐만 아니라, 합방론을 주장하는 일진회의 대표 송병준도 신랄히 비판하였다.¹⁷⁹⁾ 대한협회가 평소 賣國黨이라고 매도하던 일진회와 제휴하려는 주된 목적은 일진회와 제휴하여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장악하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¹⁸⁰⁾ 그러나 대한협회의 실력자 尹孝定은 일진회와의 제휴가 ‘聯合’이 아니고 ‘連結’임을 강조하고, 兩會 연결의 본의는 ① 국민생활 곤란의 구제, ② 거국일치한 여론의 확장, ③ 國情을 온건히 하여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¹⁸¹⁾ 곧 애국계몽단체인 대한협회가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제휴하고자 한 것은 우선 보호정

178) 李鉉淙, 〈大韓協會에 關한 研究〉(《亞細亞研究》8-3,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소, 1970), 39~40쪽.

179) 柳永烈·朴哲河, 〈大韓協會의 政黨論과 政治活動〉(《崇實大學校論文集-人文科學篇》25,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1995), 404~405쪽.

180) 李鉉淙, 앞의 글(1970), 28쪽.

181) 尹孝定, 《大韓民報》, 1909년 10월 26일, 〈兩會聯結의 主旨〉.

《大韓民報》, 1909년 11월 30일, 대한협회에서 작성한 〈聲明草案〉.

치의 현상을 유지하여 일진회의 합방노선을 견제하고, 일진회와 제휴하여 이완용 내각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운동의 한 방책이었던 것이다.

1909년 9월초에 시작되어 ‘國民團結’과 ‘國利民福’을 내세운 대한협회와 일진회의 연결운동이 진행되는 가운데, 10월 26일 安重根 의사에 의해 ‘이토 히로부미’가 피살되어 일제의 한국병합정책은 급진전되었다. 일진회는 정세의 변화를 감지하고 대한협회와 공동으로 한일합방 성명서를 발표하려고 했으나, 대한협회가 거부함에 따라 12월 4일 단독으로 한일합방 성명서를 발표하고, 3차에 걸쳐 한일합방 상소를 올리는 한편, 정부와 통감에게 한일합방 청원서를 제출하였다.¹⁸²⁾ 일진회의 매국적 합방성명은 전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규탄하는 상소와 연설 및 격문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쏟아져 나왔다.

대한협회는 12월 4일 일진회와의 분립을 선언하고 일진회의 합방성명을 반대 성토했다.¹⁸³⁾ 12월 5일에 대한협회·漢城府民會·國是遊說團·흥사단 등 정치·사회 단체의 회원들은 원각사에서 臨時國民大演說會를 개최하여,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성토했다. 한편 대한협회는 각 단체 연합하의 합방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¹⁸⁴⁾ 그러나 12월 12일 한성무민회에서 열기로 예정된 각 단체 연합의 국민대회는 警視廳의 집회금지령에 따라 원천 봉쇄되고 말았다.¹⁸⁵⁾ 이에 대한협회는 기관지인 《대한민보》를 통하여 일진회를 성토했고,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관망적 태도를 취하는 이완용 내각을 비판하는 등 합방반대 감정을 고무하였다.

일진회의 합방상소에 접하여 애국계몽언론인 《대한매일신보》는 “일진회가 이미 일본인이 되었다”고 규정했으며, 12월 8일자 논설 〈再告 韓國同胞〉에서는 매국적 일진회의 죄악사를 폭로 규탄하고 동포들의 쫓겨난 것을 촉구하였

182)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1, 460~473쪽.

183) 《大韓民報》, 1909년 12월 5일, 회보 〈大韓一進分立〉.

184) 黃玹, 《梅泉野錄》 6, 융희 3년 12월, 516쪽.

《大韓民報》, 1909년 12월 7일, 회보 〈韓會發起〉.

國史編纂委員會, 《高宗時代史》 6, 921쪽.

185) 《大韓民報》, 1909년 12월 11일, 회보 〈國民大會停止〉·12월 12일, 광고.

다.¹⁸⁶⁾ 천도교는 교도들에게 일진회 반대 성명문을 배포하여 일진회의 망동을 규탄했고, 기독교인 裴東鉉 등은 ‘일진회 성토문’에서 한일합방은 “政合邦이오 合併이 아니라”는 기만적인 일진회의 성명서를 성토했으며, 구세군에서도 전도회를 통하여 노예적 합방을 반대하였다. 한성부민회는 내각에 보낸 건의서를 통하여 일진회의 해산과 국민신보사의 폐쇄를 주장하였다.¹⁸⁷⁾ 유학생들로 조직된 大韓興學會에서도 대표 2명을 귀국시켜 일진회의 합방성명서 발표에 대한 성토문을 반포하였다가 경시청에 체포되기도 하였다.¹⁸⁸⁾

일진회의 합방성명에 대한 반대운동은 전국 각 지방으로 번졌다. 12월 8일 평양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일진회의 매국행위를 성토했고, 대성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그리고 대한협회 평양지회와 서북학회 평양지회도 합방반대를 결의하였다. 14일 평북 선천에서는 2천여 군민이 군의 客舍 앞에 모여 성토대회를 열고 일진회 박멸을 결의했으며, 16일 평북 철산에서는 대한협회 회원들이 시장에서 성토대회를 열고 일진회의 즉시 해산을 요구하는 電文을 정부에 발송하였다. 17일 황해도 해주에서는 대한협회 회원과 변호사·학교 교사들이 합방반대 국민대회를 계획했는데, 190명이 서명한 대회선언문은 “國賊 일진회를 규탄하고 전국에 성토의 義聲을 공포한다”고 하였다.¹⁸⁹⁾ 1910년 1월 3일 평북 영변에서는 장날을 이용하여 합방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400여 명의 읍민이 보통학교 교정에 모여 일진회의 합방장소를 규탄하고 이용구의 죄목을 나열하였다. 일진회의 매국행위와 합방에 반대하는 성토는 1910년 봄까지 지속되었다.¹⁹⁰⁾

결국 애국계몽단체들과 온 국민의 강력한 저항으로 일진회의 합방책동은 한동안 무산되었다. 한말에 많은 단체들이 등장하여 사회의 개명정보와 국가민족의 안녕을 주장하며 활동하였다. 비슷한 구호를 주장하는 애국계몽단체

186) 趙恒來, 〈舊韓末 社會團體의 救國運動〉(《省谷論叢》 7, 성곡학술문화재단, 1976), 566쪽.

朴成壽, 〈愛國啓蒙團體의 合邦反對運動〉(《崇義論叢》 5, 숭의여자전문대학, 1981), 61쪽.

187) 趙恒來, 위의 글, 569~570쪽.

188) 《大韓民報》, 1909년 12월 15일, 회보 〈警廳招問〉.

189) 趙恒來, 위의 글, 572~573쪽.

190) 國史編纂委員會, 《韓國獨立運動史》 2, 491~492쪽.

와 친일매국단체를 구분하기에 모호한 경우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상식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대한협회처럼 자강독립의 노선을 걸은 단체는 애국계몽단체로 분류되고, 일진회처럼 한일합방의 노선을 걸은 단체는 친일매국단체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5) 민족문화운동

애국계몽가들은 한말의 민족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민족의 전통문화와 민족의 자주정신을 일깨울 필요성에서 新學의 수용과 함께 國學의 진흥에 노력하였다. 그들은 실력양성에 의한 국권회복과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명제를 가지고, 自強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밖으로는 문명의 학술을 흡수하고, 안으로는 ‘조국정신’을 함양하는데 노력하였다.¹⁹¹⁾

애국계몽가들의 민족자주성의 고양과 조국정신의 함양을 위한 국학에 대한 관심은 우리의 언어와 국사 연구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국어국문의 연구와 그 대중적 보급운동에 앞장섰으며, 국사를 연구하여 근대적 民族史學의 수립에 기여하였다. 한편 한말의 天道敎와 大倮敎는 민족적 종교의 성격을 띠고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에 기여하였으며, 당시 기독교도 민족의식과 결합하여 애국계몽운동에 기여하였다.

요컨대 한말의 민족문화운동은 국어와 국사 등 국학을 진흥하고, 민족적 종교를 육성하여 민족자주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권회복을 기하려는 애국계몽운동이었던 것이다.

(1) 국어국문 진흥운동

한말에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은 민족자주성의 표출이었고 애국계몽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애국계몽가들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사랑이 민족애의 기초가 된다고 인식하여, 국어국문에 대한 연구와 보급으로 조국정신을 배양하여 자강과 자주독립의 의지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들은 한문

191) 《大韓自強會月報》제1호, 〈大韓自強會趣旨書〉, 10쪽.

을 모르는 다수의 일반 민중과 부녀층을 계몽하여 국권회복의 노선에 동참케 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 말을 널리 보급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곧 한말 국어국문 연구는 언어·문자의 연구 보급으로 민족 문제에 접근하려는 語文民族主義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¹⁹²⁾

우리 역사상 국문에 대한 관심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에 의하여 일깨워졌고, 문호개방 이후 개화지식인들에 의하여 크게 확대되어 국한문체의 사용이 늘어갔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 이후에는 公私文書에서 국한문 사용이 제도화되었고, 이 때부터 학교 교과서도 거의 국한문체로 간행되었다. 《독립신문》·《협성회회보》·《매일신문》이 순국문체로 발간되면서 국문사용이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국문운동은 민족운동과 맥을 같이하였다.

한말에 민족적 자각과 함께 강조된 국어국문의 연구활동은 국가기구를 통하여 추진되었다. 1907년 學部 안에 국문연구소가 설치되었고, 周時經·池錫永·李能和·魚允迪 등을 주축으로 하는 국문학자들의 연구 성과에 의하여, 이 시기 국문 연구의 총 결산이라 할 수 있는 ‘國文研究議定案’이 제정되었다.¹⁹³⁾

그러나 애국계몽가들 개개인에 의하여 국어국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한말의 대표적 국어학자인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1906)·《國語文典音學》(1908)·《국어문법》(1910) 등을 저술하여 국어국문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그는 국가 독립의 필수적 요건으로 영역·인종·언어 세 가지를 들고, 특히 “국가를 보존하고 흥성케 하기 위해서는 국어와 국문을 崇用해야 한다”고 했으며,¹⁹⁴⁾ “국가의 성쇠 및 存否는 국어의 성쇠 및 존부에 있다”고 하여 국가 독립을 위한 선결 요건으로서 국어국문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¹⁹⁵⁾ 그것은 국문의 숭상을 통한 국가의 독립과 발전을 이루려는 어문민족주의를 지향한 것이다.¹⁹⁶⁾

국문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약했던 박은식은 〈興學說〉·〈學規新論〉 등

192) 노인화, 〈근대문화의 전개〉(《한국사》 12, 한길사, 1994), 262~263쪽.

193) 李基文, 〈開化期の 國文研究〉(一潮閣, 1970), 35쪽.

194) 周時經, 〈國語文典音學〉(《周時經全集》 下, 亞細亞文化社, 1976), 156~157쪽.

195) 周時經, 〈國語文法〉 序(위의 책), 221~223쪽.

196) 李秉根, 〈愛國啓蒙主義時代の 國語觀〉(《韓國學報》 12, 1978), 186쪽.

에서 국민교육을 위한 방법으로 국문 전용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전국민의 교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국문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또한 그는 국문신문을 간행하고, 한문서적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국어국문을 대중화할 것을 주장하였다.¹⁹⁷⁾ 장지연 역시 국민교육의 확대와 한문의 폐지 및 국문의 전용을 강조하였다. 그는 〈國文關係論〉에서 한문의 난해성을 지적하고, 우리 국민들의 지식 개발을 위해서는 국문 사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애국사상의 근본은 쉬운 우리 말의 보급으로 국민을 계도함에 있다고 파악했기 때문이다.¹⁹⁸⁾

신채호도 국문으로 쓰여진 민족사를 편찬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자국의 언어와 문자로 자국의 歷史 地誌를 찬집하여 전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자”¹⁹⁹⁾는 그의 주장은 민족 언어의 효용성에 기초한 어문민족주의적 발상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민족의식의 함양에 역점을 두었던 국어국문운동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애국계몽가들은 국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국민들에게 신교육과 신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문신문을 간행 보급하였고, 국문교과서를 편찬하여 학교교육을 실시했으며, 국문으로 소설을 창작하여 일반대중에 접근했던 것이다. 그들은 국문교육이 조국정신을 보존하고 독립자존의식을 넓히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 국문교과서 편찬에 노력했고, 또한 사회 일반에 보급 효과가 큰 소설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불어넣기 위하여 국문으로 창작 활동을 했던 것이다.²⁰⁰⁾ 당시 국어국문운동은 우리 말의 대중적 기능을 활용하여 민족정신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국권회복운동이었으며, 국문소설의 창작은 사회 일반에 반봉건·반침략의 교육적 기능을 가지는 일종의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197)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朴殷植全書》中(1975), 13·17~18쪽.

198) 權寧珉, 〈애국계몽운동과 민족문학의 인식〉(《現代社會》4-2, 現代社會研究所, 1984), 208~209쪽.

199) 申采浩, 〈國漢文의 輕重〉(《丹齋申采浩全集》別集,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1977), 75쪽.

200) 權寧珉, 〈愛國啓蒙時代의 小說改革運動〉(《한국문화》5,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84), 94~104쪽.

요컨대 애국계몽기의 국어국문운동은 신교육과 신지식의 보급 확대라는 실용적 측면과 국가의 독립이 자국의 언어와 문자의 발전에 있다는 민족적 측면이 결합된 어문민족주의운동이었다.

(2) 국사교육 강화운동

근대적 자주자강과 민족의식의 고양을 위한 학문으로 국어 분야보다 더욱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된 분야는 국사였다. 민족주체성의 확립을 위한 국사연구와 국사교육은 이미 독립협회 때부터 강조되어 왔다. 독립협회 회원들은 “대한사람은 大韓史記를 이해해야만 하며, 대한사기 속에서 유명한 충신들을 공부하여 애국심을 배양하면 세계의 대접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여,²⁰¹⁾ 自國史 교육을 애국심의 연원으로 인식하였다.

독립협회 회원들의 자국사에 대한 관심은 애국계몽사가들에게 그대로 이어졌다. 애국계몽사가 玄鑾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역사를 알지 못하고 중국의 역사만을 숭상하여 애국심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국사교육을 통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자국의 연원을 알게 하여, 애국심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를 스스로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²⁾

또한 애국계몽사가였던 장지연은 〈新訂東國歷史序〉에서 국사에 대한 교육이 애국심과 민족정신의 고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를 연구한 신채호도 논설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에서 역사의식의 유무에 의하여 국가의 흥망이 좌우된다고 하여 역사와 국가와의 관계를 불가분의 동일체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그는 국민의 애국심은 웅변이나 연설 또는 세익스피어 같은 외국 대문호의 영향으로 길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와 사회 신분을 가리지 않고 국민 모두가 자국의 역사를 아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는 세계 열강의 정치적·경제적 선진화는 역사에서 나온다고 하고,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는 독립의 기초이며, 당시의 시대상황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역설하였다.²⁰³⁾

201) 《독립신문》, 1898년 3월 8일, 논설.

202) 玄鑾, 〈國朝故事〉(《大韓自強會月報》 제8호), 34~35쪽.

이와 같이 애국계몽사가들은 자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한 민족적 자아의 발견과 애국심의 배양을 국권회복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國脈’을 보유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⁰⁴⁾ 민족의 역사는 당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한 정신적·문화적 배경이며 민족운동의 지표이기도 했다. 따라서 애국계몽사가들은 자주독립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사연구에 몰두하였다. 애국계몽사학자인 張道斌은 당시 그의 학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국사였으며, 그 목적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후일에 술회하였다.²⁰⁵⁾ 이처럼 애국계몽기의 국사연구는 순수한 역사학의 탐구라기 보다는 애국·독립사상을 고취하기 위한 계몽적인 역사 지식의 보급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당시 역사서술은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강렬한 민족의식을 표출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三國遺事》·《三國史記》·《高麗史》·《東國通鑑》 등의 고전적인 역사서가 復刊되었고, 通史로서 黃玟의 《梅泉野錄》과 鄭喬의 《大韓季年史》 그리고 金澤榮의 《歷史輯略》 등이 저술되었다.²⁰⁶⁾ 그리고 근대 역사학적인 방법에 비교적 접근한 특수 연구로는 장지연의 《我韓衣冠制度考》와 《朝鮮儒教觀》 그리고 《朝鮮佛教觀》 등이 있었다.²⁰⁷⁾

사회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자국사가 편찬되고, 애국심과 민족의식의 고양을 위한 국사교과서가 간행되어 각종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1905년 이후 일본의 교육통제정책이 강화되면서 민족교육의 실시가 어렵게 되자, 초기 학부의 주도로 편찬되던 국사교과서는 점차 애국계몽사가들에 의해 편찬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의 국사교과서는 대부분 일제의 통제가 비교적 적은 사립학교용 교과서로 쓰였는데, 애국사상과 독립정신을 고취하는 민

203) 申采浩, 〈歷史와 愛國心과의 關係〉(《大韓協會會報》 제2호), 75쪽·제3호, 152~154쪽.

204) 丹齋申采浩先生紀念事業會,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上)》(1977), 471쪽.

205) 張道斌, 〈暗雲길은 舊韓國末〉(《思想界》, 1962년 4월호).

汕耘紀念事業會, 《汕耘張道斌全集》 권 1, 通史 I (1981), 11~13쪽.

206) 金容燮, 〈우리나라 近代歷史學의 成立〉(《韓國의 歷史認識》 下, 창작과 비평사, 1976), 425쪽.

207) 金容燮, 위의 글, 426쪽.

족주의적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²⁰⁸⁾ 국사교과서를 저술한 대표적 계몽사학자로는 元泳義·朴晶東·柳瑾·장지연·현채·김택영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국사교육을 통하여 민족정신을 강조한 애국계몽운동의 지도자들이었다.²⁰⁹⁾ 그러므로 일제는 1908년 교과용도서 검인정규정을 발표하여 민족정신이 깃든 민간 교과서의 저술을 탄압하였다.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 주도의 국사교과서 편찬에도 제약을 가할 정도로 민족적 국사교육에 탄압을 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09년 3월 출판법 제정 이후, 현채의 《中等教科東國史略》과 《幼年必讀》 등 민족교육의 지침서가 되었던 국사관련 서적은 발매가 금지되고 압수당했다.²¹⁰⁾

한편 한말의 애국계몽사가들은 본국사 이외에도 외국의 역사, 곧 세계 각국의 근대 정치흥망사·독립운동사·영웅전기물을 번역 발행하여, 일제 식민지화의 위협을 경계하고 자주독립정신과 서구적인 개혁사상을 전파하고자 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번역 사서로는 《埃及近世史》(장지연 역, 1905), 《波蘭國末年戰史》(魯塔善 역), 《越南亡國史》(현채 역, 1906), 《伊太利建國三傑傳》(신채호 역, 1907), 《乙支文德傳》(신채호 역, 1908), 《聖雄李舜臣傳》(신채호 역), 《金庾信傳》(박은식 역), 《美國獨立史》(현은 역), 《法國革命史》(현채 역), 《瑞士建國志》(박은식 역, 1907) 등이 있다.

요컨대 한말의 애국계몽사가들은 민족주체성의 확립과 애국심의 고취를 위한 民族史學의 수립에 노력하였다. 그것은 곧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민족운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계몽사가들은 전근대적 의식의 잔재 위에서 영웅의 행적을 역사 발전의 주요 동기로 인식하는 관념적인 영웅사관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다.²¹¹⁾

208) 白淳在, 〈教科書編纂〉(《한국사》 20, 국사편찬위원회, 1983), 225~228쪽.

209) 金成俊, 앞의 글, 178쪽.

210) 金成俊, 위의 글, 183~189쪽.

211) 金泰永, 〈開化思想家 및 愛國啓蒙思想家들의 史觀〉(《韓國의 歷史認識》 下, 創作과 批評社, 1976), 418~419쪽.

(3) 민족적 종교운동

애국계몽가들은 한말에 있어서 현실적인 국권회복의 길은 경제력과 군사력 같은 有形의 자강력보다는 오히려 無形의 자강력으로서 자국의 역사를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주체의식을 배양하고 이를 국민에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는 종교에 있다고 하는 ‘信敎自強論’을 주장하였다.²¹²⁾

한말에는 외세의 유입으로 한국의 전통문화가 붕괴되면서 각종 매국적 종교가 생성하였다. 민족적 종교운동은 일제 통감부의 종교계에 대한 친일화 공작에 대응하여 일어났다. 일제 통감부는 일진회를 지원하여 東學을 친일종교로 만들려고 했고, 大東學會(후에 孔子敎로 개칭)를 만들어 유교계의 친일화를 기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東亞基督教協會를 조직하여 기독교계를, 淨土教會와 神宮敬義會를 조직하여 불교계를 친일화하려는 공작을 폈다.²¹³⁾ 이에 맞서 애국계몽가들은 민족적 종교를 창건하거나 전래의 유교 및 외래의 기독교를 이용하여 구국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한말에 민족적 종교를 표방하고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대표적 종교는 1905년 12월 孫秉熙가 동학에서 개칭한 天道敎와 1909년 1월 나철이 창시한 大倮敎였다.

1894년 농민전쟁의 형태로 민족운동을 전개했던 동학은 1900년대에 이르러 李容九가 주도하는 侍天敎와 손병희가 주도하는 천도교로 분립되었다. 시천교는 일진회의 앞잡이가 되어 친일행각을 일삼았으며, 천도교는 애국계몽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1900년 동학의 3대 교주가 된 손병희는 과격했던 동학농민전쟁의 배타적 성격을 벗어나 개화의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어 갔다. 그는 1901년 이후 일본에 건너가 권동진·오세창·趙義淵·李軫鎬·趙義聞·朴泳孝 등 망명중인 개화파 인사들과 교유하면서 개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일본에 64명의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다.²¹⁴⁾ 1904년 이용구가 동학교도들을 중심으로 조직한

212) 《大韓每日申報》, 1905년 12월 1일, 논설 〈信敎自強〉.

213) 愼鍾度, 〈韓末의 愛國啓蒙運動〉(《韓國近代史와 社會變動》, 문학과 지성사, 1980), 92~93쪽.

214) 義菴孫秉熙先生紀念事業會, 《義菴孫秉熙先生傳記》(1967), 161·170~171쪽.

進歩會는 강연회를 개최하며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했으나,²¹⁵⁾ 진보회와 통합한 일진회는 1905년 11월에 일본의 보호정치를 주장하는 대국적 선언서를 발표하였다. 일본에서 이 사실을 들은 손병희는 1905년 12월 동학을 天道敎로 개명하고,²¹⁶⁾ 천도교 활동의 목표를 민족의 자주독립과 개화혁신으로 삼았다. 그는 귀국 후 친일단체인 일진회와 결별하고, 이용구 이하 62명을 출교시킴으로써 반일 민족종교로서 천도교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²¹⁷⁾

당시 천도교는 ① 자주독립의 실현을 위한 민족교육사업, ② 민智개발과 문명개화를 위한 언론출판사업, ③ 민족의식의 고취를 위한 국민계몽운동을 추진하였다.²¹⁸⁾ 천도교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하기보다는 재정난으로 학교 운영이 어려운 私學을 인수하여 경영하는데 주력하였다. 당시 천도교가 인수하여 경영한 학교로는 普成學校와 同德女學校가 있다.²¹⁹⁾ 한편 손병희는 귀국시 인쇄기와 활자를 들여와 인쇄소를 설치하고, 1906년 6월 천도교 기관지인 《만세보》를 발행했는데, 그 목적은 국민계몽에 있었다.²²⁰⁾ 그러므로 만세보는 국한문 혼용으로 발행되었고, 한문에는 반드시 한글로 토를 달아 민중계몽의 본래 취지에 충실하였다.²²¹⁾

이처럼 천도교는 한말에 민족교육을 실시하고 민족언론지를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했고, 다수의 천도교도들은 대한협회에 가입하여 애국계몽운동을 주도했으며, ‘한일합방’ 이후에는 기독교세력과 연합하여 3·1운동을 주도하면서 종교적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大倭敎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국조 檀君을 구심점으로 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의 단합을 추구한 민족적 종교였다. 羅喆·吳基鎬·金允植·金

215) 白世明, 〈甲辰革新運動과 東學〉(《韓國思想叢書》Ⅲ, 泰光文化社, 1975), 408~411쪽.

216) 《帝國新聞》, 1905년 12월 1일.

217) 《皇城新聞》, 1906년 9월 20일, 잡보 〈天道敎決議〉·9월 21일, 잡보 〈天道敎人黜敎〉.

218) 黃善禧, 《東學의 思想變遷과 民族運動研究》(단국대 박사학위 논문, 1990), 177~196쪽.

219) 金應祚, 〈天道敎의 文化運動〉(《人文科學研究》2, 성신여대, 1983), 62~67쪽.

220) 崔起榮, 앞의 책, 72~75쪽.

221) 金應祚, 앞의 글, 68~69쪽.

寅植 등 애국지사들은 한국의 독립은 민족의식과 주체적인 자주독립사상에 있다고 인식하고, 1909년 1월 檀君敎, 곧 대종교를 창시하였다.²²²⁾

원래 나철은 동양평화론에 입각하여, 그리고 국제공법과 한·일간의 조약에 근거하여 주권을 회복하고자 민간외교활동을 벌였으나, 을사조약의 체결로 외교를 통한 구국운동에 한계를 느끼게 되어 을사오적의 암살을 계획하게 되었다.²²³⁾ 그는 비밀결사인 自新會를 조직하여 을사5적의 암살을 기도하는 한편, 일본의 침략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²²⁴⁾

대종교의 계몽활동은 대한협회·호남학회 등 당시의 애국계몽단체와 연계하여 이루어졌다. 특히 나철은 오기호·尹柱瓚(대한협회 회원)·李沂·崔東植·金永采·金寅植·李光秀 등과 함께 호남학회에 가입하여 교육구국운동에 열중하였다. 이들은 국어·국사의 연구 및 민족교육에 전력을 기울였는데, 국사교육 특히 개국시조 단군을 구심점으로 하는 민족정신교육에 힘썼다.²²⁵⁾ ‘한일합방’ 이후 대종교는 1911년에 만주에 支司를 설치하고, 1914년에는 總本司를 북간도 和龍縣 靑波湖로 이전하여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를 설립하고, 무장투쟁을 위한 重光團을 창립하는 등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²²⁶⁾

이와 같이 대종교는 한말에 민족의식의 고취를 목적으로 조직되어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의 정신적 구심체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권피탈 이후에는 만주로 본부를 옮겨 수많은 애국계몽가들과 의병 출신 애국지사들을 입교시켜 항일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 1909년 이용직·김윤식 등 전·현직 고급관료와 박은식·장지연·원영의 등 개신유학적인 애국계몽인사들은 일제가 大東學會를 만들어 유림계를 친일화하려는 정치공작에 대응하여, 유교적 전통을 국권회복에 동원하고자 大同敎를 창건하여, 다수의 유림들을 애국계몽운동에 끌어들이며 민족운동

222) 朴永錫, 〈大倭敎의 民族意識과 民族獨立運動〉(《日帝下獨立運動史研究》, 一潮閣, 1993), 249~250쪽.

223) 박영석, 위의 글, 247~248쪽.

박 환, 《滿洲韓人民族運動史研究》(一潮閣, 1991), 261~266쪽.

224) 崔永禧, 앞의 글, 615쪽.

225) 박 환, 앞의 책, 269쪽.

226) 朴永錫, 앞의 글, 255~280쪽.

을 전개하였다.²²⁷⁾ 대동교는 儒敎求新의 입장에서 조직된 종교단체로, 전통 사상인 유교를 개혁하여 이를 구심점으로 민족의 단합을 유도하고 일제의 침략에 대항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민족적 종교운동 이외에도 외래적 종교 특히 기독교계의 민족 운동은 주목할만 하였다. 윤치호·이상재·안창호·이동휘·전덕기 등 다수의 기독교인 애국계몽인사들은 황성기독교청년회·상동청년회 등 기독교단체와 한영서원 등 근대학교를 설립 또는 운영하며 민족계몽과 교육구국운동에 앞장섰다. 전국 각지에 설립된 기독교 학교와 기독교 교회는 근대의식과 민족의식의 고양에 크게 기여하였다. 예컨대 기독교 선교사가 세운 평양의 崇實中學과 崇實大學은 그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을사조약 반대운동과 신민회의 국권회복운동에 참여했고, 조선국민회의 비밀결사운동과 평양의 3·1운동 및 평양학생 만세시위를 주도하는 등 항일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일제가 불온사상의 근거지로 간주할 정도로 북한지역 민족운동의 총본산이 되었다.²²⁸⁾

사실상 한말과 일제시대에 한국의 기독교는 신앙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문제의 해결에 힘을 기울여 다분히 민족적 종교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 일제시대에 민족독립운동의 최고봉을 이루는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16인이 기독교 신도였다는 사실은 이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6) 독립군기지 건설운동

대한제국 말기의 애국계몽가들은 국내에서는 국권회복을 위한 실력양성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외에서는 독립군을 양성하여 일제와 근대전을 벌여 국권을 회복하려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하여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을 추진하였다.

합법단체인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은 국권회복을 위하여 민

227) 愼鍾廈, 〈朴殷植의 儒敎求新論·陽明學論·大同思想〉(《歷史學報》73, 1977), 70~81쪽.

228) 柳永烈, 〈韓國 최초 近代大學의 설립과 民族的 성격〉(《한국민족운동사연구》15, 한국민족운동사연구회, 1997), 111~118쪽.

족의 실력양성을 강조했지만, 양성된 실력을 독립으로 연결시키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들은 근대적 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강건한 애국정신과 정치참여의 능력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실력이 양성되어 문명화가 이루어지면, 보호국체제가 철폐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²²⁹⁾ 그러나 일제의 병합정책이 더욱 강화됨에 따라, 다수의 애국계몽가들은 합법운동의 한계를 느끼고, 무장투쟁으로 일제의 침략에 맞서고자 비밀결사운동을 꾀하였다.

비밀결사 신민회 중심의 애국계몽가들은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함으로써 일제와 근대전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고자 하였다. 이제 이들 애국계몽가들이 구상한 독립전쟁론과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의 준비 및 그 실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독립전쟁론의 대두

1907년의 군대해산과 정미7조약 이후 대한제국의 행정권·사법권·경찰권을 장악한 일제는 한민족의 국권회복운동에 대하여 강도 높은 탄압을 가해왔다. 이에 당시 국권회복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던 항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의 일각에서는 항일투쟁의 방법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항일의병장 가운데서는 국내에서의 즉각 결전보다 국외에서의 장기적인 무장투쟁이 모색되었고, 애국계몽가들 가운데서는 국내에서의 실력양성에 더하여 국외에서의 무장투쟁이 모색되었다. 항일의병운동의 전통적인 ‘즉각결전에 의한 즉시독립론’은 실력양성에 의한 점진적 독립론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고, 애국계몽운동의 知的·경제적 ‘실력양성에 의한 자강독립론’은 군사력의 양성에 의한 근대적 독립전쟁론으로의 전환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독립전쟁론은 대한자강회·대한협회·서북학회 등 합법단체의 운동을 주도하던 인물들이 다수 포진한 비밀결사 신민회가 주도하였다. 신민회의 국권회복론은 기본적으로 먼저 실력을 양성한 다음 독립의 기회에 대비해야 한다는 ‘선실력 후기회론’이었다. 이러한 신민회의 선실력 후기회론은 대한자강회와 대한협회의 ‘선자강 후독립론’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229) 大垣丈夫, 〈本會趣旨〉(《大韓自強會月報》 제1호), 25쪽.

金嘉鎮, 〈我國有識者の 日本國에 대한 感念〉(《大韓協會會報》 제6호), 1~2쪽.

국외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여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군사적 실력양성론이었으며, 군사적 실력양성에 의한 독립전쟁론인 점에서 합법단체의 국권회복론과 차별성을 가진다.²³⁰⁾ 곧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의 구상은 일제로부터 한 국민족이 독립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독립군을 양성하여 적절한 기회에 일본과 근대전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는 것이라는 독립전쟁론에 의거한 것이었다.

신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애국계몽가들의 독립전쟁론은 1907년 7월과 8월, 일제의 강요에 의한 고종의 퇴위와 정미7조약의 체결, 그리고 군대해산 등의 망국적 사태가 벌어지고, 신문지법과 보안법의 제정으로 합법적인 민족운동이 극한점에 달한 상황에서 구상되었으며, 신민회의 국외 독립군기지 건설계획은 의병운동의 퇴조기에 구체화되었다.²³¹⁾ 신민회는 1909년 봄에 梁起鐸의 집에서 간부회의를 열고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는 사안을 의결하고 이의 실행을 계획하였다.²³²⁾ 그리고 독립군 양성의 거점으로는 1860년대 이래 많은 한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는 西北間島와 露領 연해주 지역이 상정되었다.

신민회가 구체적으로 독립전쟁론을 채택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한 때는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포살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된 신민회 간부들이 석방된 직후였다. 1910년 3월 신민회는 석방된 간부들을 중심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독립전쟁론을 국권회복의 최고 전략으로 채택하여 국외에 독립군기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신민회 긴급 간부회의는 일제에 의해 구속당했던 간부들이 우선적으로 국외로 나아가 독립군기지 건설사업을 담당하고, 국내 잔류 간부와 회원은 이 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종래의 실력양성운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²³³⁾ 이때 결정된 독립군기지 건설사업의 구체

230) 柳永烈, 〈愛國啓蒙派의 民族運動論〉(앞의 책, 1997), 300~301쪽.

231) 元義常, 〈新興武官學校〉(《新東亞》, 1969년 6월호), 236쪽.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군전투사〉(상), (《독립운동사》 5권, 1973), 162~163쪽.

232) 元義常, 위의 글, 236쪽.

233) 島山紀念事業會, 《續篇 島山安昌浩》(1954), 〈李剛回顧談〉, 134~145쪽.

주요한, 《安島山全書》(三中堂, 1971), 896~897쪽 附錄 〈安昌浩豫審訊問記補遺〉.

적인 내용은, 첫째로 국내에서 재력있는 다수의 인민을 서간도에 집단 이주시켜 토지를 매입하여 부락을 만든다는 것, 둘째로 서간도에 ‘民團’을 조직하고 학교와 교회를 설립하며, 나아가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文武雙全教育을 실시하고 士官을 양성한다는 것, 셋째로 이들을 중심으로 독립군을 창설하여 기회를 틈타 독립전쟁을 일으켜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²³⁴⁾

이것은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여 적절한 시기에 일본과 독립전쟁을 전개함으로써 독립을 쟁취하려는 독립전쟁 전략이며, 당시 합법단체들이 지닌 국권 회복론의 한계성을 한 단계 극복한 것이었다. 여기에서 ‘민족의 실력’이란 근대적 지식과 경제적 자립능력, 그리고 확고한 민족정신과 근대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란 장차 일제가 더욱 팽창하여 러시아나 청국 또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와 같은 독립전쟁의 기회를 의미한다.²³⁵⁾ 신민회의 독립전쟁전략은 일본 제국주의가 팽창정책을 써서 열강과 전쟁을 일으키면, 국외의 독립군으로 하여금 국내진공작전을 벌이게 하고, 국내에서는 신민회를 비롯한 애국계몽세력들이 민중을 결집하여 이에 호응함으로써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신민회의 독립군기지 건설론은 일제가 장차 침략전쟁을 벌이는 기회에 대비하여, 일제의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서북간도에서 독립군을 양성하여 독립전쟁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²³⁶⁾

(2) 독립군기지 건설준비

국외로 망명한 신민회 간부들은 1910년 4월의 靑島會議과 9월의 海蔘威會議에서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²³⁷⁾ 그러나 독립운동 근거지를 만들기 위한 한인들의 만주에서의 활동이 시작된 것은 이

234) 尹炳夷, 〈1910年代의 韓國獨立運動〉(《韓國近代史論》Ⅱ, 지식산업사, 1977), 30쪽.

235) 尹炳夷, 위의 글, 27쪽.

236) 尹炳夷, 위의 글, 26~28쪽.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05人事件公判始末書Ⅰ-》(1986), 290·295·305·312·315쪽.

國史編纂委員會,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105人事件公判始末書Ⅱ-》(1986), 79~80쪽.

237) 安昌浩, 〈豫審訊問記補遺〉(《安島山全書》, 三中堂, 1963), 859~899쪽.

미 을사조약 체결 이후부터였다. 이때 북간도의 龍井村과 明東村, 蘇滿國境에 위치한 密山府의 韓興洞에서는 애국계몽인들이 학교를 설립하고 근대적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다.²³⁸⁾

1910년 4월 안창호·李甲·柳東說·신채호·金義善·李鍾浩·金志侃·李剛 등은 중국 청도로 출국하여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책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청도회의에서는 우선 신문·잡지의 발간으로 독립정신을 계몽하자는 유동열·김희선 등의 입장과, 농지개간 사업으로 당장 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자는 안창호·이갑 등의 입장으로 나뉘어 독립군기지 건설준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²³⁹⁾

합병 직후 1910년 9월에 열린 해삼위회의에서 신민회 간부들은 독립전쟁론에 뜻을 같이 했으나, 그 추진 방법에 있어서는 급진적 전쟁론과 점진적 전쟁론으로 나뉘었다. 곧 유동열·김희선 등은 국권이 상실된 상황에서 장기적인 독립군의 양성보다, 당장 국외 교포들을 모아 독립군을 결성하여 즉각적으로 국내에 진공할 것을 주장한 반면에, 안창호·이갑 등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신한민촌과 무관학교를 건설하여 독립전쟁의 토대 구축에 힘을 쓸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독립운동 노선상의 갈등으로 힘이 분열되어 안창호·이갑 등의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은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²⁴⁰⁾ 유동열·김희선 등이 독립군의 모집을 위하여 煙臺로 갔다가 체포됨으로써²⁴¹⁾ 즉각적인 독립전쟁론도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국권피탈’ 이후 국내에 잔류한 신민회 간부들은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한 韓人의 집단적인 서간도 이주를 결정했으며, 1910년 가을 양기탁·이동녕·朱鎮洙 등은 만주일대를 비밀리에 답사하여 독립군기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한인집단이주 준비를 진행하였다. 1910년 12월에 양기탁·안태국·주진

238) 尹炳堯, 앞의 글, 36쪽.

239)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 研究》(一志社, 1990), 261~263쪽. 윤경로는 靑島會議에서는 구체적인 독립전쟁론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반해, 인용하는 안창호·이갑 등이 신한민촌과 무관학교의 건설을 주장했다고 보고 있다(신용하, 〈신민회의 창건과 그 국권회복운동〉(하), 161쪽).

240) 島山紀念事業會, 《續編 島山安昌浩》, 〈李剛回顧談〉, 147~148쪽.

241) 주요한, 《安島山全書》부록, 〈安昌浩豫審訊問記補遺〉, 897쪽.

수·이승훈·김구·이동녕 등은 신민회 전국간부회의를 열고, ① 국내에서는 서울에 都督府를 두고 각도에는 統監을 두어 비밀리에 국민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할 것, ② 국외에서는 서간도 通化縣 부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독립군 기지를 건설하고 기회가 오면 독립전쟁을 벌일 것, ③ 독립군기지 건설을 위하여 국내로부터 계획적인 집단이주를 시행할 것 등을 결정하였다.²⁴²⁾

이와 같은 신민회의 독립전쟁전략이 결정된 직후부터 韓人의 서간도 이주 사업이 급속히 진전되어, 국내에서 이주민 모집과 자금 확보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한인의 국외 집단이주에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였다. 그러면 신민회의 재정 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앞에서 보았듯이 신민회는 그 조직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자금확보에 주력했고, 국외 이주민에게 자금 휴대를 권장하고 있었다. 1910년 4월에 열린 청도회의에서는 독립군기지 건설에 소용되는 자금을 李鍾浩가 우선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토지를 매입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일 개인에 의해서 충당될 수 없는 막대한 규모의 것이었다. 그러므로 1910년 가을 양기탁의 집에서 열린 신민회의 ‘西間島 移住會議’에서는 단체이주를 시행하되, 될 수 있는 대로 1인당 金 100원 이상을 휴대할 수 있는 이주민을 우선적으로 모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각도 대표로 양기탁(경기도·三南)·김구(황해도)·안태국(평안남도)·이승훈(평안북도)·주진수(강원도)를 선정하여, 이주민 모집과 함께 군자금 확보의 책임을 맡게 되었다. 그 외에 신민회 회원들이 솔선수범하여 군자금을 마련했으며, 주진수 등은 가산을 전매하여 이주 준비를 하기도 했다.²⁴³⁾

그리하여 신민회 간부 및 회원들은 1910년 12월부터 이동녕과 이회영 5형제, 주진수의 가족들 및 애국청년들의 단체이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신민회는 1911년 봄에 서간도로 대규모의 한인 집단이주를 실행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911년 1월 ‘安岳事件’에 의하여 신민회 중앙간부와 황해도 지회 회원들이 대거 검거되었고, 9월에는 데라우치(寺內正毅) 총독 암살미수

242) 愼鏞廈, 〈新民會의 創建과 그 國權恢復運動〉(《韓國民族獨立運動史研究》, 乙酉文化社, 1985), 109~111쪽.

243) 愼鏞廈, 위의 글, 111~112쪽.

로 날조된 ‘105人事件’에 의하여 신민회 회원 600여 명이 다시 체포되는 등 일제의 탄압으로 인하여 독립군기지 건설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었다.²⁴⁴⁾ 그러나 ‘국권피탈’을 전후하여 애국계몽인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북간도와 서간도, 그리고 연해주에 독립운동기지가 건설되어 갔다.

(3) 독립운동기지의 건설

애국계몽가들에 의하여 국외 독립운동기지가 가장 먼저 착수된 곳은 북간도였다. 1906년 8월 이상설·이동녕·鄭淳萬·呂準·朴楨瑞 등 애국계몽인사들은 북간도의 중심지 연길현 용정촌에 瑞甸書塾을 설립하였다. 서전서숙은 甲班(20명)·乙班(20명)·丙班(34명) 3개 반을 운영했으며, 여기에서 근대교육과 민족주의교육을 실시하여 일종의 독립운동자 양성소라고 할만 했다. 그러나 서전서숙은 1907년 이상설이 헤이그밀사로 떠나면서 재정난을 겪게 되고, 일제의 탄압을 당하여 1908년 가을에 폐속하고 말았다.²⁴⁵⁾

서전서숙 폐속 후 金耀淵은 박정서·여준 등 서전서숙 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용정촌에서 40여 리 떨어진 화룡현 장재촌에 明東書塾을 설립하였다. 이때 신민회는 이동녕과 이동휘를 고문, 鄭載冕을 단장으로 하고, 기독교 전도사와 의사 및 재무담당자를 포함하는 북간도교육단을 파견하였다. 평양 숭실학교 출신으로 보광학교 교사였던 정재면은 명동서숙을 明東學校로 개칭하고, 교육이념을 독립정신에 두는 근대학교, 기독교학교로 개편했으며, 明東敎會를 설립하여 선교활동도 벌였다. 명동학교는 문무쌍전의 철저한 민족주의 교육을 실시하여 이 지역 민족교육의 본산이 되었다.²⁴⁶⁾

명동학교의 기반이 잡히게 된 뒤, 김약연·정재면 등 명동학교 관련 민족운동자들은 북간도 한인사회를 조직하여 독립운동을 추진할 자치기구로 ‘墾民自治會’를 조직하였다. 간민자치회는 일본측의 한인 자치활동을 방해하려는 책동 때문에 ‘墾民敎育會’(1909)로 개칭되었다. 간민교육회는 연변 局子街

244) 愼鏞廈, 위의 글, 112~113쪽.

245) 尹炳奭, 〈1910年代 西北間島 韓人團體의 민족운동〉(《國外韓人社會와 民族運動》, 一潮閣, 1990), 14~16쪽.

246) 尹炳奭, 〈滿洲와 沿海洲의 韓人社會와 抗日結社, 民族敎育〉(《獨立軍史》, 지식산업사, 1990), 65~68쪽.

(연길)에 본부를 두고, 북간도 전역에 지회와 다수의 학교를 세웠으며, 모범촌운동, 문맹퇴치운동, 생산·판매·소비조합운동을 벌여 독립운동의 기반을 조성하였다.²⁴⁷⁾

1909년부터 민족운동자들은 북만주 소만국경 지대 密山府 경영에 착수하였다. 이상설·金學萬·정순만·李承熙 등은 이곳의 황무지를 사들여 韓興洞을 세우고 한민학교를 설립했으며,²⁴⁸⁾ 1910년대 초에 李甲 등 신민회 회원들은 밀산현 蜂密山子에 密山武官學校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또한 1912년에 신민회 간부 이종호 등은 王清縣 羅子溝에 大興學校를 설립했고, 1913년에 이동휘·이종호·장기영 등은 이곳에 東林武官學校(大甸學校)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²⁴⁹⁾

‘한일합방’ 직후 서간도에서도 독립군기지가 건설되었다. 1911년 이동녕·이회영 등 신민회 간부들은 봉천성 柳河縣 삼원보에 新韓民村을 건설하고, 자치기구로서 耕學社를 조직했으며, 근대교육과 군사교육의 실시를 위한 신홍강습소(뒷날의 신홍무관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다음 해에 홍작과 水土病 때문에 그들은 통화현 舍泥河로 독립운동 근거지를 옮기고, 경학사를 강화하여 扶民團을 조직했으며, 신홍강습소를 新興學校로 개칭하였다. 신홍학교에는 4년제 중학교과정의 본과가 있었고, 6개월 과정의 장교반과 3개월 과정의 하사관반이 있었다. 또한 신홍학교 교직원과 졸업생 중심의 독립운동단체인 新興學友團이 조직되어 있었다.²⁵⁰⁾

1914년에 부민단과 신홍학우단은 신홍학교에서 양성한 독립군 385명을 근간으로 하여 ‘白西農莊’을 건설하였다. 백서농장은 백두산 서쪽 산기슭 사방 200리의 고원지대 평야에 건설한 兵農一致의 독립군 군영이었다. 金東三을 莊主로 하는 백서농장은 莊主·訓讀·총무·醫監·경리·需品·외무·農監·교관·교도대장·1중대장·2중대장·3중대장·규율대장 그리고 각 小隊의 부서가 있었다. 백서농장은 3·1운동 당시까지 수천 명의 독립군을 양성하였

247) 尹炳旼, 위의 글, 69~70쪽.

248) 尹炳旼, 앞의 글(1990), 16~17쪽.

249) 愼鏞廈, 앞의 글(1985), 119~121쪽.

250) 愼鏞廈, 위의 글, 113~117쪽.

元義常, 앞의 글, 238·240~241쪽.

다고 한다.²⁵¹⁾

한편 ‘한일합방’을 전후하여 露領 연해주에서도 독립군기지 건설운동이 전개되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는 이미 1905년에 한인사회의 공동이익을 목적으로 韓民會가 설립되었고, 1907년에는 대한청년학우회가 설립되었다. ‘합방’ 직전에 유인석·이범윤·홍범도를 중심으로 편성된 13道義軍은 연해주에 망명정부의 수립을 고종에게 상소한 바 있었으며, 의병계열과 애국계몽계열의 인사들을 망라하여 이루어진 聲明會는 각국 정부에 ‘한일합방’의 무효를 선언하고 청년결사대를 조직하여 일본인거류지를 습격하기도 하였다.²⁵²⁾

1911년 의병계열과 애국계몽계열의 연합으로 조직된 勸業會는 연해주 지역의 민족운동을 조직하고 지휘하였다. 권업회는 한인들의 교육과 실업을 장려하는 한편, 한인들의 이주 개간을 표방하고 러시아 총독과 교섭하여 흑룡강·송화강 합류지점에 光復軍 軍營地를 확보했으며, 권업회 중심의 민족운동자들은 1914년에 이상설을 정통령, 이동휘를 부통령으로 하는 大韓光復軍政府를 세워 독립전쟁을 준비하였다.²⁵³⁾

요컨대 신민회의 독립전쟁론은 애국계몽운동과 항일의병운동을 발전적으로 종합한 전략으로서, ‘합방’ 이후 여러 민족운동세력의 기본적인 독립운동 전략이 되었다. 그리고 ‘합방’을 전후하여 애국계몽가들을 비롯한 민족운동자들이 북간도·서간도·연해주 지역에 한인 마을과 한인 자치단체를 만들어 한인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무수한 학교 특히 무관학교를 설립하여 독립운동가와 독립군을 양성함으로써, 3·1운동 이후 대규모 독립군부대에 의한 항일무장투쟁의 기반을 마련했던 것이다.

〈柳永烈〉

251) 尹炳夷, 〈白西農莊과 大韓光復軍政府〉(《獨立軍史》), 94~96쪽.

박 환, 앞의 책, 341쪽.

252) 尹炳夷, 〈獨立軍基地와 聲明會 宣言書의 意義〉(《獨立軍史》), 50~51·60~61쪽.

253) 尹炳夷, 〈1910年代 沿海洲地方에서의 韓國獨立運動〉(《國外 韓人社會와 民族運動》), 199~211쪽.

4. 105인사건

1) 사건조작 배경

105인사건¹⁾은 일제가 한국을 병탄한 직후(1911~1912년) 국내 반일 민족세력을 제거시킬 의도에서 날조한 한민족 대탄압사건이다. 사건 당시 사건 명칭은 ‘데라우치(寺內正毅) 總督謀殺未遂事件’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 사건을 ‘105인사건’이라 지칭함은 이 사건에 강제 연루되었던 700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제1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은 사람이 105인이었기 때문이다.

105인사건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업적을 종합, 정리하여 사건의 전모를 개관하면 아래와 같다.²⁾ 먼저 사건의 발단 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05인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합방’ 직후 일제가 향후 조선을 자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개편하기 위해 포악한 무단통치가 자행되던 때이자, 국권 강탈에 대한 한인들의 분노와 반일감정이 고양되던 시기였다. 따라서 일제는 향후 예상되는 한인들의 항일 민족운동을 사전에 방지, 제거하는 일을 당면한 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었다. 일제가 병탄에 앞서 추진한 무자비한 무장의병 토벌작전³⁾

1) ‘105人事件’에 관한 명칭은 여러 가지이다. 사건 당시 언론에서는 ‘朝鮮陰謀事件’·‘宣川陰謀事件’·‘新民會事件’ 그리고 영문으로는 ‘The Korean Conspiracy Case’라 불렀다. 그 후 정식 재판이 시작되자 공식적인 사건명은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사건 명칭이 시사하듯 사건 당시에는 이 사건의 ‘陰謀性’과 ‘謀殺未遂’ 부분이 강조되었다.

2) 지금까지 105인사건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姜在彦, 〈新民會의活動と百五人事件〉(《朝鮮の開化思想》, 岩波書店, 1980).

白樂濬, 〈한국교회의 꾀박—특히 ‘寺內總督暗殺未遂陰謀’의 陰謀에 대하여〉(《神學論壇》 7, 1962).

鶴本幸子, 〈所謂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 10, 1973).

姜渭祚, 《日本統治下 韓國의 宗教와 政治》(대한기독교서회, 1977).

尹慶老, 〈百五人事件의 一研究—起訴者 122人의 人物分析을 中心으로〉(《漢城史學》, 創刊號, 1983).

——,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3) 1909년 9월부터 2개월간 자행되었던 이른바 ‘南韓地域匪徒大討伐作戰’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1907년 8월 이래 ‘합방’되기까지 일군과 무장의병 사이의 ‘義兵

이며, 각종 법규를 공포⁴⁾하여 구국계몽운동을 탄압하였던 것은 모두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합방’을 전후하여 張仁煥·田明雲의 스티븐슨사살사건(1908. 3), 安重根의 이토 히로부미 포살사건(1909. 10), 李在明의 李完用포살미수사건(1909. 12) 등 국내외에서 일련의 암살, 테러사건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서북 출신자이자, 기독교인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일제측은 기독교 세력이 강고한 서북지역을 특별히 주목하였고 이들 배후의 비밀결사를 찾는 데 정보망을 총동원하였다. 그러나 그 실제 곧 신민회의 실체를 포착하지 못한 일제는 이른바 ‘총독모살미수사건’이라는 허구적인 날조 사건을 조작하여 서북지역의 반일민족세력과 그 조직체인 신민회의 실체를 파악, 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⁵⁾

일제가 105인사건을 조작한 이면에는 이밖에도 당시 반일의식이 강했던 서북지방의 기독교 교세의 확장과 그들의 배후세력으로 지목한 미국 선교사들을 축출하려는 데 또한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 문제는 향후 미·일간의 심각한 외교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았다. 실제 이 사건에 다수의 외국인 선교사들을 연루시킴으로써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 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일제가 이렇듯 ‘합방’ 직후 미국을 상대로 모험을 자행했던 것은 1910년을 전후해 급속히 냉각되었던 미·일간의 관계변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 만주 시장권과 만주 철도 경영권 문제 등을 놓고 이 시기 미·일간의 갈등과 대립이 점차 깊어갔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이른바 ‘황색 인종에 대한 배척운동’이 일어나자, 이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게 된 일부 일본인 가운데는 미국을 적대시하는 반미운동의 조짐도 보였으며,

戰爭’은 심할 때는 1년에 1,451회에 참가 의병수는 69,832명에 달하였다 한다(朝鮮總督府, 《朝鮮暴徒討伐誌》, 1922, 부록 3).

崔永禧, <3·1運動에 이르는 民族運動의 源流>(《3·1運動 50周年紀念論文集》, 東亞日報社, 1969), 34~35쪽.

4) 統監府 설치 후 新聞紙法; 1907年 7月·出版法; 1909年 2月·保安法; 1910年 9月·私立學校令; 1908年 8月·學會令; 1908年 9月 등을 제정 사회단체 활동을 통제했다(《朝鮮法令輯覽》上).

5) 小森德治, 《明石元二郎》(上)(臺北臺港日 日新報社, 1928), 452쪽.

여기에 당시 양국 언론이 향후 미·일간에 전쟁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논지의 사실과 기사 등을 게재함으로써 미·일 양국간의 긴장관계가 고조되었다.⁶⁾

일제가 105인사건을 ‘총독모살미수’라는 ‘大逆事件’의 성격으로 사건을 날조한 배경에는 당시 일본 정부 내부의 권력구조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다. 1908년 7월 비교적 자유주의를 표방하였던 사이온(西園寺) 내각이 일본내 사회주의 세력을 방임했다는 이유 등으로 물러난 후 가츠라(桂太郞) 내각이 들어섰다. 가츠라 내각은 1910년 5월 ‘대역사건’이라 하여 고오도쿠(幸德秋水) 등 수백 명의 사회주의자들을 검거하고, 그 가운데 24명을 ‘天皇暗殺謀議大逆罪’로 몰아 1911년 1월에 기소하고 고오도쿠 등 12명을 즉시 사형에 처한 사건이 있었다.⁷⁾ 이 사건은 105인사건을 일제가 조작하기 직전 본국에서 있었던 사건으로서 시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건의 죄명, 그리고 사건의 성격이 ‘반국가적’ 인사에 대한 탄압사건이었다는 점 등에서 두 사건 사이에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 105인사건을 가리켜 ‘조선판 대역사건’이라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이다.⁸⁾

2) 사건조작 경위와 사건 개요

이 사건을 ‘테라우치 총독 모살미수사건’이라 지칭한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사건은 일제의 강압적인 ‘합방’에 반대하는 반일적인 한인들이 총독을 암살하려하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을 날조, 조작한 총독부측 주장에 따르면 사건 진말은 이러하다. 1910년 음력 8월 중 테라우치 총독이 압록강 철교개통식 축하를 위해 서북지방 시찰에 나선다는 이른바 ‘總督 西巡’의 풍설이 나돌았다. 이같은 소문에 접한 서울 신민회 중앙 간부, 尹致昊·梁起鐸·安泰國·李昇薰·玉觀彬 등이 서울 서대문의 林崑正 집

6) 姜東鎭, 《日本近代史》(한길사, 1985), 224~226쪽.

7) 姜東鎭, 위의 책, 237~238쪽.

8) 鶴本幸子, 〈所謂 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論文集》10, 1973), 1~2쪽.

에 모여 수차에 걸친 밀회를 갖고 총독 암살계획을 모의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금일의 상태를 당해서 한 사람도 불평불만하는 자가 없다는 것은 조선 인민 전체가 병합에 悅服하는 것이 되어 외국의 동정도 받을 수 없으니, 이로써 인민을 선동하여 병합에 복종하지 않음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근일 중 데라우치 총독이 평안남북도를 순시한다는 풍설이 있으니, 이 기회에 총독을 암살하여 병합 반대의 기염을 세계에 알리자”고 총독암살 모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그 실행 방법은 평소 서북지방민 중 배일의식이 강한 사람들을 모아 총독이 서순하는 京義線 연변의 8개 도시, 平壤·宣川·定州·納清亭·郭山·鐵山·車輦館·新義州 등의 역전에 환영객으로 가장하여 총독을 암살키로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거사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대거 관련되어 이 사건을 사주하고 지휘하였다는 것이다. 후술하거니와 외국인들이 이 사건에 연루됨으로써 105인사건이 미국을 비롯한 구미 언론의 주목을 받는 세계적 사건으로 확대되었고 결과적으로 일제의 반인륜적인 폭압적 무단통치의 실상만 만천하에 공개한 꼴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총독부측 주장에 따르면 서북지방의 반일인사 특히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의 사주를 받아 총독 암살을 몇 번에 걸쳐 시도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첫번째 시도는 1910년 음력 8월 중 총독 서순이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암살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총독 서순이 지연되어 결행이 미루어지다가 그 해 음력 10월 29일부터 11월 1일(양력 12월 26일~28일) 사이 경의선 주요 도시를 거쳐 압록강 철도개통식에 참석한다는 정확한 정보에 접하자, 모의자들은 선천·신의주 등 여러 도시로 나누어 권총 등 무기를 소지하고 환영객으로 가장하여 역전 환영식에 나아가 총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경의 삼엄한 경계로 결국 ‘암살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총독모살미수사건’을 일제측이 알게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고 한다. 즉 이 사건의 조작 실무를 맡았던 경무총감부 警視 高古쿠(國友尙謙)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11년 음력 7월 26일, 평안도 일대의 반일인사들이 총독의 서순 때 그를 암살하려 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던 중 평양 등 서북지방의 주요 도시에서 기독교계 학교의 교사와 학생, 그리고 선교사 스왈른(W. L. Swallen, 蘇安論), 맥쿰(McCune, 尹山濫), 베어드(W. M. Baird, 裴緯亮) 등이 배후에서 사주하였다는 정보를 접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일에 가담한 구체적인 한인을 찾을 수 없던 중 강도사건으로 붙잡힌 李載允이라는 자가 이 모의에 가담한 사실을 자백함으로써 우연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재윤과 평소 잘 아는 위장된 불평자를 접촉시킨 결과 그 사실이 재확인되어 그를 서울로 압송, 정식 취조함으로써 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고 따라서 사건 모의자들이 줄줄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⁹⁾

이상과 같은 일제의 주장은 사건구성 자체가 매우 영성한 허구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제는 반인륜적인 가혹한 고문방법을 동원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이를 유일한 근거로 사건을 조작, 7백여 명의 피의자 가운데 주모자로 지목한 123명을 기소, 재판에 회부하였던 것이다.

3) 재판 경위와 사건의 허구성

105인사건의 정식 재판은 1912년 6월 2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사건 피의자들을 구속한 지 9개월만에 비로소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123명의 기소자를 한꺼번에 재판정에 세울 수 없어 기존 재판정 공간을 늘리는 재판정 확대공사가 이 사건 재판을 위해 신축되기도 하였다.¹⁰⁾

이날 첫 공판은 오전 내내 기소자 123명 전원의 신상확인과 검사의 기소장 낭독으로 시간을 보낸 후 오후 2시 30분부터 개인별 訊問이 시작되었다. 첫 신문자는 信聖中學校 체육교사로 재직중 피의자로 기소된 申孝範이었다.

9) 國友尙謙, 《百五人事件資料集》2-不逞事件ニ依ツテ觀タル朝鮮人一, (高麗書林, 影印本, 1986), 19~23쪽.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研究》, (一志社, 1990), 20~21쪽.

10) 재판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 7,000원의 경비를 들여, 가로 9m, 세로 25m 규모로 재판소를 증축하였다(The Korean Conspiracy Trial, 1912, p. 1, Kobe, Japan. ; 鮮于燾, 《民族의 受難》, 愛國서울同志會, 1949, 125쪽).

재판장은 그에게 “총독 암살을 주도한 것이 신민회의 목적이며 이 단체의 회장이 윤치호인가”를 물었다. 이에 신호범은 “전혀 아는 바 없다”고 답하였다. 그러자 “그러면 왜 경찰신문과 검사정에서 이 모든 사실을 시인했는가”라고 재판장이 다그쳤다. 이에 신호범은 “그것은 경찰의 가혹한拷問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당시 자행된 잔인한 고문 사례를 조목조목 폭로하기 시작하였다.

첫 피의자의 이같은 태도는 이후 모든 피의자들의 진술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金一濬¹¹⁾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들이 하나같이 경찰과 검사신문에서 허위 사실을 시인한 것은 가혹한 고문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사건을 기소한 검사측은 당황했다.

이보다 앞서 있었던 安岳事件(安明根事件) 등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곧 검사측은 “피고들이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백을 번복하기 위한 상투적 변명으로 귀담아 들을 것이 못된다”고 하며 일소에 붙일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후 재판과정에서 피의자들이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는 항변이 계속되었지만 그것만으로 재판이 유리하게 진행될 형편은 못되었다. 말하자면 사건의 허구성을 증명할 만한 결정적인 물증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재판은 절대 불리하였다.

그러나 곧 이어 사건의 허구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졌으니, 바로 安泰國의 진술에서였다. 즉 안태국은 자신의 기소장에 “안태국은 총독암살을 단행키로 한 바로 전날인 1910년 12월 26일 평양에서 하루밤을 자고 27일 정주에서 동지 60명을 인솔하여 새벽 6시에 선천역으로 갔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던 것이다. 즉 안태국이 평양과 선천에 있었다는 12월 26일밤 자신은 서울 明月館에서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만기로 풀려난 柳東說·梁起鐸·李昇

11) 공판 과정에서 총독암살 모의 사실을 시인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김일준 뿐이었다. 그는 훗날 어차피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그럴바에는 총독을 암살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욱 당당할 것 같아 총독 암살에 필요한 권총을 長春에서 사왔다는 등 거짓을 시인했다고 토로하였다(윤경로, 앞의 책, 137쪽).

薰 등 7인의 위로회 모임을 주선하였다고 하면서 그날 명월관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받은 요리대금 27원 영수증과 그 이튿날(12월 27일) 광화문 우체국에서 평양의 尹聖運에게 타전한 ‘南崗下去出迎 泰國’이란 전보문 그리고 27일 새벽 6시 정주에 60명을 대동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그날 정주역에 하차한 승객의 숫자를 확인해 줄 것을 증거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며 “신이 아닌 내가 어떻게 같은 시간에 서울에도 있고 평양에도 있다는 말인가. 이 안태국은 서도 죄요, 앞아도 죄란 말이나. 생각해 보아라. 백여 명이 권총을 소지하고 총독 하나를 죽이기 위해 여러 곳에서 모의했다는데 어떻게 딱총 소리 한방 없었는가. 이 모든 것을 시인했던 것은 악형에 못견딘 고문에 의한 허위사실일 뿐이다”라며 재판부를 질타하였다. 이상의 안태국의 주장은 곧 사실로 밝혀졌다. 영수증과 전보문이 확인되었으며 그날 정주역에 하차한 승객은 9명에 불과했다.

이상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제시되자 재판정은 술렁이었고 결국 재판장은 휴회를 선언해야만 했다. 그러나 곧 재판을 속개한 재판장은 “이상의 증거물은 모두 기각한다”고 억지 판결을 하였다. 그러자 오구보(大九保) 변호사가 나서 본 사건은 사건 구성상 의심이 짙으며 재판 역시 편파적임을 지적 ‘재판기피신청’을 제기하였다. 재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고 따라서 재판 심리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37일만에 속개된 15회 공판에서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제출한 각종 증인신청과 증거물 요구를 “모두 불필요하다”고 기각하고 몇 번에 걸친 일방적 재판을 거쳐 1912년 8월 30일 21회 공판에서 123명의 기소자 중 李昌植 등 18인¹²⁾을 제외한 105인에게 검사측이 구형한 형량 그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5인의 명단과 형량은 아래 <표 1>과 같다.

12) 기소자 123명중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李昌植 외에 金龍煥 · 李圭葉 · 李順九 · 金仁道 · 崔瑞璨 · 金成奉 · 金泰軒 · 白夢良 · 李在熙 · 金龍善 · 鮮于燾 · 金順道 · 卓昌浩 · 李俊英 · 金玉鉉 · 李在潤 · 金應錄 등 18人이다(《朝鮮陰謀事件》, 82쪽).

〈표 1〉

105인의 명단과 형량

형량	명	단	계
10년	尹致昊, 梁起鐸, 林蚩正, 李昇薰(寅煥), 安泰國, 柳東設		6명
8년	玉觀彬, 張應震, 車利錫, 羅一鳳, 邊麟瑞, 催叡恒, 梁濬明, 金一濬(俊), 鮮于燁, 鄭泰種, 催德潤, 李溶華, 林罔燁, 催聖柱, 洪成隣, 吳熙源, 李基唐, 宋子賢		18명
6년	李德煥, 李春燮, 金東元, 金斗和, 尹聖運, 鄭益魯, 安慶綠, 申尙昊, 申孝範, 張時郁, 洪成益, 車均高, 李龍赫, 姜奎燦, 梁旬伯, 李鳳朝, 魯孝郁, 金昌煥, 魯晶璫, 安 濬, 朱賢則, 金益謙, 李昌錫, 李泰建, 催周杙, 金燦五, 趙德燦, 李明龍, 任道明, 白夢奎, 李根宅, 吳學洙, 地尙周, 金時漸, 鄭元範, 劉學濂, 張寬善, 金昌鍵, 白用錫		39명
5년	吳大泳, 玉成彬, 金應祚, 尹愿三, 徐基豐, 安世桓, 鄭周鉉, 梁濬熙, 孫廷郁, 鄭德燕, 李東華, 李正燐, 金賢軾, 車熙善, 李廷淳, 羅奉奎, 白日鎮, 洪規旻, 車永俊, 吉鎮亨, 趙永濟, 姜鳳羽, 白南俊, 吳宅儀, 片康烈, 羅昇奎, 安聖濟, 金善行, 金溶燁, 崔濟奎, 崔聖民, 李載允, 李枝元, 朴尙薰, 朴贊亭, 林秉行, 李秉濟, 金鳳洙, 金龍五, 羅義涉, 金應鳳(雲泉), 安光浩		42명

그러나 이상의 1심 판결에 105인은 모두 불복, 상급법원(경성 복심법원)에 상고하였다. 이 사건 피의자들의 후견인 역할을 한 외국인 선교사들이 주선하여 선임한 변호인단이 이 일에 나섰다. 외국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혐의자로 지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점, 그래서 이 사건이 일제의 대대적인 기독교 탄압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사건에 임하고 있었던 터였다. 우선 선교사들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본국 선교본부와 세계언론 및 미국 정부에 알리는 한편 1심 재판이 열리기에 앞서 대규모의 변호인단¹³⁾을 구성하여 재판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제1심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단은 이 사건의 허구성과 법률적 위법성 등을 문제삼았으니, 재판과정에 변호사들이 제

13) 105인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변호사들은 당시 일본 본국에서 大正 Democracy 분위기하에서 민권적 변호사로 이름을 떨치고 있던 鵜澤總明・大久保雅彦・花井卓藏・小川平吉・高橋章之助・三宅長策・梶虎之助・中村時章・中野俊明 9인의 변호사와 韓人 변호사로서는 張燾・權燦采・金正穆・李基煥 변호사였다.

기한 주요 변론과 이의 제기 내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管制違’ 문제였다. 즉 1심에서 이 사건을 ‘謀殺未遂罪’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그렇다면 이는 〈형법〉 제77조, 제79조에 해당하는 ‘內亂罪’로서 당연히 〈재판소구성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최고법원인 高等法院의 관할하에서 재판이 진행되어야 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 관할상의 違法임을 지적했던 것이다. 검사측의 공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公訴不受理申請’을 제기하였다. 즉 이 사건이 실로 ‘모살미수죄’에 해당하는 내란죄에 속한다면 이는 처음부터 최고법원인 고등법원에서 다루었어야 하므로, 따라서 관할위의 위법을 범한 재판상의 위법이라는 점을 들어 재판의 부당성을 문제삼았던 것이다.

둘째, 법률 적용상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일제측이 이 사건에 적용한 법조문은 대한제국 때 제정된 《刑法大全》 가운데 제473조의 ‘謀殺犯’ 조항과 동법 제86조의 ‘未收罪’ 조항이었다. 즉 “人을 謀殺한 者는 造意한 者와 下手나 助力한 者는 并히 絞에 處히디 已行만하고 下手나 助力이 無한 者는 一等을 減함이라”(《刑法大全》 제473조(謀殺犯))와 “죄를 범하려하고 準備까지 하거나 其事는 已行하였으디 其意外의 障碍나 舛錯됨을 因하여 범죄에 未及한 자를 未遂犯이라 함이라”(《刑法大全》 제86조(未遂犯))¹⁴⁾이었다. 이 사건은 ‘병합’된 이후의 사건이므로 마땅히 일본 형법이 적용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무거운 舊法인 《형법대전》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지만¹⁵⁾ 이보다 검찰측의 주장대로 과연 이 사건이 ‘모살 미수범’에 해당하는가 하는 점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말하자면 검찰측 주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謀殺未遂犯’이 아닌 ‘謀殺中止犯’에 해당할 뿐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를 한인 변호사 李基燦은 이렇게 주장하였다. “피고들이 데라우치

14) 〈官報〉(14) 광무 9년 4월 29일, ‘부록’.

張憲編, 《新舊刑事法規大全》 하권 참조.

15) 日帝는 1912년 3월 制令 第1號로써 〈朝鮮刑事令〉을 제정, “... 朝鮮에서는 특수한 殺人強盜 등의 범죄가 많고 특히 그 犯罪狀이 극히 잔인한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조선인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內地法을 적용함은 치안의 保持上 적합치 않다고 인정되어 조선인의 살인강도 등의 범죄에 한해서는 당분간 《刑法大全》의 효력을 有하도록 한다”고 하여 구법인 《刑法大全》 법조항을 105인 사건에 적용하였다.

총독의 암살을 모의하고 결정했으나 결사의 동지를 얻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던 점을 인정했으므로 법률상 하등의 죄가 될 수 없다. 따라서 《형법대전》 제473조 등의 법률조항을 적용,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으로 단순한 ‘모살중지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⁶⁾

셋째, 이 사건에 《형법대전》의 ‘모살죄’를 적용하고 있음도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말하자면 설사 “이 사건이 朝憲紊亂의 목적에서 비롯되었으며, 또 많은 사람의 합동력에 의하여 기도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폭동을 일으킬 의사가 없었고, 단지 寺內總督 1인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데 지나지 않았다고 할진대 … 나타나지도 않은 폭동에 대하여 (모살죄 법률조항)을 적용, 처단하였음은 凝律의 錯誤”라고 하여, ‘모살죄’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과 이의를 제기하였다.¹⁷⁾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보듯이 변호사들의 변론은 근본적으로 105인사건의 허구성을 파헤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즉 ‘총독모살미수사건’ 자체가 가공적인 허구의 사건이었음을 밝히기 보다는 재판상의 문제점과 법률상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 머물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변호인단 변론을 통해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의 위법성이 충분히 드러났으며, 그 결과 제2심 공판(1912. 11. 26~1913. 3. 20, 52회 공판)에서 제1심 때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 중 6인을 제외한 99인이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또한 1913년 10월 9일 최종심인 고등법원에서 “피고 등이 다른 결사의 동지를 구하여 범죄를 실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따라서) 피고 등이 범죄행위를 수행코자 하였지만 실행하지 못하였다”¹⁸⁾고 판결함으로써 사실상 ‘모살죄’를 제외한 ‘미수죄’ 부분만을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재판상의 승리를 거두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된 윤치호·양기탁·안태국·임치정 5인에게 징역 6년과 옥관 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¹⁹⁾

16) 《百五人事件資料集》1—寺內朝鮮總督暗殺未遂被告事件一, 〈李基燦上告追加趣意書〉(高麗書林, 영인본, 1986), 259~260쪽.

17) 위의 책, 〈高橋章之助上告趣意書〉, 171쪽.

18) 위의 책, 〈高等法院最終判決文〉, 399~400쪽.

19) 그러나 실제 이들 6인에 대해서도 ‘특별사면’ 형식으로 1915년 2월 12일 사면

4) 사건 연루자의 수난과 사회경제적 성향

105인사건이 사건 당시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이 사건이 기독교박해사건이라는 점 외에도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가혹한拷問을 받았다는 점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조작과정에서 총독부 일경들이 자행한 반인륜적인 고문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따라서 동양의 유일한 '문명국'이라고 자랑하던 일제의 잔혹성이 드러났던 것이다.

일제가 이 사건 조작을 위해 피의자 체포에 나선 것은 1911년 음력 9월 3일부터였다. 총독의 서순 때 그를 암살하려 하였다는 정보에 접한 지 40일 뒤의 일이었다. 이날 오전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에서는 아침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교실로 들어가려는 시간에 갑자기 일경이 나타나 교사 7인과 학생 20명 등 27명을 포승과 수갑에 채워 서울로 압송하였다. 그 후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일어났다. 이들을 검거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취조도 없이 갇혀 있다가 그해 음력 12월 7일 서울로 압송, 경무총감부 제1헌병대 유치장으로 이첩되면서 본격적인 신문과 고문이 시작되었다. 신문은 악의에 찬 공갈과 위협, 동시에 곤봉으로 사정없이 온몸을 후려갈기는 고문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고문을 직접 받은 鮮于燾은 첫 심문과정에서 받은 신문과 고문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

심문을 맡은 일경의 첫 마디가 ‘네 놈은 혈기 있고 강력한 놈으로서 신민회원이다. 기독교 신자로 우리(일본)를 가리켜 왜놈 왜놈 하면서 우리말을 무엇이든지 듣지 않고 서양놈의 말이면 죽을 테라도 잘 가는 놈인 줄 안다. 너는 지난 석 달 동안 유치장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통감부에서 어떠한 악형을 할지라도 불복하자는 결심을 했다는 것도 안다’고 하면서 주먹과 곤봉으로 마구 때렸다.²⁰⁾

하였다.

20) 鮮于燾, 앞의 책, 48쪽.

이렇게 시작된 고문은 날이 갈수록 더욱 악독해졌는데, 당시 사용된 대표적인 고문 사례를 자료 《테라우치 총독 모살미수사건 공판시말서》(寺內總督謀殺未遂事件公判始末書), 선우훈의 《民族의 受難》, J. G. Dunlop의 《General Akashi and the Charges of Torture》에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2〉

105인사건 때 가해진 고문 사례

- 주먹과 구둣발로 목부분과 전신을 비벼대거나 구타하는 방법.
- 손가락 사이에 철봉을 끼우고 손 끝을 졸라맨 후 천정에 매달고 잡아당기는 방법.
- 대나무 못을 손톱과 발톱 사이에 박는 방법.
- 수십일간 완전 밀폐된 독방에 가두고 음식물을 일체 주지 않는 방법.
- 아주 추운 날 옷을 벗긴 후 수도전에 묶고 찬물을 끼얹어 얼음기둥을 만드는 방법.
- 가죽 채찍과 대나무 묶음으로 맨몸을 휘감아 갈기는 방법.
- 널판지에 못을 박아 그 위에 눕게 하는 방법.
- 양쪽 엄지 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쪽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등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단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는 방법(학춤 고문법).
- 온몸에 기름을 바른 후 인두와 담배불 등으로 단근질하는 방법.
- 참대나무를 양쪽에서 마주 잡고 위에서 아래로 훑어 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한 후 혀를 빼게 하고 氣道에 담배연기를 넣는 방법.
- 기절했을 때 종이로 얼굴을 봉창한 후 물을 끼얹는 방법.
- 1전짜리 동전 둘레 만큼의 머리카락에 몸을 매달아 머리털이 빠지게 하는 방법.
- 돌바닥에 매치는 후 머리채와 귀를 잡아 끌고 다니며 구타하다가 돌바닥에 치박는 방법.
- 코에 뜨거운 물을 붓고 거꾸로 매달거나 핑굴리는 방법.
- 입을 벌리게 하고 막대기로 석탄가루를 쑤서넣어 기절시키는 방법.
- 입에 자갈을 물리고 머리털을 선반에 잡아 맨 후 앓을 수도 설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처박아 놓는 방법.
- 여러 날 일체 굶긴 후 그 앞에서 만찬을 벌이는 방법.
- 수염의 양끝을 서로 묶은 다음 빠질 때까지 잡아당기는 방법.
- 사형집행을 가장하여 자백을 최후로 강요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포를 쏘아 실신시키는 방법

이상에서 보듯 차마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잔인무도한 고문이 자행되었다. 당시 사용된 고문방법은 무려 72종에 달하였다 한다. 이런 악랄한 고문방법은 이 사건을 조작한 장본인인 아카시 겐지로(明石元二郎)²¹⁾가 러

시아에 근무하면서 제정 러시아가 폴란드인 등 식민지 민족에 가했던 고문을 그대로 도용한 것이다.

결국 이상과 같은 가혹한 고문에 못건디어 피의자 가운데 金根滢·鄭希淳이 심문과정에서 사망하였고 全德基도 고문의 여독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이때 사용된 고문법은 잔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이 매우 교활하기도 하였다. 즉 고문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고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컨대 단근질할 때는 온 몸에 기름을 바른 후 지졌으며 천장에 매달 경우도 먼저 손가락과 손목에 붕대를 감아 상처흔적을 최소화시켰던 것이다. 즉 ‘학춤고문’의 경우 양쪽 엄지 손가락을 결박한 후 한쪽 팔은 가슴 앞으로 돌려 어깨너머로 올리고 다른 한쪽 팔은 등쪽으로 돌려 공중에 매달 후 가죽 채찍으로 갈기면 마치 학이 날개짓하듯 비명을 지르다 기절하였는데, 이 때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손가락에 붕대를 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외상을 최소화시키며 고문의 효과를 최대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술한 고문 중에서도 가장 참기 어려웠던 고문이 여러 날을 굶긴 후 그 앞에서 맛있는 음식을 들며 이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번 고문이 시작되면 3~4시간 계속되었으며, 그러기를 35일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진행되었는데 모진 고문은 순간순간 그 고통을 참아낼 수 있었으나 고문 후에 물려오는 허기짐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의 의복 속의 숨을 뜯어 먹었는가 하면, 문창호지를 씹어 먹었으며 심지어는 깔고 자던 썩은 짚을 씹어 삼키기도 했다고 한다. 그 결과 고문이 시작된 지 16일 만에 처음으로 오동나무 먹장이 빛의 도토리알 같은 검은 알변 ‘쌍둥이변’을 비로소 볼 수 있었는가 하면 몸무게가 117근(70kg)에서 73근(44kg)으로 줄어들기도 하였다고 한다.²²⁾

21) 아카시 겐지로는 105인사건의 조작을 진두지휘한 인물로 주권강점 이후(1910) 초대 조선주차헌병사령관 겸 경무총감으로 부임한 현역 육군 소장이었다. 1900년대 초 제정 러시아 주재 일본공사관에 파견되어 러시아의 교활한 통치술과 잔인한 고문방법을 익히고 있던 중 초대 총독에 부임한 테라우치(寺內正毅)의 특별지시에 따라 조선총독부 경무총감에 임명되어 러시아로부터 배워온 비밀경찰제를 모방하여 헌병경찰제를 실시하고 105인 사건을 조작하였던 장본인이었다(윤경로, 앞의 책 참조).

22) 선우훈, 앞의 책, 120쪽.

수많은 피의자 가운데 한 두 사람만을 제외한 기소자 거의 전원이 ‘총독을 암살하려 하였다’는 허위 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상과 같은 잔혹한 고문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일제가 짜놓은 각본에 따라 심문관이 일방적으로 사건내용을 열거하고 이에 대해 피의자들이 ‘아니오’, 혹은 ‘모른다’고 부인하면 ‘예’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무자비한 고문을 계속해 결국 허위자백을 받아내었던 것이다. 그러나 선우훈·洪成麟 등 끝까지 시인하기를 거부한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견디어 낼 수 있었던 힘은 신앙심 때문이었다고 한다. 이들은 참을 수 없는 고문이 가해질 때마다 “생을 저주하고 탄식하고 이를 갈면서 만난의 고통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으로 극복했던 ‘옴’(성경(구약)에 나오는 인물)과 스테반의 순교(신약에 나오는 인물)를 생각하며 “나는 내 갈 길이 있으니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 불의와 싸울 뿐이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는 별써 문제가 안 된다”는 굳은 믿음과 의지를 갖고 버텼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고통을 받은 사람은 피의자들만이 아니었다. 피의자들의 가족들도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이겨내야 했다. 특히 가장을 잃은 가정에서는 생활고로 집을 팔아야 했고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피의자 가족들이 홀어지기도 하고 함께 집단생활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다음으로 105인사건에 연루되었던 피의자들의 사회경제적 성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이들의 출신지별 분포를 보면 대체로 서북지방에 집중되어 있다. 즉 선천·정주·납청정·철산 등 평안북도 출신이 기소자 123명 가운데 89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 평북 출신자들은 신성학교·嘉明學校 교사와 학생외에 유기업·무역상·잡화상·객주업·미곡상·매약업 등 상공업 종사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는 이 지역 인사들이 이승훈을 중심으로 인백이 구성되었던 점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에 반해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남 출신자들은 27명인데 이들 대부분은 大成學校·崇實學校·日新學校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황해도 信川 출신의 片康烈·吳宅儀 그리고 윤치호·유동열·양기탁·임치정·玉觀彬 등 서울의 지도급 인사로 나누어진다.

이들의 학력은 당시 수준으로 보아 매우 높았다. 기소자 중 학력이 밝혀

진 75명의 학력을 분류해 보면 무학자는 단지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인사는 모두 일정한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 즉 吉鎮亨·邊麟瑞·鮮于懋·郭泰鐘 등은 숭실전문학교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고등학력자가 17명에 달하고 신성중학·숭실중학을 수학 또는 수학중인 자도 34명에 이른다. 이밖에 姜奎燦·吳學洙·李明龍 등 한학을 공부한 인사도 15명에 달하는 등 학력이 매우 높은 편이다. 한편 이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20세 이하의 젊은이가 12명으로 이들은 대부분 학생신분이었고, 21~30세 미만이 58명, 31~40세 미만이 36명, 41~50세 미만이 14명이고 51세 이상이 3명이다. 이중 주모자로 지목된 윤치호·양기탁·이승훈·양전백 등은 당시 40세 중반으로서 이들은 10년 뒤 3·1운동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피의자들의 종교 분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독교인이 대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중 천도교 2인(김일준·白南俊)과 천주교 2인(李基唐·安聖濟),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1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개신교인이었다. 이를 다시 교파별로 나누어 보면 장로교인이 91명으로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감리교인 6인, 조합교회교인 2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렇듯 장로교인이 다수를 차지한 것은 당시 서북지방의 기독교 교세가 장로교 중심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정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시기 서북지방의 토착자본가에 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재산정도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들 중 70여 명의 소유 재산을 알 수 있는데 이들 가운데 소유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단연 윤치호이다. 그의 재산은 20만 원에 해당하는 큰 재산을 소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당대 대표적인 대금업자였던 吳熙源이 10만 원 그리고 일본유학을 다녀온 대지주 가문의 林岡燁이 5만 원 순으로 되어 있다. 당시 사정으로는 5천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부유층에 속했는데 이들 중 5천원 이상의 소유 재산가는 위의 세 사람 외에 강규찬·김응봉·이승훈 등 8명 정도였다. 이들 자산가들은 대체로 미곡상·객주업·매약업·교사·유기상·은세공 등 대체로 자유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이밖에 사람들의 재산정도는 영세한 수준이었다. 600원 이하의 재산소유자가 태반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이들의 직업분포를 살펴보면 이 역시 매우 다양하다. 크게 상공업

· 전문업 · 농업 · 교직(학생) · 종교인 등으로 구분되는데 직업상 특색은 농업 · 유기공 · 유기상의 분야를 제외하면 대체로 근대적 업종의 종사자가 많다는 점이다. 좀더 세분화시켜 보면 학생을 포함한 교직 종사자들이 51명으로 기소자(123명)의 42%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잡화상 · 무역상 · 매약업 · 곡물상 · 언론인 · 의사 · 서적상 등 근대적 업종 종사자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직업분포와 학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은 개항 이후 새롭게 형성되어 가던 근대적 新興市民階層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들은 향후 민족지도세력으로 부상할 사회경제적 토대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었던 사회계층이었다. 일제 당국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이들을 사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제의 의도대로 되지는 않았다. 비밀결사인 신민회의 실체가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후 105인사건 연루자들 가운데 많은 인사들이 반일민족세력으로 성장하여 급기야 3·1동을 선도하고 주도한 지도력으로 연계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이상에서 살펴본 105인사건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05인의 사회경제적 성향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 3> 105인의 사회경제적 성향

이 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재산
姜奎燦	平北 宣川	40	教師(信聖)	漢學	長老教	3만원
姜鳳羽	平南 平壤	24	農業	普昌中學	"	소작
郭泰鍾	平北 宣川	30	教師(信聖)	崇實專門	"	300원
吉鎭亨	平南 平壤	22	"	崇實專門	"	주택
金東元	"	30	教師(崇實)	日本留學	"	
金斗和	"	30	教師(大成)	崇實專門	"	
金鳳洙	平北 納清亭	34	食堂業	無學	"	
金善行	"	24	鑄器業			
金時漸	平北 郭山	32	雜貨商	漢學		
金溶燁	平北 納清亭	21	"	長老教		
金龍五	"	50	鑄器業			
金應鳳(雲泉)	平南 平壤	26	賣藥業	長老教		1만원

이 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재산
金應祚	平南 平壤	51	賣藥業		監理敎	400원
金益謙	平北 宣川	25	敎師(普明)		長老敎	4~500원
金一濬	"	30	貸金業		天道敎	가옥·토지
金燦五	平北 納淸亭	22	農業		長老敎	5~600원
金昌鍵	平北 義州	42	牧師	平壤神學校	"	
金昌煥	平北 宣川	32	雜貨商	其他	"	
金賢軾	"	24	學生(信聖)	信聖中學	"	
羅奉奎	"	28	"	"	"	
羅昇奎	平北 納淸亭	21	鎗器業		"	
羅義涉	"	30	雜貨商	漢學		
羅一鳳	平南 平壤	43	敎師(大成)		組合敎	1천원
魯品璫	平北 宣川	39	雜貨商		長老敎	1천원
魯孝郁	"	36	米穀商		"	6천원
朴尙薰	平北 納淸亭	30	鎗器業	漢學		4~5천원
朴贊亨	"	49	銀細工	無學	長老敎	5천원
白南俊	平南 平壤	29	農業		天道敎	
白夢奎	平北 定州	32	雜貨業		長老敎	
白用錫	平北 義州	35	牛乳商	其他	"	1,300원
白日鎮	平北 宣川	30	學生(信聖)	信聖中學	"	
邊麟瑞	平南 平壤	32	敎師(崇實)	崇實專門	"	4천원
徐基棼	"	32	雜貨商	美國留學	監理敎	
鮮于燮	平北 宣川	30	敎師(信聖)	崇實專門	長老敎	
孫廷郁	"	26	敎師(永昌)	信聖中學	"	4~500원
宋子賢	平北 龍川	33	貿易商	漢學	"	4천원
申尙昊	平南 平壤	39	賣藥業		"	
申孝範	平北 宣川	33	敎師(信聖)		"	
安慶祿	平南 平壤	31	牧師		監理敎	가옥
安光浩	平北 義州	27	敎師(小學校)	平壤神學校	長老敎	4~500원
安聖濟	平北 納淸亭	25	裁縫業	其他中學	天主教	
安世桓	平南 平壤	36	敎師(崇實)		長老敎	400원
安 濬	平北 宣川	46	敎師(信聖)	神學	"	가옥
安泰國	平南 平壤	39	書籍業		"	300원
梁起鐸	京畿 서울	43	言論人	外國語學校	"	가옥(400원)
梁甸伯	平南 宣川	43	牧師	平壤神學校	"	
梁濬明	"	36	雜貨商		"	1천원

이 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재산
梁濬熙	平南 宣川	29	教師(小學校)	信聖中學	"	1천 원
吳大泳	平南 平壤	29	菓子業		"	
吳宅儀	黃海 信川	32	金鑛業		"	소 작
吳學洙	平北 郭山	29	"	漢學		
吳熙源	平北 鐵山	40	貸金業	漢學		10만원
玉觀彬	平南 中和	23	金鑛業	普成專門	長老教	
玉成彬	"	21	會社書記	崇實中學	"	
柳東說	京畿 서울	35	舊參領	日本留學		토지
劉學濂	平北 鐵山	29	面長		長老教	5천 원
尹愿三	平南 平壤	27	雜貨商	崇實中學	"	
尹聖運	"	38	客主業		"	
尹致昊	京畿 서울	48	教師(大成)	美國留學	監理教	20만원
李根宅	平北 郭山	29	雜貨商			
李基唐	平北 龍川	38	金鑛業		天主教	
李德煥	平南 平壤	36	貿易商		長老教	
李東華	平北 宣川	23	教師(中學校)	信聖中學	"	300원
李明龍	平北 定州	40	貸金業	漢學	"	
李秉濟	平北 納清亭	29	鑰器業			2천 원
李鳳朝	平北 宣川	39	客主業		長老教	5천 원
李昇薰(寅煥)	平北 納清亭	50	貿易商	漢學	長老教	2천석토지, 몇천 원
李龍赫	平北 宣川	26	教師(信聖)		"	
李溶華	平北 納清亭	42	貿易商	崇實中學	"	
李載允	"	22	雜貨商(信聖)	信聖中學	"	
李廷淳	平北 宣川	22	學生(信聖)	信聖中學	"	가옥
李正순	"	24	教師(小學校)		"	
李枝元	平北 納清亭	26	鑰器業	漢學		6천 원
李昌錫	平北 宣川	53	貸金業			
李春燮	平南 平壤	35	"		長老教	
李泰建	平北 宣川	29	教師			
林罔燁	平北 納清亭	28	教師(信聖)	日本留學	長老教	5만원, 5천석토지
任道明	平北 定州	30	理髮業	其他	"	밭1가리
林秉行	平北 納清亭	23	鑰器業			가옥
林崑正	京畿 서울	33	言論人	美國留學	監理教	300원
張寬善	平北 鐵山	46	牧師	平壤神學校	長老教	
張時郁	平北 郭山	26	教師			

이 름	출신지역	연령	직업	학력	종교	재산
張膺震	平南 平壤	33	教師(大成)	日本留學	組合敎	2천 원
鄭德燕	平北 鐵山	24	學生(信聖)	漢學	長老敎 監理敎 長老敎	
鄭元範	"	33	農業			
鄭益魯	平南 平壤	51	書籍業			
鄭周鉉	"	22	賣藥業			
趙德燦	平北 納淸亭	45	牧師			平壤神學校
趙永濟(文伯)	平南 平壤	25	賣藥業		"	400원
朱賢則	平北 宣川	30	醫師	醫學	"	3천 원
池尙周	平北 郭山	38	書記	其他	"	50석토지 가옥
車均高	平北 宣川	24	教師(大明)		"	
車利錫	平南 平壤	33	教師(大成)	崇實中學	"	
車永俊	平北 宣川	26	學生(信聖)	崇實中學	"	
車熙善	"	23	"	信聖中學	"	
崔德潤	"	31	教師(中學校)	信聖中學	"	5~600원
崔聖民	平北 納淸亭	49	教師(嘉明)	平壤神學校	長老敎	소작
崔聖柱	平北 定州	36	牧師			
崔叡恒	平南 平壤	36	教師(日新)			
崔濟奎	平北 納淸亭	31	鑄器業			
崔周杙	"	21	"			
片康烈	黃海 信川	22	貿易商	崇實中學	"	1천 원
洪規旻	平北 宣川	26	教師(中學校)	信聖中學	"	1천 원
洪成麟	平北 定州	37	貸金業	崇實專門	"	
洪成益	平北 宣川	32	教師(信聖)		"	

〈尹慶老〉